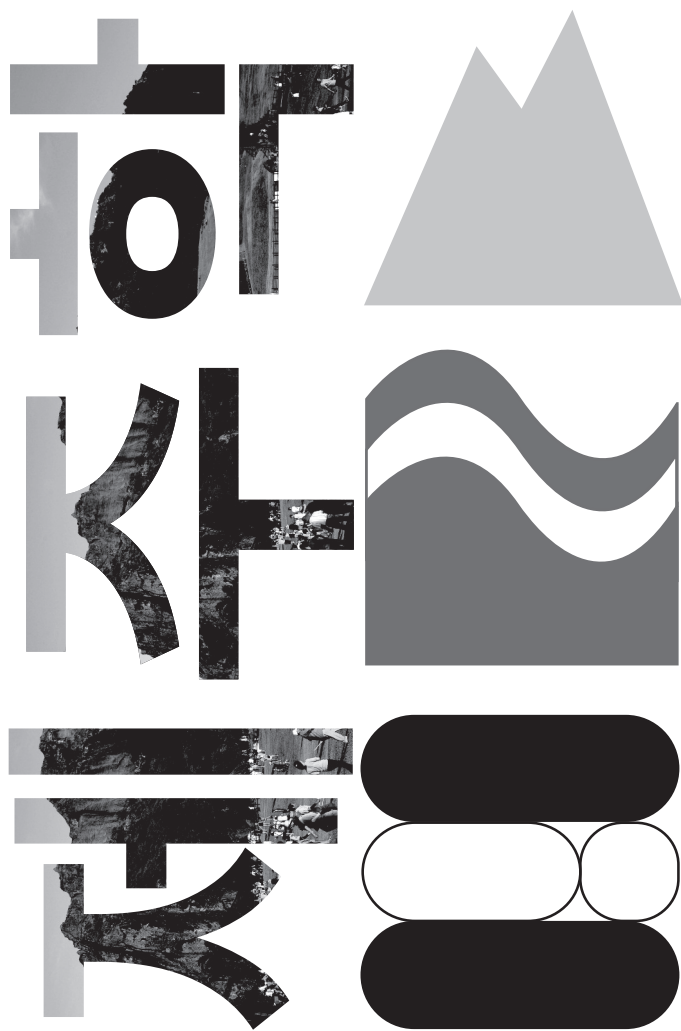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 제4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



[주최 · 주관]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제4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

일시: 10월 15일(목) 오후 1시~

장소: 호텔 난타(제주시 선돌목동길 56-26)

주관·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1부 집합기억과 제주 정체성

좌장: 손명철(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3:50~14:20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에서	전영준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탐라문화연구원장)
14:20~14:50	제주 정체성과 근대성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김치완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14:50~15:20	시대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작가들	김수열 (시인)
15:20~16:05	지정토론	홍기표(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겸임 교수) 김진선(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홍기돈(문학평론가·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2부 사회변동과 제주 정체성

좌장: 강경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

16:30~17:00	제주개발체제와 지역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대항운동의 과제	장훈교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17:00~17:30	이주·다문화와 제주(지역) 정체성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7:30~18:00	지정토론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염미경(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8:00~	만찬	

· 제4회 제주학대회의 모든 행사는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 주요 행사는 [▶ YouTube](#) @제주학연구센터 [f](#) @제주바투리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4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

차례

제1부 집합기억과 제주 정체성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에서 —————	16
	전영준(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탐라문화연구원장)	
	제주 정체성과 근대성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	38
	김치완(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대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작가들 —————	68
	김수열(시인)	
지정토론	홍기표(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겸임 교수) —————	80
	김진선(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84
	홍기돈(문학평론가·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87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90

제2부	제주개발체제와 지역정체성의 정치	96
사회변동과	그리고 대항운동의 과제	
제주 정체성	장훈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이주·다문화와 제주(지역) 정체성	157
	이해웅(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75
	염미경(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181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187

인사말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이때, ‘근대성과 제주정체성’을 주제로 ‘제4회 제주학 대회’를 열 수 있어서 무한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8월 12일 설립되어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제주학연구센터를 독립하여 재단법인 제주학진흥원으로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학연구센터도 지난 5월에 ‘제주학연구센터 10년, 종합적 성찰과 그 과제’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고, 기관지 <제주바투리> 창간, ‘제주학 아카이브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용역 수행 등 제주학진흥원 독립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은 제주의 언어, 역사, 민속 등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인의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그동안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제주어대사전 발간 등 제주어 보전과 전승 사업, 제주역사 총서 발간 사업, 제주민속 조사 연구 사업, 제주학 교육과 지원 사업, 대외교류 협력 사업 등을 통하여 제주학의 전문성 강화와 대중화에 기여하여왔습니다.

이번 ‘제4회 제주학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계획했던

국제학술대회를 취소하고,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을 ‘제주학 주간’으로 설정하여 학술대회는 물론이고 제주학 아카이브전, 제주학 탐방, 제
주어 특강, 제주어 책 나눔 행사를 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성찰을 하게 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고민
하고 지향하는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회복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늘 견
지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근대성과 제주정체성’이야말로 코로나19 시기에
매우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하며, 이번 대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제주사람들이 어떻게 살
아야하는지 그 좌표가 설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학술대회 좌장을 맡아준 제주대
학교 손명철 교수님과 제주역사문화진흥원 강경희 연구원님,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제주
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전영준 원장님, 시인 김수열 님, 제주대학교 김치완 · 장훈교 교
수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웅 연구위원님, 토론을 맡아준 홍기표 김진선 홍기돈 서
영표 염미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주어 특강을 해주시는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강영봉 이사장님과 탐방을 진행해 주시는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님과 이현정 선생님께
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저희 행사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참석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어
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제주학 대회를 준비해준 우리 센터 식구들에게 크나큰 신뢰
와 사랑을 보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제주학 대회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대
신 주요 행사는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따뜻한 제주학’, ‘소통하는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을 실현하여 제
주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먹구름이 어서 걷혀 일상
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
니다.

격려사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4회 제주학대회’가 열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행사가 취소되어 제주학대회를 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주학대회를 준비한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우리 제주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주도가 설정한 ‘청정과 공존’의 비전은 제주다움 즉,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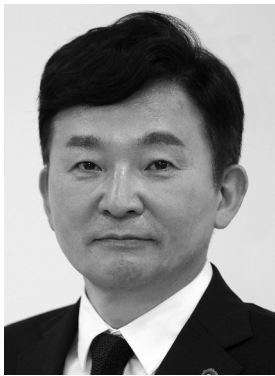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제주학대회의 주제인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은 현재 제주를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청정과 공존’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학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학대회를 통해 제주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깊어지기 바라며, 이를 통해 ‘청정과 공존’의 비전을 담은 제주다움이 곧 세계적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로컬 제주(Local Jeju), 국가의 미래는 바로 로컬 제주에 있습니다. 로컬이 미래이고, 제주가 곧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제주연구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제주연구원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다움을 발견하고 창출해 내 감으로서 ‘청정과 공존’의 제주 비전 실현을 이끌어나가는 학술 싱크탱크(think tank)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과 행사 책임을 맡아준 김선필 박사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여러 귀빈들과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회 제주학대회가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의 연대가 강조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주도민은 여러 세대를 거쳐 구성원들이 함께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며, 공존의 공동체를 일궈 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제주도민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입니다.

역사와 사상사, 문학에 나타난 제주의 정체성을 짚어보고, 개발과 이주·다문화 같은 사회변동이 제주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학 아카이브전과 제주학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려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제주학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정체성의 형성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탐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2011년 설립된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학제 간 접근을 통한 협동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세대들이 제주도민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품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깊고 넓게 제주학 연구에 매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정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제주학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입니다.

초록이 어느새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이 열린 것처럼, 제주학의 지평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네 번째 제주학대회가 막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와 제주학 아카이브전을 비롯 제주학 탐방과 명사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학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소중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회는 제주연구원 부설이었던 제주학연구센터가 별도 출연기관인 제주학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기쁨 속에서 치러지고 있어서 그 의미가 무척 크고 소중합니다.

앞으로 소멸위기의 제주어와 민속, 신화, 역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고 계승해 나간다면 제주의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제주학 발전에 기여하면서 제주학의 대중화를 꾀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순자 센터장님과 제주학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학술대회와 아카이브전, 제주학 대중화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지역학 연구가 무척 활발합니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주학은 다른 지역과 해외 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유하고 독특한 섬문화와 풍습, 오래된 화산섬 지형, 자연생태학의 보고, 지정학상 이유 등 국제적 학문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제주학이 세계적인 학문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제주학,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 사 문

제1부

집합기억과
제주 정체성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에서*

전영준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탐라문화연구원장

I. 머리말

올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COVID-19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도 여전히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대응함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시간이 흐르고만 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연일 터져 나오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치들 사이에서 뉘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관공서나 병원, 상점가 출입에서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일상사처럼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행은 물론 친지 방문도 어려운 시기임을 강조한 덕분에 제주도에서 음력 8월 무렵에 축제처럼 치러지는 친지, 형제들과 함께했던 별초를 혼자 해야만 했다. 그리고 ‘방콕’ 여행에서 ‘홈-트’니 홈쇼핑 또는 넷쇼핑을 누비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 근래 들어 증가하고 있다. 무던히 고민하고 선택한 후 결재를 하려 할 때, 낯선 ‘배송조건’에서 추가요금

* 본 발표문의 제목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에 걸쳐 진행한 학술대회에서 고대 탐라로부터 현대 제주까지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대주제로 풀어내고, 동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제주의 위상과 제주학의 정립을 위한 탐라문화연구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불이나 ‘제주도 및 도서산간 배송불가’라는 암초를 줄기차게 만난다. 순간 치미는 화를 삭이며 스스로에게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았어! 뭔가 다녀갔나 보다”며 다독이며 참는 일이 많아졌다. 운송비 등등의 자본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을 이해는 하면서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 반문하게 된다.

II. 탐라 천 년의 역사와 흐름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의 주제로 열리는 제주학대회의 화두는 제주가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타 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를 특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 정체성의 본질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었는가를 역사 속에서 찾아내고 현재적 관점에서 되새김질하여 맥락을 짚어내는 작업으로 이해하며, 이를 근거로 미래 제주학을 담아내려는 자기반성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간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민하고 연구하였던 많은 학자들의 눈부신 업적에도 불구하고 총합하여 하나로 엮어내는 일에 소홀했던 연구기관들 간의 분산된 시각에서 비롯된 일이다.

특히 올해 초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¹⁾이 제정 공포되기 전인 2016년에 탐라문화권 조사를 통한 제주학 정립의 가치를 일깨우는 先見은 되새길만하다.²⁾

1)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해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함으로써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바람으로 제정됐다(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 역사문화권에 고구려, 백제, 가야, 마한 등에 이어 ‘탐라역사문화권’이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담겼다.

2)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기관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도 산하 기구인 〈제주문화예술회관〉, 〈제주연구원〉, 사단법인으로 새로 출범한 〈제주역사문화재단〉, 제주전통문화를 꾸준히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된다. 지난 몇 년간 제주도는 국제자유 도시를 추진하고 외국 자본 유치와 영어 공용어화를 통한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전략일 뿐이지 제주인의 삶의 본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한국의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앞서 특별하게 자치를 실현시키는 노력도 경제 개방과 외자유치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제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치를 이룩하는 데에는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주가 지닌 문화적 잠재력을 문화콘텐츠로 삼아야 세계화 에도 성공할 수 있다.

...제주는 한국문화 속에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주의적 학문 풍토에서 제주적인 것은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민족문화의 역량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예외적인 부분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민족문화는 지역학의 배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학을 강조하는 학문 풍토에서 가능하다. 민족문화는 하위의 지역문화를 풍부 하게 하고, 상위의 동아시아 문명권의 문화와 세계문화와 교류하는 가운데 그 존재 의의가 부 각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제주문화를 주권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의 독자적인 역 사와 민속과 신화를 토대로 제주학을 구축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후략)³⁾

따라서 민족학 연구는 서울 중심의 중앙학과 지방학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 으며, 서구적 근대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배계급 중심의 학문적 연 구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에서도 서구 근대 개념의 무차별적 수

재야에서 연구해 온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의 자연적 가치와 인문적 가치를 함께 구현해 온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제주문화를 돌로 실현한 <제주돌문화공원> 등으로 고유한 지역성을 주제로 하면서도 상 시적인 만남을 통해 大綱을 꾸리는 작업에는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허남춘, <제주신화와 문화콘텐츠>, 《탐 라문화 아카데미 자료집-인문도시지원사업; 돌하르방, 올레로 마실나가다》 I, 2016.03, 제주대학교 탐라문 화연구원, 13쪽).

3) 허남춘, 위의 글, 2016, 11-13쪽.

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도 사실이다. 시대구분이 다소 장황하겠지만 탐라와 제주의 변화양상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동시에 다루기로 하겠다.

한국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시기로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 구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한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 시대가 가지는 특징에 따라 여러 시기로 분류하고 지나간 시대에 대한 특성을 명확히 하여 역사 연구의 편의와 여러 가지 학문적 이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갑오개혁과 함께 역사 연구와 교육을 위한 여러 서적에서 시도되었다. 이후 시대적 전환기마다 다양한 시대 구분법이 제기되었고, 그를 둘러싼 논쟁이 있기도 했다. 그러한 논쟁의 가장 대표적인 논점은 각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어느 시대가 어떠한 기준에 따르면 어느 사회인지 또는 시대의 구분점은 어디인가이다.

시간의 흐름과 문명의 발전 단계로 볼 때 지금을 기준으로 먼 시대부터 가까운 시대까지, 즉 더욱 오래된 지점부터 덜 오래된 지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면서 각 시대의 기준을 문명의 발전 단계에 맞추는 방법은 시대 구분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줄곧 유지된 방법으로, 지금도 주류를 이루는 방법이다. 이러한 구분법은 대개 고대와 중세, 근대의 3분법으로 대표된다. 이에 덧붙여 고대 이전에 원시시대 또는 선사시대를 설정하기도 하며, 중세와 근대 사이에 근세를 설정하기도 한다. 또는 근대를 근대와 현대로 양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대개 시간에 따른 구분에 경제의 발전단계를 결합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백남운 등의 마르크스주의 경제사학자나 민중사학에서 사용하는 시대 구분 또한 시간의 흐름에 사회의 발전 단계를 중심으로 삼은 것이다.

3분법은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주의자들이 자신의 시대를 앞 시대와 구분하기 위해 앞 시대인 중세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고대문화의 부흥을 사명으로 하는 자신들을 강조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를 고대로, 이후 신대륙 발견까지를 중세로, 르네상스 이후를 근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대체로 문예에만 한정되었고, 이러한 구분법이 역사학에서 퍼지게 된 것은 17세기부터이다. 랑케 사학에 바탕을 둔 근대적 사학이 정착하면서 3분법은 기본적인 역사 서술의 체계로 자리 잡았고, 이후 현대라는 시기를 설정하면서 4분법으로도 사용된다.⁴⁾

한국 사학계에서 古代는 대체로 고조선의 건국 이후부터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의 남북국시대까지를 지칭한다.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원시사회, 부족사회, 부족연맹사회(고조선~원삼국시대), 고대(삼국시대), 고대 통일국가(남북국시대)와 같이 세분화하는 학자도 있다.⁵⁾ 고대를 두고 上古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 원래 상고는 《삼국유사》에서 등장한 용어였지만, 대개 이러한 개념은 신라사 연구에서만 사용되었다.⁶⁾ 상고만을 사용하는 경우 대개 고대사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로 사용하였지만,⁷⁾ 이른바 재야사학에서는 고조선사 연구를 상고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의 연구에서 상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이전을 포섭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⁸⁾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유물사관론자인 백남운은 “조선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무리 아시아적이라고 해도 사회구성의 내면적 발전법칙 그것은 전적으로 세계사적인 것으로서…”라는 주장을 통해 고조선 이후 남북국시대까지 한국의 역사는 씨족공산체에서 원시 부족국가(고조선~원삼국시대)로 발전하고, 다시 노예국가(삼국시대~남북국시대)로 변천하였음을 논증하였다.⁹⁾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아울러 고대라고 할 때, 제주도 역사의 시작은 구석기시대부터 확인할 수 있다.¹⁰⁾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일대 중산간지역인 ‘빌레못’ 연못 주변에 화

4) 인류가 문자를 발명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의 역사시대기는 주로 고대·중세·근대(현대)의 구분법을 채용하게 되는데, 근세와 같은 개념을 추가해 사용하기도 한다. 각 시대가 가지는 특징이 한국의 역사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5) 한우근, 《한국통사》, 1987; 변태섭, 《한국사통론》, 1989.

6) 강중훈, 《신라상고사연구》, 2000.

7) 신채호, 《조선상고사》, 1930; 천관우 편, 《한국상고사의 쟁점》, 1975 등.

8) 최태영·이병도 공저, 《한국상고사입문》, 1989; 이종재, 《상고사의 재발견》, 1997; 정연규, 《대한상고사》, 2005.

9)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1933.

10) 지난 2017년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개론》 발간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집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개론》, 제주특별자치도, 2017, 28-53쪽).



그림 1) 빌레못 동굴 유적 근경과 입구

산 폭발로 생긴 용암 동굴에 형성되어 있다. 유물은 동물뼈 화석은 갈색 곰과 사슴 등이 있으며, 석기는 대부분이 박편석기이다.¹¹⁾

제주도의 신석기시대는 한경면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의 발견으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고산리 신석기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직 한반도 본토에는 없는 실정이지만, 시베리아 아무르강 중하류 오시포프카(Osipovka) 문화의 유물과 일본 열도의 조몬(縄文) 시대 초중기의 유물이 문화적으로 비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고산리식 토기

11) 빌레못 동굴 구석기 유적의 연대에 대해 발굴 보고자는 2목 2과 3속 34종이라는 매우 단순한 동물상과 석기 형태간의 비교를 통해 중기 홍적세 말기로 보고하였다.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모두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어, 오래된 것들은 석기의 날이 잘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하게 구르거나 풍화되어 날이 무더진 것도 보인다. 이러한 몸돌 석기와 격지 석기는 중기 구석기시대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갈색 곰 뼈는 대륙성 동물로 제주가 섬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연륙되었다는 학설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빌레못 동굴 구석기 유적에 대한 평가는 결론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정영화·고재원, <제주도 구석기문화의 재검토>, 《제주도사연구》 4, 제주도사연구회, 1995).

의 유입과 사용 시기는 아무르강 유역의 오시포프카 문화 3단계에 해당하는 11,000년 ~9,000 B.P.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¹²⁾

신석기시대 토기는 고산리식 토기, 용기문 토기, 압인문 토기, 봉계리식 토기,¹³⁾ 이중 구연 토기순으로 나타난다. 이 토기들은 제주도의 신석기 시대에 차례로 발생함에 따라 신석기 문화의 전개 양상을 초기(고산리화 김녕리 유적)—조기(용기문 토기)—전기(압인문 토기)—후기(봉계리식 토기와 성읍리 유적)—만기(이중 구연 토기, 북촌리 바위그늘 유적)로 구분할 수 있다.¹⁴⁾ 이외에도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그 중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은 사적 제4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같은 유적의 발견으로 제주도에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선사인들이 거주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집단 유적 상태로 보면 신석기 시대에는 소수 집단이 흩어져 거주하다가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는 정착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 대거 집단화하는 경향이 있다.¹⁵⁾

한편, 제주도는 고대로부터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을 왕래하던 선박들의 중도 기항지로 해상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1928년 제주항 축항 공사 때 발견된 중국 漢

12) 강창화, <제주도 신석기 문화의 형성과 전개>, 《제주도의 고고학》, 호남 고고학회, 2005.

13) 심봉근, <합천 봉계리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 1989; <성읍리유적>,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14) 중기의 전형적인 태선침선문 토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화산섬이 만들어낸 수렵과 채집 및 어로 행위에 적합한 풍부한 생계 조건이 이미 주어진 최상의 환경 조건에서 애써 농경을 택할 이유가 없었던 데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농경과 연관된 전형적인 태선침선문 토기는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공백기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섬이 갖는 문화의 전통성·존속성·독립성으로 인해, 초기 또는 전기 토기의 지속 또는 후행 가능성과 후기의 봉계리식 토기 단계의 선행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국립중앙박물관도록》, 국립중앙박물관, 1996; 오연숙, <제주도 신석기 시대 토기 변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0; 오연숙, <제주도 신석기 시대 토기의 형식과 시기 구분>, 《호남 고고학 연구》12, 호남고고학회, 2000; 오연숙, <제주도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 신석기 연구회 학술 세미나 발표 요지, 2004; 강창화, <제주도 신석기 문화의 형성과 전개>, 《제주도의 고고학》, 호남 고고학회, 2005) 참조.

15) 김동전, <제주의 선주민>,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http://jeju.grandculture.net>); 《제주시 50년사》上, 제주시, 2005; 《제주도지》,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2006 참조.



그림 2) 한경면 고산리 유적 안내 및 분포도



나라 시대의 화폐인 五銖錢과 王莽 신나라의 화폐인 貨泉·大泉五十·貨布 등의 일괄 유물은¹⁶⁾ 1세기경의 제주도가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로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였거나 간접무역의 증거로¹⁷⁾ 생각된다. 제주도의 과거 유물·유적의 분포지가 대부분 제주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나 한반도로부터의 선진문물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¹⁸⁾

문헌상으로 볼 때, 제주도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의 역사서에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의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의 경우, 기원후 3세기 중국 삼국시대의 기록인 《삼국지》〈위서〉동이전에 나오는 ‘州胡’에 관한 기록이다.

州胡는 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의 큰 섬에 있다. 그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말도 韓[族]과 같지 않다. [그들은] 모두 鮮卑族처럼 머리를 삭발하였으며, 옷은 오직 가죽으로 해 입고,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옷은 上衣만 입고 下衣는 없기 때문에 거의 나체와 같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韓나라에서 물건을 사고판다.¹⁹⁾

16) 원유한, 《화폐》-한국의 전통사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전경수, 〈韓·耽別祖論과 耽羅의 文化主權〉,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산지향 유적지는 중국 한(漢)대의 거울과 칼, 화폐 등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이들 유물은 1928년 산지향 축항공사 때 암석 채취 중 우연히 부근의 용암(熔岩) 아래 한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일괄 유물은 오수전(五銖錢)은 4점, 화천(貨泉) 11점, 대천오십(大泉五十) 2매, 화포(貨布) 1매 등 총 18매이며,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세계 속의 한반도해양문화원형〉, 2009, <http://www.culturecontent.com>).

17) 원유한, 앞의 책, 2005, 13-18쪽에서는 경남 창원군 다호리 유적과 제주 건입동 산지향의 중국 화폐 및 한반도 서남부 해안 지대에서 출토된 중국 화폐는 중국과의 교역이 주로 해안선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중국 화폐가 한반도 일부 지방에서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18) 강창화, 〈탐라 이전의 사회와 탐라국의 형성〉, 《강좌 한국고대사》10,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2003; 강창화, 〈고대 탐라의 실체와 물자의 교류〉, 《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 문화의 형성》,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참조 바람.

19) 《三國志》〈魏書〉東夷傳,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韓中.”

이 기록에 대해 혹자는 당시 제주는 미개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배를 이용하여 이웃 나라와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면 제주의 풍습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옷감을 직조하지 않고 가죽옷으로 생활한다고 하여 미개한 사회로 보는 것보다는 이 기록의 주체가 중국이어서 타국을 낮추어 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한국사의 고대시기에 문헌상으로 ‘탐라’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삼국사기》〈백제 본기〉 기록이다. 여기에 ‘문주왕 2년(476년) 탐라국에서 공물을 바치자 왕이 기뻐해 사자에게 은술의 관직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은 백제와 고구려의 충돌이 있었던 475년의 이듬해로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수도 한성을 공략하여 개로왕이 전사한 이후로 백제는 경기만에서 상실한 해양력을 남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일본과 교섭하는 보다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황해와 남해,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상네트워크의 접점으로서 남중국한반도일본열도로 형성된 삼각항로의 中核에 있었다. 백제는 탐라를 얻음으로써 광범위한 해양활동망을 구축했고, 일본열도로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졌다.²⁰⁾ 물론 이때 탐라가 정치적으로 복속된 것은 아니었다. 육지 세력에 흡수되지 않으려는 해양세력의 기본적인 속성과 교역권의 점유를 놓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성왕 20년(498)에는 탐라가 백제에 공물을 바치지 않아 왕이 정벌하러 남진하다가 탐라가 사죄하므로 무진주에서 멈추었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탐라가 백제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로 보더라도 탐라는 사실상 독립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일본서기》에 ‘繼體 1년(508) 12월에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와 통교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문무왕 2년(662년) 탐라국주 徒冬音律이 신라에 투항하여 속국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탐라가 신라와 본격적으로 교섭이 이루

20) 김창검, 〈고대 동아시아 항로 속 제주와 한반도〉, 탐라문화 아카데미 자료집-인문도시지원사업; 돌하르방, 올레로 마실나가다》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09, 93-110쪽.

어진 것은 7세기 중반 이후이다. 《삼국유사》의 〈황룡사구층탑〉조에는 해동의 명현인 安
 弘이 지었다는 〈東都成立記〉를 인용하여 선덕여왕대 9층탑을 세우는 중요한 목적이 9韓
 의 침입을 막는 데 있다고 하면서 9한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4층에 托羅를 배열하고 있
 다. 신라의 탐라 인식에 대한 비중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후 662년에 속국이 되었
 지만, 679년(문무왕 19) 신라의 탐라국 경략 기록은 처음부터 신라에 완전히 복속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애장왕 2년(801) 10월에 탐라국이 사자를 보낸 기록이
 확인된다. 이것은 탐라가 신라에 복속되었다고는 하나 신라조정에 조공을 바치거나 한
 일이 별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²¹⁾ 이 무
 렷 중국의 《신당서》의 기록에는

용삭 초년(신라 문무왕 원년, 661)에 儋羅가 있어서, 그 왕 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어 입조
 하였는데, 나라는 신라 무주의 남쪽 섬에 있으며, 풍속은 순박하고 비루하며, 큰 돼지의 껍질을
 입고 여름에는 가죽으로 만든 집에 살고, 겨울에는 굴 같은 집에 산다. 땅에서 오곡이 나는데,
 경작에 소를 쓸 줄 모르며, 쇠로 만든 갈퀴로 흙을 일군다. 일찍이 백제에 복속하였다가 인덕
 연간에 추장이 내조하여 황제를 따라 태산에 이르렀으며, 후에 신라에 복속되었다.²²⁾

고 하였다. 이 기록에는 당시의 탐라를 儋羅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음이 확인된
 다.²³⁾ 《삼국사기》와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당시의 탐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같은
 시기의 기록인 《唐會要》 탐라국조에는

21) 김창검, 앞의 글, 2016.09, 107쪽.

22) 《新唐書》卷220〈列傳〉第145 東夷, (流鬼·儋羅·達末婁·達姁) 流鬼去京師萬五千里. “龍朔初, 有儋羅者, 其
 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 夏居革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23) 오창명, 〈‘제주(濟州)’의 옛 이름 재해석〉,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59-
 89쪽 참조.

탐라는 신라의 무주 해상에 있다. 섬 위에는 산이 있고 주위는 모두 바다에 접하였는데, 북쪽으로 백제와는 배를 타고 5일을 갈만한 거리이다. 그 나라 왕의 성은 유리이고 이름은 도라인데, 城隍은 없고 다섯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들의 집은 둥글게 돌담을 둘러서 풀로 덮였으며 호구는 8천 가량 된다. 활과 칼 및 방패와 창이 있으나 문기는 없고 오직 귀신을 섬긴다. 항상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고 용삭 원년(문무왕 1, 661) 8월에는 조공 사신이 당 나라에 이르렀다.²⁴⁾

앞의 기록에서도 당시 탐라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탐라의 지리적 거리와 위치, 명칭, 왕, 풍속, 가축, 성곽, 신앙, 거주지 모습, 무기, 인구 등에 대해 대략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호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 당시 탐라국과 일본 사이에는 오랫동안 사신 왕래가 있었으며, 교역도 이루어져서 탐라방포(일명 耽羅脯)와 耽羅鰓(전복) 등의 물품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백제의 부흥운동 때에는 탐라국에서도 군사를 파견하여 일본과 함께 백강(지금의 금강) 전투에서 싸웠다.

한편,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성주와 왕자의 호칭은 탐라 왕족인 고후·고청 등 세 형제가 신라의 왕을 만났을 때 신라왕이 그들에게 성주·왕자·도내의 작위를 주었던 데서 유래한다. 고려 태조도 신라의 예를 따라 末老에게 성주·왕자의 작위를 주었다. 특히 성주는 국왕을 치칭하며 또 성주는 거의 독립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태자·세자라 칭하였다.²⁵⁾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였던 명칭인 ‘星主’는 일반적으로 칭하는 ‘城主’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다른 곳과 달리 유독 탐라에서 ‘성주’라고 하였던 점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²⁶⁾ 앞의 기록에서 탐라인들이 배를 이용한 무역

24) 《唐會要》卷100〈耽羅國〉, “耽羅, 在新羅武州海上, 居山島上, 周迴並接於海, 北去百濟可五日行, 其王姓儒李, 名都羅. 無城隍, 分作五部落, 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 戶口有八千, 有弓刀楯稍, 無文記, 唯事鬼神, 常役屬百濟. 龍朔元年八月, 朝貢使至.”

25) 김창현, 〈탐라왕 및 성주·왕자의 실체와 탐라의 통치체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26) 강문규,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2006.

을 전개하고 있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었던 항해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활용하였던 야간항해술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탐라의 '성주'는 여타 지역의 명칭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록에 의지하여 학계에서는 탐라를 3~5세기 영산강 유역의 마한, 변한, 남부 가야 등과 활발하게 교류한 해상왕국으로 보고 있다. 탐라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궁궐, 왕의 무덤, 통일된 도량형 등 고대국가를 입증할 만한 유적이나 유물이 발굴된 적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근거에 따르면, 탐라국이 성립된 때는 대체로 기원 전후 한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탐라국시대는 한반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동아시아 해양문화권의 범주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고시대 탐라국은 한반도에 부속된 지방이 아니라, 한반도·중국·일본과 대등한 교역·외교관계를 맺었던 독립국이었다. 즉, 탐라국 시대의 제주도는 해양 중에 위치한 絶海孤島가 아니라, 고대 동북아시아 해상교류의 거점 지역이었다. 탐라국 천 년의 정신세계는 해양과 직결되어 있었다. 섬이라는 한계를 바다를 통하여 극복하여 갔다. 그리고 그 바다는 사면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고대 탐라인의 정신세계는 진취적이고 자율적인 면을 강하게 띠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⁷⁾

Ⅲ. 제주 천 년 역사의 기점

中世는 한국 학계와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들에서 대체적으로 고려를 전후로 하는 시기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나 근대의 시기 설정에 비하여 의견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설정의 기준이나 해당 시대 구분 자체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27) 박찬식, 〈역사 속의 소수자, 세상을 다시 열다〉, 《탐라문화 아카데미 자료집-인문도시지원사업; 돌하르방, 올레로 마실나가다》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09, 별책 16쪽.

지속되고 있다. 유럽의 중세는 봉건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사를 세계사적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학자들은 비교사학의 입장에서 서구와 비교할 때, 한국사에서는 봉건제와 같은 유사한 제도는 없었으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중세 사회를 설정하였다. 또한 남북국시대 말기의 신라 사회의 혼란과 후삼국시대와 같은 호족의 발흥 및 고려의 건국까지의 여러 가지 요소는 사회적 전환기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도,²⁸⁾ 서양의 봉건제 사회를 연상케하는 지방분권적 측면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견해에서 羅末麗初를 중세 사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중세 봉건제 사회는 서양의 역사 구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중세의 보편성이 한국의 역사를 비롯해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또한 봉건적 사회라는 기준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접근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²⁹⁾ 북한 학계에서는 고대의 설정과 함께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까지를 중세 봉건제사회로 규정하였다. 이는 삼국시대가 기존의 노예제 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봉건사회로 옮겨갔다는 경제학자 김광진, 역사학자 김석형·정찬영 등의 이론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봉건제 사회가 2천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된 것이다.³⁰⁾

일제강점기 일본 도쿄에 유학하여 서양 근대 정치와 법제를 공부하고 귀국한 안확은 서양 정치사와 비교할 때 한국은 봉건제가 박약한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 중세사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달에 착안하고, 민의를 따르는 자치를 허용한 기반이 한국식 봉건제의 특수성이라고 하며 서양의 봉건제와 구별하였다. 또한 조선의 군주권은 고려에 비해 강력해진 군주 독재 정치임에도, 그 과정에서 신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점이나 봉당이 발달하여 쟁의를 일으키

28) 후삼국에서 고려로의 ‘一統三韓’이라는 변화에는 ①호족 ②도당유학생 ③선종 ④풍수도참이 작용하였고 이를 中世的 知性이라고도 한다.

29) 중세의 설정에 대한 대중적 비판으로 ‘도올 김용옥, 학계 역사인식 정면비판’을 참조.

30) 이기백, 《전환기의 한국사학》, 1999, 36-38쪽 및 148-149쪽.

는 등 군주권을 제약하는 점이 서양의 전제정과 다르다고 보았다.³¹⁾

한국사에서 중세시대는 통상적으로 고려를 기점으로 하는데, 고려시대의 제주에 관한 기록은 탐라의 進獻 기록과 팔관회의 참가를 통해 우선 확인된다. 탐라국 사신들은 고려의 연중행사인 팔관회나 연등회에도 참가하고 진헌무역을 행하였으며, 이때의 물품으로는 선박·굴·우황·쇠뿔·쇠가죽·나육(螺肉)·비자·해조·진주·말 등이었다.³²⁾ 그러나 탐라국은 1천년의 수명을 다하고 고려 숙종 10년(1105)에 한반도의 중앙집권국가인 고려 왕조의 일개 지방으로 전락하였다. 고려시대 중앙왕조에 편입된 직후 제주도민들은 끊임 없이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여러 번에 걸친 민란을 일으켰다.

고려 조정에서 관리가 파견되면서부터 수탈이 자행되어 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민란의 주된 요인은 관리의 가렴주구와 토호 권세가의 토지침탈, 조세·부역의 가중 등을 들 수 있다.³³⁾ 결국, 의종 22년(1168)의 良守가 난을 일으켜 제주도민들로부터 선정관으로 추앙받았던 최척경을 다시 탐라현령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종 5년(1202)에는 번석·번수 형제의 난, 원종 8년(1267) 봄에는 草賊 문행노의 난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무신정변 전후 시기이지만, 이미 중앙귀족의 병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한 하층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던 때였다. 더구나 제주라는 명칭으로 지방정부로 편입되던 시기의 혼란과 연관되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의 문화가 제주로 집중되었던 시기는 대몽항쟁기로 三別抄의 제주 입거 및 세력 확장을 꾀하였던 시점이었다.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였던 최씨정권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저항하였다.³⁴⁾ 그러나 무인정권이 붕괴되고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게

31) 이태진, 〈한국의 역사가 안확〉, 《한국사시민강좌》 5, 1989, 135-162쪽.

32) 탐라문화연구원, 《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33) 전영준, 〈12세기 중앙정부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亂〉, 《제주의 시간 그리고 사람》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2016.10.21.), 참조.

34) 윤용혁, 《삼별초-무인정권-공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해안, 2012, 참조. 삼별초는 좌별초·우별초·신의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초는 밤에 도둑을 단속하는 데 있었지만 차츰 그 임무가 확대되어 경찰임무인 포도(捕盜)·금폭(禁暴)·형옥(刑獄)·국수(鞫囚) 이외에 군사임무인 도성의 수비를 비롯해 친위대·특공대·정찰대의 구실도 하였다.

되자, 삼별초가 대몽항쟁의 기치를 들고 저항하였다. 삼별초가 중앙정부와 몽골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입도하자, 제주민들은 이들과 연합하여 고려조정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1270년 배중손 장군과 야별초 指諭 盧永禧 등이 承和候 溫을 왕으로 삼고 반기를 들었다. 삼별초는 진도 용장산에 산성을 쌓고, 궁궐과 관아건물을 마련하여 항쟁의 거점으로 삼았다. 진도에 근거를 둔 삼별초군은 남해안 일대와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삼별초가 진도에 근거를 두자, 전라·경상도의 조세 운송은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나아가 개경정부와 몽골의 공격에 대비하여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고 대몽항전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하였다.³⁵⁾

1271년(원종 12) 4월, 여몽연합군은 혼도를 원수로 삼고 진도 공격을 결정하였다. 5월 15일 여몽연합군은 진도를 공격하여 진도 정부를 붕괴시켰다. 진도정부가 붕괴되자 같은 해 5월 김통정은 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제주로 들어와 이미 제주에 입거한 이문경 부대와 합세하였다. 이어 남해안에 근거하고 있던 유존혁도 80척의 선단을 이끌고 제주에 합류하여 제주 향파두리 토성을 중심으로 항쟁을 전개하였다. 향파두리 토성은 3면이 해자의 기능을 겸비하는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북쪽으로 남해안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³⁶⁾

삼별초가 제주로 이동하기 전 이문경 부대는 1270년(원종 11) 10월 말경에 제주에 입도하였다. 삼별초의 진도정부가 무너진 것은 1271년 5월 15일이었으나, 김통정 등은 진도에서 항쟁을 계속 주도하면서 이문경 부대로 하여금 제주로 들어가 항쟁의 거점을 마련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고려 관군에서도 입수하고 있었다. 그래서 삼별초가 제주에 입도하기 전인 1270년 9월경에 영암부사 김수가 200명의 군대와 고여림 장군의 병사가 함께 제주에 들어가, 삼별초의 제주 입거를 방어하고자 하였다. 고려 관군은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리하게 제주도민들을 동원하여 군기보

35) 고창석, <고려시대의 역사>, 《제주 역사》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u.go.kr>).

36) 전영준,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참조.



그림 3) 담천(삼수천, 화북과 삼양의 경계)



그림 4) 귀덕리 소재 환해장성

수 및 군기제작, 그리고 제주도 곳곳에 환해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후 삼별초 이문경 부대의 제주 입도는 항쟁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미 제주에 진을 치고 있던 관군과의 일대 항전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송담천(혹은 삼수천) 전투로 불리는 이 싸움에서 이문경 부대는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다. 그 주된 요인은 제주도민들이 삼별초를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제주도민들은 삼별초를 해방군으로 인식하였을까? 이는 무엇보다 제주도민들의 반정부적인 인식이었다. 탐라국이 해체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하면서 지방관들은 15세 이상의 제주도 남자들로부터 해마다 콩 한 섬씩과 지방관의 말단 공무원들로부터는 말 한 필씩을 바치도록 강요하여 나누어 가졌다. 여기에 더하여 제주의 토착지배세력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에게 빌붙어 제주도민들의 토지를 침탈하였다. 제주인들은 토착지배세력과 지방관에게 이중적으로 수탈당하는 현상이었다. 고종 21년(1234) 제주판관으로 부임했던 김구는 권세가의 토지침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밭과 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돌담’을 쌓기 시작하였다. 제주의 돌담의 유래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셈이다.³⁷⁾

제주도에 입거한 뒤에도 삼별초는 전라도 서남해안 일대에 세력을 뻗치고 있으면서, 조운로를 막아 원종 13년 3월에서 5월까지 조운선 20척, 穀米 3,000여 석을 빼앗았다. 또 원종 13년 8월에는 삼별초가 전라도의 貢米 800석을 약탈하였다. 삼별초는 제주를 근거로 전라도 남해안 지역까지 진출하여 조운선 및 전함 파괴, 강진 등 전라도 지역에 상륙하여 관아를 불태우거나 재물약탈, 몽골 병사를 살해·납치하였다. 이는 삼별초가 대몽항쟁에 필요한 식량 등 물자를 확보하고, 몽골군의 해상작전을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별초가 제주에서 항쟁을 전개하는 시기에도 일본, 오키나와 지역과의 연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³⁸⁾

37) 김동전, 〈항몽〉, 《제주 역사》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u.go.kr>).

38) 전영준, 앞의 글, 2015, 참조.



그림 5) 애월 향파두리 내성지 발굴 현장(2017년 촬영)

제주에서 삼별초가 항쟁을 전개하자 몽골은 고려 정부에 삼별초 토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삼별초 토벌은 남송과 일본 정벌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였다. 즉, 해상요충지인 제주의 확보는 몽골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것이었다.³⁹⁾ 1만 명으로 편성된 여몽연합군은 1273년(원종 14) 3월 160여 척의 선박에 나누어 타고 출정하였다. 삼별초 토벌군대 김방경을 필두로 3군으로 나누어 함덕포, 귀일포, 명월포로 각각 제주 상륙에 성공하였다. 김방경은 4월 28일에 삼별초의 최후 거점인 향파두리성을 점수하고 삼별초의 항복을 공식화하였다.⁴⁰⁾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 수십 년간 제주도는 몽골의 직할령이 되어 섬 곳곳에 목마장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제주도는 당초에 군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의종 때에 현으로 강등되었고, 고종 때에 다시 군으로 환원되었다가 충렬왕 21년에는 제주목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제주라는 명칭은 이미 고려 고종 10년(1223)부터 사용되었다. 다만 몽골의 지배 때는 제주도가 그들의 직할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항상 탐라 혹은 탐라국으로 호칭하였다. 그러나 충렬왕 20년에 고려에 반환된 뒤에는 다시 제주로 고쳤다.⁴¹⁾

39) 윤용혁, <삼별초, 제주를 주목하다>, 《탐라문화 아카데미 자료집-인문도시지원사업; 돌하르방, 올레로 마실나가다》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09, 113-127쪽.

40) 김일우, <탐라와 몽골문화의 교류와 탐라사회의 변화>,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201-231쪽 참조.

41)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이후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중앙행정체제로 편입되어 갔다. 변방과 경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0소장의 운영과 제주목사로 대변되는 지방정부로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태종 16년(1416)에 제주목과 대정현, 정의현의 1목 2현제가 성립되었고, 제주목에는 정3품의 목사와 목사를 보좌하는 종5품의 관관, 그리고 대정과 정의 양현에는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고, 관아의 설치와 읍성과 진성이 구축되면서 지방화되었다.⁴²⁾

인구도 고려 원종 15년(1274)에 1만 223명이었던 것이 조선 세종 때에 와서는 삼읍의 민호가 9,935호, 인구가 6만 3,47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과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실업자는 전라도와 충청도로 이주시키고, 범죄자(특히 牛馬賊)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인구의 포화상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던 중 성종 원년(1470)부터 인조 2년(1624)까지 약 150년 동안에 섬 안의 굶주리는 난민들이 도외 각지로 흩어지면서 3읍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조정에서는 국법으로 유망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출륙금지령이었다. 인조 7년(1629)부터 순조 25년(1825)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바다에 떠 있는 감옥으로 인식되었고 도민은 폐쇄된 생활을 지속해야 했다.

한편,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출륙한 제주도민, 이른바 두무악은⁴³⁾ 언어와 습속 등 생활양식의 차이로 전라, 경상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기피되었고, 또 정부로부터도 치안상의 우려로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이리하여 두무악들은 전복을 따는 일과 같은 진상용 해산물을 채취하여 납부하는 일을 전담하면서 육지인과는 격리된 가운데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주도는 조선시대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형을 살았던 곳이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격리된 절해고도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유형지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 그

42) 전영준, 〈文獻과 考古資料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역사와 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43) 제주도를 불법적으로 이탈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에 정착하여 사는 제주도민을 두무악(頭無岳)이라 하였다. 이들 두무악들은 수시로 원주지인 제주도로 추쇄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육지에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 17세기 이후에 와서는 군역을 지면서 일반 양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것은 죄인을 먼 곳에 격리시킨다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조선조 약 500년을 통하여 거의 200여 명에 달하는 유배인들이 제주도에 귀양살이를 했던 것이다. 그 신분도 위로는 광해군과 같은 폐왕이나 왕족, 정치인, 학자로부터 승려와 환관·도적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었다. 선조의 7남인 인성군의 3남 李健도 인조 때에 제주도에 유배되었는데, 그는 《제주풍토기》에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이고, 가장 두려운 것은 뱀이며, 가장 슬픈 것은 파도소리다.”라고 술회할 정도로 당시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유배형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신형이나 다름이 없었다. 다만 정세 변화에 따라 방면되거나 사면된 뒤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賜死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유배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사면 후 아주 제주도에 정착하여 입도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⁴⁴⁾

IV. 맺음말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에서 다루지 않은 근현대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필자의 우둔함을 변명으로 삼아야겠다. 전근대사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제주의 정체성이 반드시 근대성과 직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대 탐라국시대부터 바다로 열린 길을 따라 이동하고 교류했던 흔적들에서부터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내륙 문화가 끼친 영향 등에서 축적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립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중앙정부의 경계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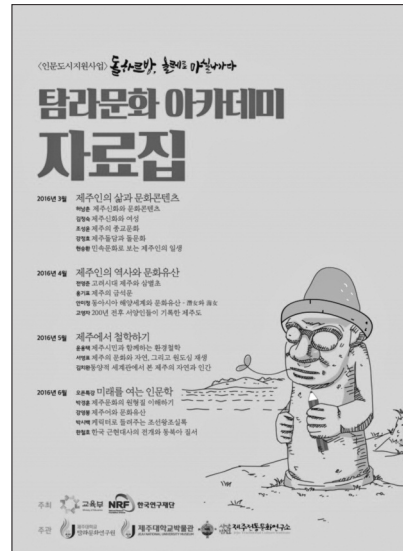
44) 박경훈, 〈제주문화의 원형질 이해하기〉, 《탐라문화 아카데미 자료집-인문도시지원사업; 돌하르방, 올레로 마실나가다》 I, 2016.0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319-339쪽. 여기에서는 入道祖, 섬 생활, 해양성기 후, 문화다양성, 實名社會, 알뜨르, 웃뜨르 마을, 巫風, 싯게, 문전제, 조왕제, 수눌음 등을 소재로 다루어 제주문화상을 읽어냈다.

45)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선시대 유배인들의 공통된 인식은 ‘척박함’이었다. 비가 많고 습하며 해충이 많다는 토로와 토산의 빈약함은 농경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평야지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러면 서도 제주에 수령으로 왔던 위정자들은 탐학과 수탈을 일삼았다.

으면서도 끊임없이 저항하였던 배경에는 혹독한 자연환경과⁴⁵⁾ 지배자의 수탈과 탐학에 대한 극복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탐라신화의 내용은 아직도 실생활에 반영되어 있고, 절대자에 대한 경외는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이겨내려는 의지로 전환되었다. 노동력을 나누어 쓰는 수눌음문화, 즈낭정신, 공동목장과 공동어장을 일구어 온 공동체문화의 집단정서로 승화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섬과 산, 바다는 제주정신을 규정하는 공간적 요소이다. 바다는 자기와 남들을 구별하는 확실한 경계로 인식된다. 경계의 확정성은 자아 의식과 주체성의 확립을 뜻하고, 남들에 대한 분명한 구별의 계기성을 부여하며 공동체성을 강고히 유지시키는 기능도 한다. 외지인이 제주를 독자성과 배타성이 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 이것은 근대성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근대라는 말은 동시대를 포함하여 전통사회 붕괴 이후 새롭게 생겨난 시대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현재성을 강조할 때는 현대라는 말이, 시대 구분의 역사성을 강조할 때는 근대라는 말이 좀 더 선호되고 있다. 한국사에서 전통사회의 붕괴는 1863년 고종 즉위나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제주 천년의 끝부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의 제주인들이 겪은 역사상만이 제주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 정체성의 정립은 고대로부터 탐라 또는 제주의 공간에 놓인 시간의 역사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 정체성과 근대성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김치완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1.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의 전제

철학에서 정체성(identity)은 “동일성(同一性)”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시간적·공간적으로 다른 사물이 그 성질로 보아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하나의 사물이 그 자신과 같다는 좁은 의미의 동일성도 있다. 그런데 동일원리(同一原理)가 요구하는 ‘개념 내용의 동일성’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절대로 동일하다거나, 영구히 불변한 것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원리란 일정한 범위의 토론이나 논술에서는 각각의 개념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동일원리가 요구되는 까닭이 개념의 대상인 실재물(實在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동일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동일성이란 이렇게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므로 ‘그 밖의 차별성을 포함하는 것이면서 일시적인 것’이다. 탐라왕국과 제주섬은 시간적으로 다르지만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가장 큰 섬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구별되지 않고, 제주섬을 ‘삶의 자리(Sitz im Leben)’로 하는 개인은 도민이라는 면에서는 동일성을 가

지지만 각자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가치 판단에서는 다른 존재이다. 좁은 의미의 동일성이 적용되는 개인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생애를 통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리적·심리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며, 결국은 소멸된다. 반대로 개체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며 결국은 소멸될 것이지만, 생애를 통해 동일성을 유지한다.

한자문화권에서 정체성에 해당하는 개념은 본성(本性)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논리학의 ‘종차(種差)’와 유사하다. 하나의 개념, 사물을 정의하는 데는 내포적 정의(內包的定義, intensional definition)와 외연적 정의(外延的定義, extensional definition)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내포적 정의는 정의 대상의 본질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종차(種差)와 최근류(最近類)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제주섬을 “세계평화의 섬”이라고 할 때, “세계평화”는 “섬”에 속하는 종개념들 가운데 “제주”라는 종개념이 가진 특유한 성질이고, 섬은 “제주섬”이라는 종개념을 포섭(subsumption)하는 가장 가까운 유개념(類概念)인 최근류가 된다. 외연적 정의는 그 개념의 외연에 속하는 개체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대만(臺灣)이나 오키나와(沖縄), 하와이(Hawaii) 등을 들어 섬을 정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자(告子)가 성(性)을 ‘생지위성(生之謂性)’이라고 한 것은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가 타고날 때부터 가진 것이 정체성(本性)이라는 주장은 중국 고대의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장이 성무선무악설(性無善無惡說)이 된 이유는 양주(楊朱)와 묵자(墨翟)의 상대주의적 세계관과 맞서기 위해 공자의 절대주의적 세계관을 소환한 맹자 때문이다. 맹자는 각자가 타고난 것이 본성이라면 인간의 본성은 도덕 가치를 판단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다. 이로써 “그 밖의 차별성을 포함하면서도 어떤 점에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과 교육의 영향에 따라 차별성이 커진다(性相近 習相遠)”고 주장했던 공자의 소박한 인성론이 맹자에 계서는 “인간은 선한 존재다.”라는 주장으로 변하게 된다.

맹자는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네 가지 단서가 되는 마음을 제시했다. 사단심(四端心)은 공자가 건립하고자 했던 문화 질서의 힘인 인의예지(仁義禮智)가 현실에 존재한

다는 근거이면서, 그러한 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그것은 일종의 경향(傾向)이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타고난 정도나 실현 결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동일성이 확보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4단 그 자체가 도덕성인 것은 아니다. 4단이라는 성향을 실현해내야 비로소 4덕에 이를 수 있다.¹⁾ 이렇게 타고난 동일성만으로는 정체성을 확보 유지할 수 없으므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동양적 사유의 특징이다.

유학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올바른 힘(明德)을 제대로 드러내어야 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어야 하는데[親民],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까지[至善] 이르러야 한다”²⁾고 선언한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 발휘하여 사회화 과정을 잘 거쳐야 하며, 공적 생명을 잘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선언은 사회적 욕구를 발산하면서, 그것을 수렴적으로 실현하는 쌍방향의 중층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공적 영역의 출발점을 사적 영역, 곧 수신(修身)에 두면서, 그 밑바탕에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을 깔아둬으로써 치국(治國)하고 평천하(平天下)하는 정치지도자에서부터 수신(修身)하고 제가(齊家)하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각각의 층위에서 구현해야 할 의무를 수신(修身)으로 수렴하는 구조다.³⁾

이 구조는 “현존하는 각 지역의 정체성은 근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시각에서 재구성”되었고, “지역민들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금 목격하고 인식하며 이해하는 제주 정체성은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근대성이 도민과 타자의 기억과 시선, 욕망을 구성하고 해체하며 재구성하면서 도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 따라서 본래 어떠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와서 구성되고 해체되며 재구성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

1) 朱熹, 中庸章句 1: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2) 朱熹, 大學章句 經 1章: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3) 줄고, <유학의 공간 담론과 문화공간의 재생>, 《문화와 융합》 제38권 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19-24쪽.

해볼 수 있다.

이 발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구성되고 있는 ‘탐라 천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보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 원형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렇게 기억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이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는 데 주목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역사 이후 제주 천년의 정체성은 언제나 그랬듯이 경계인의 시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타자(他者)인 중앙정부로부터 강요된 시선이지만, 내적 기율로 작동되면서 스스로를 타자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중적 시선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꿈의 제주에 몰려드는 이주민들과 현실 제주에 뿌리내리고 있는 도민들의 욕망을 통해 오늘날 제주의 정체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제주의 정체성은 앞서 살펴본 모든 것들을 포섭하는 것이지만, 그것들과의 거리를 확인함으로써 근대성이 초래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잃어버린 기억, 탐라 천년의 정체성

2000년 2월 한국방송공사(KBS)에서는 프로그램 ‘역사스페셜’을 통해 ‘제주에 천년왕국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제주도 고대사를 다루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시문집인 《동문선(東文選)》을 인용하여 고려시대에 제주도가 외국이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삼양동(三陽洞) 선사 유적 발굴현장 답사를 통해 기원전후 1세기를 중심으로 한 고대 왕국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부여(扶餘) 송국리(松菊里) 마을 유적과의 비교를 통한 고대 한국과의 교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용담동(龍潭洞) 유적에서 발굴된 철제 무기를 근거로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있었으며, 삼국시대 왕성한 해상교류활동을 주도했던 이 해상왕국이 고려에 편입되고, 조선시대 왕권을 반납하는 과정을 거쳐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전달했다.⁴⁾

3년 뒤인 2003년 10월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JIBS)에서 추석특집 다큐멘터리 ‘탐

라왕국 제조명(1부)'과 송년특집 다큐멘터리 '탐라왕국 제조명(2부)'를 통해 제주도 고대사를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 1부에서는 제주의 삼성신화(三姓神話)를 소개하면서 고산리(高山里)에서 출토된 신석기 유물이 단양(丹陽) 수양개(垂楊介) 유적의 유물보다는 러시아 아무르강(Amur River) 유적의 유물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대 한국보다 앞선 독자적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무르강 일대 거주인들의 제주 유입 경로를 탐색한 후, 용담동과 상모리(上幕里) 유적 답사를 통해 이들이 제주 선주민과 함께 탐라왕국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⁵⁾

'탐라왕국 제조명(2부)'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세력에 초점을 맞춘 1부와는 달리, 탐라왕국을 중심으로 한 교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변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당(唐)나라 때의 역사서인 《당회요(唐會要)》를 인용해서 중국이 제주를 백제, 신라, 일본과 대등하게 대우하였음을 주의환기시키면서,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교역 기착지였다는 점을 삼양동 유적의 유물을 통해 밝혔다. 이어서 용담동 유적의 유물을 통해 금관가야와의 교류가 있었다는 점과 탐라왕국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를 통해 세 개의 부족사회가 통합된 왕국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 시기 취락 유적인 외도동(外都洞) 유적을 통해서도 탐라왕국이 선진적 수준의 문명을 구가했다는 점을, 황룡사 9층 목탑을 통해서도 삼국시대 탐라왕국의 위상이 높았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탐라국의 백제부흥운동 가담 사실과 일본과의 교류, 한국 편입 과정 등을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 문헌과 고분(古墳)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⁶⁾

'탐라왕국 제조명(2부)'의 결말에서 "이러한 탐라국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⁷⁾한 것은 이 발표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앞

4) 정재엽, 최낙진,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TV 다큐멘터리 비교 연구: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의 이야기 전개 및 내레이션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1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197쪽.

5) 정재엽, 최낙진, 위의 논문, 198쪽.

6) 정재엽, 최낙진, 위의 논문, 198-199쪽.

7) 정재엽, 최낙진, 위의 논문, 199쪽.

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것의 정체성은 그것이 생겨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우선 손꼽히기 때문이다. 제주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훨씬 오래된 천년왕국이 있었고, 그것이 21세기를 열어젖히면서 다시 한번 이목을 끌던 탐라(耽羅, B.C. 57-1402)라고 한다면, 그 시절 가지고 있던 것이 제주의 정체성 가운데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다는 추정은 합리적이다. 더구나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때, “제주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것이 제주의 미래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 고대사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제주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⁸⁾

제주도 고대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드러난다. 우선, 중앙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비중을 둔 데 비해, 지역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역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부심을 주는 내용에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방송이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프로그램, 곧 사회적 관점의 로컬리즘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⁹⁾ 그래서 지역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서는 제주도 고대사를 고대 한국과의 관계로 국한하지 않고 대륙과의 관계로 확장할 뿐 아니라, 고대 한국을 압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史實)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객관적 사실인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의 해석에서도 이렇게 ‘지역의 관점’이 작용할 수 있다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전승되어온 구비자료의 전승과 채록 과정은 물론, 오늘날 해석에서도 ‘지역의 관점’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고,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 외에 문헌자료가 취약한 것은 탐라 천년만이 아닌 한국 고대사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사상적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철학에서 고유(固有)는 본래 있던 것뿐만 아니

8) 정재엽, 최낙진, 위의 논문, 206쪽.

9) 정재엽, 최낙진, 위의 논문, 209-210쪽.

라 이해된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것도 제국주의자들이 제기한 한국철학사상부재론(韓國哲學思想不在論)에 맞설 본래 있던 것들에 대한 사료가 너무도 부족했던 탓이다. 그 이유로는 전화(戰火)에 의한 소실(消失)이 손꼽혔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실체와 본질에 주안점을 두던 전통적인 철학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해석학적 현상학이 등장하면서, “존재를 위한 현존재 자신의 투사(投射)들과 가능성들의 이해”가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로 향해져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해된 것으로서의 고유”도 “본래부터 있었던 고유”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제주는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우리나라 고대 철학사상의 중심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기록 신화로서 그리스·로마의 신화가 중심이라면, 구비 신화로서는 제주가 세계의 중심”¹⁰⁾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국신화 위주의 한국신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때, 도민의 삶과 역사가 담겨 있고 고대사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 구술들이 가득한 제주신화는 “신화의 수도(首都)”라고 할만하다. “창세신화, 운명신화, 만물창조신화도 풍부하고, 공동체문화를 담보한 당신화, 동일 직업집단(혹은 조상 집단)의 조상신화가 있고, 우주와 개인을 잇는 다양한 신화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사무가의 전승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까닭 가운데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은 고대에서 중세로의 시대적 전환 속에서 정치적 중심부와 정치적 입김이 쉽사리 미칠 수 있는 곳이 아닌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이다.¹¹⁾

‘섬’이 탐라 천년의 잃어버린 기억에서부터 오늘날 근대인의 욕망이 교차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동일성이 된다는 점은 제주 서사무가(敍事巫歌)의 세계관, 인간관, 윤리관을 검토하는 출발점이 된다. 제주 서사무가는 탐라 천년의 기억을 담은 심리적 동일성을 제공한다. 대표적 신화소인 천지개벽(天地開闢), 일월(日月)의 조정, 인간의 기원,

10)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91쪽.

11) 허남춘, 위의 논문, 92-93쪽.

천부지모(天父地母)의 결합, 이승차지 경쟁 등은 우주본체론(세계관), 인성론(인간관), 실천론(윤리관) 등 철학사상의 분류에 대응된다.¹²⁾ 그런데 이런 시각에 따르면, 제주 서사무가는 신들의 근본을 풀어내는 ‘무가 본풀이’로서 제주적인 독자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서사시가 가진 보편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¹³⁾ 앞서 살펴본 다큐멘터리에서 확인했듯이, 고대 한국과의 관계를 전제하면서도 때때로 고대 한국보다는 대륙과의 친연성이 더 있을 뿐 아니라 한때는 고대 한국을 압도하기까지 했다는 말하기 방식(narrative) 속에는 ‘섬의 독자성과 부속성’이 교묘하게 직조(織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서사무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시간적 동일성과 관련되어 있다. 신과 사람의 관계와 세상이 이루어진 내력을 밝히는 원시 서사시, 건국의 내력을 밝히는 고대 서사시, 예사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일상적 관심사를 다루는 중세 서사시 유형이 두루 분포하고 있는데, 각 유형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변형되기도 한다.¹⁴⁾ 구비전승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독립 해상왕국이었던 기억을 잃어버리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겪은 탓이기도 하다. 탐라 천년의 기억은 독자적인 왕국을 유지하던 시기에도 당시 중국과 한국 문헌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고려말 조선초 한반도에 복속된 시기를 거쳐 조선 통치질서의 확립에 따른 교화 활동이 강화되던 시기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현되는 그 시간’이 탐라 천년과 시간적 동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서사무가의 신화소를 철학적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우주본체론의 전형인 천지개벽의 신화소이다. 우리나라 신화가 세계창조 과정과 내력을 생략하고 건국 내력으로 건너뛰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근대화 과정에서도 탈(脫)중국이 그 증거로 요구할 정도로 동아시아 패권을 잡고 있던 중국

12) 김현선, 〈구비문학과 철학의 상관성〉, 《口碑文學研究》 제1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70쪽.

13)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탐라문화》 38호, 탐라문화연구원, 2011, 159쪽.

14) 허남춘, 위의 논문, 159-160쪽.

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사무가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창세신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대국가 성립 연원부터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건국의 내력을 밝힌 신화가 강조되면서 전설이나 민담의 영역으로 흡수되거나, 외래의 용어와 내용으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생략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비해 제주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부족공동체의 고유성을 강하게 지키며 당신본풀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중세사회로의 전환 속에서도 고대 자기중심주의의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지개벽의 신화소를 담은 서사무가를 보존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중세 국가의 직접적 통치를 받게 된 것은 고려 후반 혹은 조선 전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세 이념의 강요와 침투가 미약하고, 이런 까닭에 무속이 배척당하기보다는 무속 안에 유교와 불교를 포용하는 변화가 일어났다.”¹⁵⁾ 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에 비해, 중세 이념의 강요와 침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섬인 데다 건국의 연원으로 새삼스레 고대한국 또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천지개벽 신화소의 대표적인 예인 초감제에서도 이런 점이 확인된다. “천지혼합”, “개벽”, “자방”, “축방”, “인방”,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삼경”, “청, 흑, 황(이슬)”, “천지인황”, “동-청”, “서-백”, “남-적”, “중앙-황(구름)”, “천황, 지황, 인황(닭)”, “갑을동방” 등 도교와 유교의 용어로 치환되었을만한 것들을 빼면, 우선은 떡켜처럼 쌓여 있다가 그 틈이 벌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 다음으로는 한밤을 지나면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린 이슬이 합해지면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닭이 울어 첫 아침이 열리듯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남는다. 천지창조가 이렇게 새벽의 정경으로 묘사되는 것은 “새벽이 닭의 울음과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의 반영”¹⁶⁾이라고 분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탐라의 정체성이 사실상 없다.

15)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93쪽.

16)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제21호, 탐라문화연구원, 2000, 22쪽.

떡징이나 이슬과 닭 울음 소리 등 일출 직전 정경 등에서조차도 탐라 천년의 기억을 특정할만한 요소를 찾기 어려운 까닭은 경쟁 관계가 아닌 친연 관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서사무가에서 닭 토tem사상, 조화와 대립의 이원적 틀, 천신족 남성과 지신족 여성의 결합, 일월 조정과 이승차지 내기의 정치철학적 요소 등을 분석해내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¹⁷⁾ 심지어 “한국신화의 원형을 그대로 답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명관장의 신격에 대한 신화가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서사무가 속의 여성 주인공이 지닌 자발성·능동성·적극성”이 돋보이며, “중국식으로 변하지 않은 순수 우리말 신격”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과 귀신, 짐승을 분별하면서, 현실 세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 등에서도 경쟁보다는 상보적 관계가 강조된다.¹⁸⁾

상보적 관계가 강조되는 까닭은 탐라 천년의 기억을 상기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를 이국적(異國的)인 섬이기는 하나, 이국(異國)은 아닌 것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지금 제주는 근대국민국가 대한민국이 출범하기 직전에 겪었던 제주4·3과 2006년 7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최남단 제주섬과 그 주변도서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구역으로 편재되어 있다. 따라서 “재래의 수렵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결합되어 생산력을 발전시킨 토대 위에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해상활동을 통해 힘을 키워 작지만 당당한 나라”, 곧 “해상왕국”이라는 기억을 상기시켜, 고대 한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그 면면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¹⁹⁾

탐라 천년의 기억은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 문헌과 구비 전승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앞으로 더 풍부해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신이 저지른 원죄 때문에 인간세계가 부정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세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곳으로 보는 사고가 생겼

17)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24-34쪽.

18)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36-38쪽.

19)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94-95쪽.

고, 우리들 현실적 인간을 부정한 존재, 부도덕한 존재로 보는 사고와 직결된다.”는 등과 같은 분석이 탐라 천년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해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주와 자연과 인간세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처럼, 신이 인간에게 인간이 신에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로 사유”했다는 것이 “반복과 순환의 사유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고 분석하는 근거와 의미도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²⁰⁾ 요컨대 지금까지 채록되고 수집된 해상왕국 탐라 천년의 기억은 친연성보다는 독자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3. 경계인의 시선, 제주 천년의 정체성

천년을 유지해온 독립 해상왕국 탐라국은 조선 태종 2년(1402)에 탐라(耽羅) 성주(星主) 고봉례(高鳳禮, ?-1411)가 인부(印符)를 반납하고, 태종 4년 조선 정부에서 성주(星主)와 왕자(王者)의 직함을 좌도지관(左都知管)과 우도지관(右都知管)으로 개칭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에 병합되었다. 탐라국 건국신화인 삼성신화(三姓神話)에 따르면 탐라국 기원은 기원전 2337년까지 올라가는데, 학계에서는 고후(高厚, B.C.58-B.C.7)가 신라에 입조(入朝)하여 당시 탐라왕국의 유력한 세 세력이 각각 성주와 왕자, 도내(徒內) 작호를 받은 때로 본다. 그간의 고고학적 발굴과 문헌사료 검토를 통해 서력기원을 전후하여 건국된 탐라국이 동아시아 주변국가와 교역한 자취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한국과 중국의 고대왕국과의 관계에서 이중적 외교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쳐왔던 때이기도 하다. 북속 관계에 있는 왕조의 흥망성쇠를 같이 하면서도 거리두기에 힘썼기 때문이다.²¹⁾

20)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106-116쪽.

21) 줄고, <主體와 他者の 二重 視線으로 본 濟州의 朝鮮儒學>, 《동서철학연구》 제69호, 한국동서철학회, 2013, 213-214쪽.

탐라국이 한국에 병합된 것은 조선왕조 때지만, 그 이름을 잃은 것은 고려왕조 때였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탐라국은 태조 21년(938) 12월에 태자(太子) 말로(末老)를 고려에 보내 조회하였다. 이후 상당 기간 교류 기록이 없다가, 현종 2년(1011) 9월에 탐라가 주군(州郡)의 예에 따라 주기(朱記)를 하사해주기를 요청하자 당시 지방통치를 강화해 나가던 고려 정부가 허락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이때 곧바로 편입되지 않았고 숙종 10년(1105)에 군(郡)으로 개편되었다가, 의종 때에 이르러 현(縣)으로 강등되었다. 탐라는 군(郡)으로 개편되기 전까지만 해도 독립된 국(國)으로서 지위를 유지했는데, 이후 고려왕조와 결탁한 세력에 대한 반발 때문에 반란이 잦아지자 고려 정부는 현에서 군(郡)으로 회복시켰다가 고종 7년(1220)에서 16년 사이에 제주(濟州)로 승격시켰다.²²⁾

독립국의 지위에서 현으로 격하되었다가, 다시 현에서 군, 그리고 주(州)로 격상되는 과정에서 제주로 명칭이 바뀐 데는 “독립왕국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분리운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고려 정부의 적극적인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수(良守)의 난(의종 22, 1168년)에서 확인되었듯이 양씨 세력이 고려왕조와 적극적인 협조 관계에 있던 고씨 세력을 몰아내고 성주의 작위를 회복하는가 하면, 삼별초(三別抄) 항쟁기에는 삼별초와 함께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저항하는 등 토착세력도 양분되어 이중적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고려 정부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앙정부에 파견된 지방관이나 토착세력인 성주족을 몰아내기 위한 반란이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무사(安撫使)와 새로운 지방관을 파견하면 쉽게 진압되었다는 기록에 따르면, 독립을 회복할 여력을 고려말부터 상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이렇게 해서 고려에 복속된 제주는 남송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였으므로, 원나라는 제주를 남송(南宋)과 일본 정벌의 전초·병참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제주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로써 제주는 화주(和州, 합

22) 김창현, 〈高麗의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韓國史學報》 제5호, 고려사학회, 1998, 311-338쪽.

23) 김창현, 위의 논문, 338-342쪽.

경남도 영흥)·서경(西京; 평안남도 평양)과 함께 몽골의 직할령이 되었다. 이후 원 간섭기 내내 제주에는 고려와 몽골을 수차례 오가며 귀속되었다. 실질적으로는 고려와 몽골의 양국에 이중 귀속되는 처지였지만, 그 덕분에 상당수의 몽골족이 제주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목축업이 크게 성행하고, 인구 규모도 확대되는 등 크나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해촌(海村)에 집중되었던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업활동은 산촌의 발달과 함께 반농반목(半農半牧)을 포함하게 되었고,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단위 개편과 법화사 중창 등이 수반되기도 했다.²⁴⁾

몽골족과 제주, 원나라와 고려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제주에는 고려 공민왕(恭愍王, 재위 1351-1374)의 반원정책이 단행되면서 격전지가 되었다. 원 제국을 밀어내고 대륙을 차지한 명(明)나라가 개입하면서부터 고려의 정벌 대상이 된 것이다. 제주 정벌군을 이끌고 입도한 최영(崔瑩, 1316-1388)은 한 달여간 목호(牧胡) 정벌 전투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주 사람의 많은 희생이 수반되었다. 제주 토착세력은 고려의 제주 관할에 참여해 목호 잔존세력과 그에 동조한 제주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단했다. 이로써 제주는 명실상부하게 고려에 재귀속되었는데, 이후 목호 잔존세력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목호와 더불어 살았던 사실 자체도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²⁵⁾ 당시 국제적인 문화교섭을 이루어낸 제주의 정체성은 부정되고 잊히게 되었다.

개국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조선 정부의 관료들은 토착 지배세력인 토관마저도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률과 제도를 알지 못하는(不識字不知法制)” 이들로 낮추어 보았다. 그래서 교육을 내세워 토관의 명칭을 개정하는 등 토착세력을 지방통치 조직 안으로 정비하면서 유교적 통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물론, 건국 초기에 파견된 제주목사는 토착세력들과 관계 호전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²⁶⁾ 하지만 중앙집권체제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태종 때부터 목사에게 권력이

24) 김일우, 〈고려후기 濟州·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韓國史學報》 제15호, 고려사학회, 2003, 46-65쪽.

25) 김일우, 위의 논문, 65쪽-70쪽.

26) 오수정, 〈조선 초기 제주 통치 체제 고찰〉, 《濟州島研究》 제50집, 제주학회, 2018, 269-270쪽.

집중되기 시작했고, 유교식 교화정책이 본격화되었다. 1목 2현에 각각 하나씩의 향교(鄕校)가 세워졌고, 변두리 유생을 위해 김녕과 명월에 따로 정사(精舍)를 두는가 하면 성(城) 내에는 향학당(鄕學堂)을 두는 등 사학(私學)을 설치하기도 했다.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과거시험 준비 기관 및 대민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²⁷⁾

관 주도의 교화 활동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온 인사들의 활동도 변방 제주의 정체성을 국가질서 속에 편입시키는 데 한몫했다. 특히 제주도는 조선시대 3등급의 유배지 가운데 가장 원지(遠地)에 해당하는 곳이었으므로, 정치와 학문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유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 교육에서 중앙관직에서 밀려나 낙향한 인사나 유배온 인사들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유배인사들이 당시 제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를 절해고도의 유배지로 인식하였던 이들이 제주와 제주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주 오현(五賢) 가운데 동계(桐溪) 정온(鄭溫, 1569-1641)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도 제주를 ‘죄를 지은 자가 살기 마땅한 곳’, ‘바다에 들어온 지 9년이 되어 도깨비와 무리가 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²⁸⁾

이 시기, 곧 양란 이후 국가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도 조선의 국가질서가 제주에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18세기 초에 입도한 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신당(神堂)철폐 사건에서도 증명된다. 《탐라기년(耽羅紀年)》에 따르면, 이형상 목사는 광양당 등 삼읍에 걸쳐 있는 음사(淫祀)와 절집(佛宇) 130여개를 헐고 무당들 400여명을 농사짓게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제주 사람들이 이 업적을 기려 공덕비를 세웠고, 순조 19년(1819)에는 유생들이 진정하여 영혜사(永惠祠)에 배향된 일이 있다고 전한다.²⁹⁾ 이형상 목사는 숙종 28년(1702) 6월 경주부윤에서 전보되어 제주에 들어왔는데, 《탐라순력

27) 참고, 〈主體와 他者의 二重 視線으로 본 濟州의 朝鮮儒學〉, 218-219쪽.

28) 참고, 〈한국학의 전통에서 본 제주 바람·바람, 흐름의 철학적 접근〉, 《탐라문화》 43호, 탐라문화연구원, 2013, 119-122쪽.

29) 참고, 〈主體와 他者의 二重 視線으로 본 濟州의 朝鮮儒學〉, 217쪽.

도》에 신당이 불타고 있는 그림에 1702년 12월 20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도입 6개월만에 신당을 철폐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신당철폐 이전 6개월간 제주의례와 관련된 두 편의 장계를 올린 것으로 보건대, 신당철폐라는 조치는 무속신앙을 철폐하겠다는 것 보다는 국가 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음사(淫祀)는 형식과 내용, 주체 면에서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가리키는데, 조선시대 제주에 들어온 인사들은 제주 풍습 가운데서도 음사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조선 왕조는 건국 이후로 정치 이데올로기인 유교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불교, 무속과의 전면전을 펼쳐왔지만, 왕실에서부터 불교와 무속을 신앙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사로이 행해지는 의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다. 민간의 신앙과 의례 행위를 유교 의례 체제 속으로 끌어들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³¹⁾ 특히 유교는 지식인의 이성적 판단과 윤리적 실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 종교적 욕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형상 목사가 목도한 제주의 상황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국가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판단되었던 것이다.³²⁾

이와는 반대로 유산(遊山) 풍조가 급격하게 성행하면서 제주는 중국 전국(戰國)시대 이상향 가운데 하나인 영주(瀛洲)로 여겨지게 되었다. 전쟁 이후 기존질서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내용의 국가재조론(國家再造論)이 나오자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려는 지식인층과 현실에서 도피하여 안분자족(安分自足)하려는 지식인층이 모두 산(山)을 동경하여 그곳에서 수양하면서 노니는 풍조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한라산은 금강산, 지리산과 함께 신선이 산다는 이상향이 되었는데, 그 덕분에 배를 접안하기 힘들 정도로 거센

30) 김새미오, 〈병와 이형상의 제주지방 의례정비와 음사철폐에 대한 소고〉, 《大東漢文學》 제63집, 대동한문학회, 2020, 126쪽. 이때 올린 장계는 〈제주청사전변통장(濟州請祀典變通狀)〉과 〈제주청사전변통장[제도](濟州請祀典變通狀再度)〉로, 제주지역에서 불가능한 의례는 폐지하고, 가능한 의례는 공식화해달라는 취지를 담았다.

31) 조성윤, 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호, 탐라문화연구소, 1998, 204-205쪽.

32) 조성윤, 박찬식, 앞의 논문, 207쪽.

바람이 부는 절해고도 유배지인 제주도도 영주십경(瀛洲十景)으로 상상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음사폐지를 통한 풍속 개량과 민중 교화를 주장했던 이형상 목사도 1694년 도입한 야계(冶溪) 이익태(李益泰, 1633-1704)의 제주십경과는 다른 제주의 팔경을 손꼽을 정도였다.³³⁾

제주를 선경으로 묘사한 영주십경의 제목과 차례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리된 것은 제주 사람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 1823-1881)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이한우의 시선에서는 제주도에 부임했거나 유배된 외지사람들의 시선이 발견된다. 물론 그는 전주 이씨 계성군파의 입도조(入島祖) 이팽형(李彭馨, 1576-1607)의 후손으로, 당시 제주에 유배와 있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가은(嘉隱) 목인배(睦仁培, 1794-?) 등과 교유가 있었다. 그리고 평생 여덟 번씩이나 바다를 건너 과거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제주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늘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를 보는 외지인의 시선에 단순히 공감했다기보다는 외지인의 시선으로 제주를 봄으로써 제주를 ‘이중으로 낫선 공간’으로 재구축해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한우의 일생 여정은 자신의 중심성을 보면서 타자의 중심성을 수용하는 시도였기 때문이다.³⁴⁾

이한우보다 한 세대 앞선 일재(一齋) 변경봉(邊景鵬, 1756-1824)은 제주에서 유학을 배워 과거시험에 응시하면서 한양을 오가다가 늦은 나이에 급제하여 내직과 향직을 오갔던 인물이다. 그는 제주사람이면서 제주적이지 않은 것을 내면적으로 잘 융합시킴으로써 전형적인 이중문화 정체성을 확보했다. 이것은 제주문화라는 원문화를 조선유학이라는 이주지문화와 조절하면서 내적으로 발산과 수렴이라는 중층적 층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이 중층적 구조는 그가 조선유학을 공부하면서 익혔던 《대학》 삼강령과 팔조목의 구조와 유사하다. 물론 그는 조선유학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주문화에 대해서도 자연경관, 민간요법과 민간신앙, 양

33) 줄고, 〈瀛洲十景으로 본 朝鮮 儒學者의 仙境 인식과 그 태도〉, 《대동철학》 제59집, 대동철학회, 2012, 137-148쪽.

34) 줄고, 〈梅溪 李漢雨의 ‘낫선 공간’으로서 瀛洲〉, 《역사민속학》 3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73-100쪽.

란 이후 사회경제현황, 주요 인물과 사적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기가 제주사회가 무속에서 유학으로 변동하는 시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³⁵⁾

한편, 제주 정체성의 기층을 차지하는 민중들의 삶에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양란 이후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민란이 전국적으로 빈발하였는데, 특히 제주 민란은 그 목표가 조세 수취 구조의 개혁이나 관리의 교체가 아니라 조선 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로 확장되었다. 국가질서가 신당철폐와 같은 방식으로 제주 사람의 현실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기 민란의 원인은 토착지배세력이나 중앙정부의 지배권에 대한 각각의 불만이라기보다는 이중지배구조를 공고하게 구축해나갈 것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혼인관습이나 분가관습, 채무승계관습, 제사상속관습, 재산상속 관습 등이 조선 유학과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용된 데서도 확인된다.³⁶⁾ 기층민중의 층위에서도 자신의 중심성을 보면서 타자의 중심성을 수용하는 경계인으로서의 시선이 수용된 것이다.

제주 천년의 시선은 제주를 삶의 자리로 하는 제주 사람이 중앙정부에서 강요된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게 하였다. 탐라 천년과는 달리 독립국이 아닌 영토로 공식 역사 기록에 등장하지만, 조선 초기까지는 여전히 본국과는 분리된 자치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제주를 경계 너머의 경계, 곧 절해고도의 유배지로 만들었는가 하면,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인 영주(瀛洲)로 상상하게 했다. 바로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경관 가운데 한 요소로 배치시킬 수 있었던 까닭은 제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공감의 부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속 개량과 민중 교화의 대상으로

35) 줄고, 〈제주의 조선유학자 변경봉(邊景鵬)의 이중문화정체성〉, 《문화와 융합》 제39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11-36쪽.

36) 줄고, 〈主體와 他者の 二重 視線으로 본 濟州의 朝鮮儒學〉, 224-225쪽. 제주도의 전통적인 관습이 조선 유학과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민중들의 자발적인 실천이었다기 보다는 중앙에서의 요구와 토착 세력의 수용이 접점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 타자화, 경관화 된 제주 사람들을 국가 질서 안으로 포섭하려는 일방적인 시선과 엇갈리는 민중의 시선은 반란이라는 실천 행위로, 그와는 반대로 국가 질서 안에 포섭된 토착 세력의 시선은 경계인으로서의 제주 보기라는 실천 행위로 드러났다는 동일성을 가진다.

4. 근대인의 욕망, 현실 제주의 정체성

동아시아의 근대화는 서세동점(西世東漸) 세력에 의해 강제되었기 때문에 모더니즘(Modernism)과 같은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과 제국주의적 확장이라는 ‘근대적 욕망’에 대한 자구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자구책 모색’이라는 내부의 자발적 태도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분석은 자구책 모색의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강제였다는 점에서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한족(漢族)의 마지막 제국 명(明)을 무너뜨리고, 다민족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종교개방정책을 시행했던 청(淸)나라 황제 강희제(康熙帝)가 신앙의 순수성을 내세운 로마 교황청의 정책을 질책하면서 선교금지정책으로 돌아섰지만, 그로부터 150년만에 그리스도교 포교권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태평천국의 난 등으로 왕조의 해체가 가속화된 것은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 무력을 앞세운 선교사들의 선교가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청나라의 그리스도교 포교 자유화 이후에도 한동안 선교금지정책을 유지하던 조선 정부는 1876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朝日守護條規) 체결과 그에 따른 원산과 인천 개항,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을 통해 선교 자유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서 박해의 시대를 견뎌낸 한말 천주교회는 개신교회와 함께 교세를 확장해나갔지만, 오히려 민중 계층에서 천주교회 배척의 움직임이 빈발했다.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帑書事件, 1801) 이후 서양침략세력의 앞잡이로 인식되었던 조선 천주교회가 선교 자유화를 기점으로 세력화되면서 이들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해시대를 견뎌내기 위해서 내세신앙을 강조해왔던 것도 한몫했다. 1835년 이후 입국한 프랑스 선교사들이 내세신앙을 강조

하면서 천주교인들은 현세에 대해 철저히 부정하면서 내세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현세의 질서에 대한 개혁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사회 개혁을 염원하던 민중으로부터 고립되었다.

한국천주교회 박해시대에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인 백서사건의 주인공 황사영(黃嗣永, 1775-1801)의 부인 정난주(丁蘭珠, 1773-1838)는 목포를 거쳐 제주도 대정현으로 유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교사들의 선교 이전에도 제주도에는 천주교인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배인이었던 정난주의 포교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뫼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1854-1933) 주교가 “1866년 이전 이 섬에 몇몇 크리스찬들이 희소하게 살았으나 선교사들이 1899년에 이 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자취나 기념될만한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보고했듯이 공식선교는 1899년에야 이루어졌다. 이때 파리의방전교회의 페네(C. Peynet, 1873-1948; 裴嘉祿)신부와 김원영(金元永, 1869-1936) 신부가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제주 사람들이 “거칠고, 다분히 미개하며, 타향인들을 불신하고, 무엇보다도 미신 행위에 열중”한다고 보았다.³⁷⁾

제주도 선교에 나선 선교사들의 이런 시선은 당시 서세동점의 침병 역할을 했던 서양 선교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요 활동과 관심이 종교적인 포교에 있으므로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선교지의 문화보다는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선교 활동을 통해 ‘문명화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치외법권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필요한 경우에 모국에 함포외교를 요구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³⁸⁾ 이와 함께 뒤늦게 아시아 선교에 뛰어들어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

37) 김선필, 김치완, 〈한말 천주교회 조선인 성직자의 제주 문화 인식〉, 《문화와 융합》 제40권 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145-146쪽.

38) 김선필, 김치완, 위의 논문, 142쪽. 1891년 대구교안이 발생하자 뫼텔주교는 프랑스공사에게 요청하여 극동함대 소속 군함을 제물포로 이동시킨 일이 있다.

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개신교 선교사들과 경쟁하였다. 이러한 선교방식에 위협을 느낀 지역민들은 선교사들이 의료와 복지라는 매우 유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경쟁하게 된 것으로 인식하고 선교사들과 교회를 경계하였다.

이러한 위기감은 구교운동(仇敎運動)인 교안(敎案)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천진 교안(天津敎案, 1870)에서 확인되듯이 의혹 제기 수준에서 시작되었던 일을 서구 제국들이 침략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교회와 선교사들은 외국 침략자의 구체적인 표상으로서 중외의 대상이 되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신축교안(辛丑敎案, 1901)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신축교안의 표면적인 발생 원인은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 소속의 봉쇄관 강봉헌(姜鳳憲)이 천주교도 및 유배인들과 결탁하여 탐학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프랑스와 일본 등 제국주의의 이해가 제주도에서 충돌한 것이다. 국력확장을 위해 선교의 확대를 꾀했던 프랑스와 자국어민의 제주해역 조업을 추진하였던 일본의 욕망이 충돌한 것이다. 이것은 봉쇄관과 교회 등에 의해 벌어지는 이중착취를 벗어날 방안을 모색하던 제주도민들을 일본 정부와 어민이 지원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³⁹⁾

신축교안 발발 직후 민회소에서 작성한 등장(等狀) 가운데 교폐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주민의 재산 탈취와 채무 무시, 봉쇄관 마름으로 나선 교민들의 강제 징세, 교회 입교 강요, 토착신앙 배척, 매장 풍습 무시 등으로, 주로 경제적인 폐단이 제기되고 있지만 종교문화적 요인도 강조되었다. 그런데 민군(民軍)이 제주성에 입성한 후, 교민과 봉쇄관의 연결에 따른 토지소유권 탈취, 교회 입교 강요, 재산 탈취, 관권 무시 등으로 그 내용이 변화했다. 교민들을 주민들의 재산권을 빼앗고 관의 명령을 거부한 범법자로 상정한 것인데, 봉쇄관에 저항한 민란이 아니라 교폐에 분연히 일어난 창의(倡義)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후 공식보고서 등에서 제주도민의 토착신앙 및 문화와 관련된 교폐가 언급되지 않은 것도 교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건

39) 줄고, 〈문화적 형식으로 '재현'된 2010년대 근대해항도시 제주의 표상〉, 《島嶼文化》 제48집, 목포대학교 도시문화연구원, 2016, 146-147쪽. 신축교안 당시 일본어민이 무기를 공급했고, 일본정부는 프랑스선교사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제주에 파견할 승려를 모집하는 등 국가주도의 정책을 기획했다.

해결에 유리하다는 조선 정부와 관리의 인식 때문이었다.⁴⁰⁾

신축교안 발생과 후속 처리 과정에서 제주 사회는 평민(平民)과 교민(敎民)으로 양분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불안해진 선교 환경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은 제주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천주교회 측은 신축교안의 배상금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도민의 요구에 따라 반환했고, 선교 사업의 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심을 돌렸다. 당시는 조선 정부가 교육을 통해서 국권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시기로, 학생 교육에 대한 제주 사회의 수요가 증대되자 제주군수와 개신교 선교사들도 앞다투어 학교를 세우고 있었다. 이미 1903년부터 여학당을 운영하고 있던 천주교회는 신성여학교(晨星女學校)를 설립했다. 교육사업은 선교사들의 문명화 사명에도 부합했을 뿐 아니라, 여성 교육에 대한 제주지역의 반응도 기대 이상이었다. 여기에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준 일본의 지원으로 천주교회는 신축교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⁴¹⁾

경술국치(庚戌國恥) 당시만 하더라도 천주교회가 조선 정부보다는 문명국으로 생각했던 일제의 강제병합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던 데 비해, 최익현(崔益鉉, 1833-1906)과 김윤식(金允植, 1835-1922), 박영효(朴泳孝, 1861-1939)로 이어지는 근대 지식인들의 제주 유배를 통해 제주 사회에 개화사상이 보급되면서 1909년 제주의병운동,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1919년 제주 3·1운동 등 항일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를 바탕으로 1920년대 접어들면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제주신교육운동이 일어났으며, 제주인의 일본 진출에 따른 노동운동이 결합된 민족운동인 사회주의사상운동이 일어났다. 1930년대에는 대중적인 항일운동인 해녀항일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기점으로 제주인의 항일투쟁이 본격화되어 제주야체이카사건과 일본반제동맹활동 등이 일어났다. 1940년을 전후해서는 기존의

40)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에 나타난 敎弊와 '物故者'〉, 《역사민속학》 제27호, 역사민속학회, 2008, 98-102쪽.

41) 김선필, 〈종교와 지역 사회의 공존 - 20세기 전반 천주교 선교사들의 제주 문화 인식을 중심으로 -〉, 《종교연구》 제80집 제1호, 한국종교학회, 2020, 43-78쪽.

항일운동이 종교인의 항일운동과 외부항일운동이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확장되었다.⁴²⁾

이러한 항일운동 정신은 제주 4·3에 이어졌다. 제주 4·3은 아직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국가를 잃어버린 국민을 근대적 개인으로 계몽하려고 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난 직후에 발생해서 남한단독정부수립을 통해 탄생한 반쪽짜리 근대국가가 냉전체제구축을 위해 수행했던 대리전이 종료된 후에야 끝났다. 제주 4·3의 발생과 종료는 저항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제주 4·3을 이끌었던 이들은 경찰의 탄압 중지, 남한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수립 반대, 그리고 통일정부수립을 내걸었고, 새로 수립될 국가(정부)가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국가 형태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과 기대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데서 찾으려는 것을 반대했다. 그 일환으로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국회의원 단독선거거부 운동 결과 단독선거가 무산된 유일한 지역이 제주였다. 동서냉전체제의 주변부인 대한민국의 주변부였던 제주는 이렇게 해서 냉전체제의 경계지점으로서 중심의 자리에 들어섰다.⁴³⁾

제주 4·3은 태동기에 있던 근대국가가 자행한 폭력이요, 그러한 폭력에 당당하게 맞선 제주 사람의 저항이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이승만 전대통령이 선언했듯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것이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근대국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영별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 점에서 ‘제1공화국의 성립이 하나의 악순환 구조가 성립하였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은 적확하다. 식민지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로 민족은 고사하고 국민으로부터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국가권력이 지속적으로 국민을 동원하면서도 정작 국민이 아닌 냉전 질서의 압도적인 규정력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은 외세에 의해 남북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잘못”이 명백하기 때

42) 심옥주,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6집, 2013, 337-345쪽.

43) 줄고, 〈유가(儒家) 역사관으로 본 부마민주항쟁과 제주4·3〉, 《문화와 융합》 제41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1052-1053쪽.

문이다.⁴⁴⁾

제주 4·3은 발생 이후 40여 년 동안 국가가 기억의 공개를 억압해 온 “조용한 사건”이었지만, 이렇게 억압적인 상황이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기억투쟁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직후에도 재일작가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1957)이 발표되면서 외부에서 조용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4·19 혁명 직후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의 활동을 기점으로 ‘제주도 양민학살 국회조사단’의 활동을 이끌어 내는 등 진상규명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진상규명 논의가 20여 년 동안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기영의 《순이 삼촌》(1978) 등이 기억투쟁을 이끌었는데,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함께 사적인 기억과 인식의 복권이 시작되었다. 1989년 5월 제주4·3연구소 발족, 1990년 4·3추모제 개최, 1992년 제주 4·3쟁점의 전국화 추진, 1993년 제주도의회 4·3특위 출범, 1997년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 발족, 1999년 국회 4·3특별위원회 구성 및 제주 4·3특별법 통과 등을 거쳐 2003년에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채택 및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있었다.⁴⁵⁾

제주 4·3이 조용한 사건으로 억압되고 있던 시기에 제주 4·3을 자행한 근대국민국가는 제주를 타자(他者)에 의해 소비되는 대상으로 재구성했다. 1963년 ‘제주도건설연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제주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듬해인 1964년에는 ‘관광’을 기본 방향으로 한 ‘제주도 건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관광에 초점을 맞춘 개발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국민 관광을 기반으로 국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제주 개발이 추진되었는데, 그 때문에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년간 이어졌던 제주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도민적인 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때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중앙정부 또는 관(官) 주도의 하향식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 추진, 외부 자본과 외재적 방법에 의존하는 개발 진

44) 줄고, 〈유가(儒家) 역사관으로 본 부마민주항쟁과 제주4·3〉, 1028-1031쪽.

45) 양정심, 〈제주4·3의 기억투쟁, 평화와 인권운동 연대하기〉, 《제주대학교 인권심포지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9, 148-155쪽.

행, 경제적 이익의 역외 유출 등 제주가 이중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⁴⁶⁾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도 제주가 삶의 공간이 아니라, 소비되는 공간으로서 이중적인 소외를 겪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사들이 설립되어 제주 항공편이 확대된 2006년을 전후로 제주 는 그동안 변방으로서 겪었던 타자의 설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열풍’의 중심에 놓여 있는 듯이 보였다. 2005년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각종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외교 중심이자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 해결하는 완충지대로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제주 올레 1코스가 개장되어 전국적으로 올레 열풍이 일어났고, 2010년에는 제주 이주 열풍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들 열풍은 한국식 장기불황과 그것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이지, 제주가 말 그대로 중심에 놓인 것은 아니었다.⁴⁷⁾

근대에 각종 열풍의 중심에 선 제주는 개발 광풍으로 상실당한 시간과 공간이 ‘재현’ 되는 곳이다. ‘모던(Modern)’, 곧 서양 근대는 동양을 계몽의 대상으로 전제함으로써 모던을 이식받는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정당화했다. 제주처럼 모던과의 거리두기가 충분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욕망은 적극적으로 드러났다. 그 욕망은 1960년대 미국이 한국에 근대화론을 전파하고, 근대화를 위한 물적, 인적, 심리적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흥산업국(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내부적 욕망을 부추겼다. 모던과 그것이 이식된 우리의 욕망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삶의 방식이 이른바 IMF 사태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해체되는 시점에 가장 강렬하게 표출되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한 번도 중심을 차지하고 선 적이 없었던 제주는 지금도

46) 줄고, 〈화엄(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제주문화공간 분석〉, 124쪽.

47) 줄고, 위의 논문, 122-123쪽.

바로 “상실당한 시간과 공간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지연된 개발의 광풍”을 겪고 있다.⁴⁸⁾

5. 시공간이 재현되는 경계 너머의 경계

지금까지의 제주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인 ‘제주 정신’에 관한 연구와 제주문화 정체성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공감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등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나뉜다. 제주 정신과 관련한 초기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강인불패(불굴)의 정신, 근검·절약·수분(守分)의 정신, 자립·자위의 정신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열등의식, 배타심 등이 공통적으로 손꼽혔다. 이후 삼무(三無)정신과 함께 주남정신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다는 삼무정신은 석주명의 제주도수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면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규범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 제주 미래를 위한 진취적인 시대정신으로 개체적 대동주의와 자립주의를 엮어낸 해민(海民)정신이 제안되었지만, 환경결정론이 갖는 해석상의 오류와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할 우려 때문에 비판되었다.⁴⁹⁾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소쉬르(F. de Saussure)의 언어기호학에 기반 문화해독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른바 “제주문화문법 탐색을 통한 제주 정체성 검토”가 제안되기도 했다. 사회제도로서의 랑그(la langue; 언어)는 쉽사리 변치 않은 공시적(共時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주류문화를 구조화시키는 문화 문법(cultural grammar)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8) 줄고, 〈문화적 형식으로 ‘재현’된 2010년대 근대해항도시 제주의 표상〉, 166-168쪽. 모던을 모델로 해서 따라잡는 ‘追隨的 근대화’와 이에 역행하는 ‘반동적 요인’을 제거하는 ‘對抗的(counter) 근대화’의 병행 추진도 이중적 자기 소외로 볼 수 있다.

49) 강봉수, 〈제주정체성으로써 ‘제주정신’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제주문화문법〉, 《제주도연구》 50집, 제주학회, 2018, 187-194쪽.

이에 비해 빠를(*la parole*; 말)은 시대변화와 개성에 예민한 결합체적 사슬(*syntagmatic chain*)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문화에는 문화문법, 결합체적 사슬, 문화문법과 결합체적 사슬이 얹혀서 존재하는 일상생활양식의 총체라는 세 층위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탐색한 제주문화문법은 평등성, 현세성, 합리성, 온정성(호혜성), 묘합성(융합성) 등인데, 이것과 결합체적 사슬이 잘 맞으면 새로운 문화 창조와 사회발전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⁵⁰⁾

이렇게 제주 정체성이 제주 정신과 직결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지만,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주 정신에 대한 연구를 총괄 비교하면서 제주문화문법 탐색을 통한 제주 정체성 검토를 제안한 선행연구의 노고와 결과에는 일정 정도 공감한다. 특히, 문화가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 현시적인 것 등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분석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출한 제주문화문법의 각 항들에 대해서는 제주 정신에 대한 연구들과 꼭 같은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제주의 무속신화, 가족제도, 의·식·주의 특성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재해석해서 도출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일종의 이념형(*ideal-type*)으로서 기능한다고 한다면 선행연구가 지적했던 환경결정론이 갖는 해석상의 오류와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할 우려에다, 제주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성으로 검증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발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제주의 철학사상과 관련되는 논의를 탐라와 제주, 그리고 현재라는 세 시대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을 잃어버린 기억, 경제인의 시선, 근대인의 욕망이라는 철학적 주제로 치환하여 검토해보았다. 고자의 주장처럼 생겨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체성이라고 할 때, 서사무가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하더라도 탐라의 역사는 잃어버린 기억으로서, 지금도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 왕조에 귀속되어 제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국적(異國的)인 경관을 가지고 있는 타자(他者)로서 이중적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50) 강봉수, 위의 논문, 202-218쪽.

서구의 근대가 동양에 이식되던 서세동점의 시기, 이미 모던을 성취한 서구 근대인들의 욕망과 그들이 이식한 모던을 기율화한 내부적 욕망이 부딪히는 각축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 주제가 제주의 공시/통시/현시로서 지금도 동시적으로 포개지고 있다는 것이 이 발표의 출발점이다.

우선 탐라 천년의 정체성은 고대 해양도서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독립된 섬이라는 정체성은 탐라 천년의 잃어버린 기억에서부터 오늘날 근대인의 욕망이 교차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동일성이 되는데, 심지어 오늘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주 서사무가의 심리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독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하기 방식에서는 ‘섬의 독자성과 부속성’이 교묘하게 직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서사무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고대 한국과는 달리 천지개벽의 신화소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섬이었기 때문이요, 중세 이념의 강요와 침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탐라 천년의 기억은 고대 한국보다는 대만이나 오키나와와 지정학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 천년의 정체성은 한국의 변방이라는 지역적, 심리적 경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려 왕조에 복속된 변방의 섬은 남송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였으므로, 원제국의 직할령이 되어 이중귀속의 처지였지만, 그 덕분에 변방의 섬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활발한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제국이 쇠퇴하고 고려 왕조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정벌의 대상이 되었고, 교류의 기억은 망각되었다. 이렇게 해서 탐라라는 이름을 버리고 제주로서 고려 왕조에 귀속되었지만, 국가경계를 넘은 경계로서의 독자성 유지의 요구는 지속되었다. 고려에 비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조선 왕조는 이러한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을뿐더러 풍속 개량과 민중 교화 정책을 통해 국가질서 안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양란 이후 조선 유학자들은 제주를 국가질서 밖의 이상향으로 상상했는데, 이런 시선이 제주 사람에게 반영된 결과가 영주십경이다.

마지막으로 현실 제주의 정체성은 서양 근대인 ‘모던’을 둘러싼 욕망의 실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근대는 모던의 욕망을 품은 유럽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강요되었는데, 그 선봉에는 천주교회의 선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의례논쟁을 겪으면서 신앙의 순수성에 매몰되었고, 선교 활동을 통해 문명화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제국주의 국가의 욕망과 교회의 욕망이 ‘모던’이라는 명분을 만나면서 변방의 변방인 제주는 국가와 교회 양쪽으로부터 근대화의 대상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게 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변방으로서 소외되고 수탈당해온 제주 사람의 저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근대국민국가 대한민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제주 4·3으로 이어졌다. 태동기에 있던 국가권력이 자행한 폭력에 당당하게 맞선 제주 사람의 저항은 기억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개발독재에 이어 “지연된 개발의 광풍”을 겪고 있는 지금에도 이러한 저항은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제주의 정체성, 곧 탐라 천년과 제주 천년에 이어,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동일성은 섬으로서의 독자성과 부속성이 교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국내의 섬들과는 구분되지만, 오키나와나 대만 등 고대 독립국 지위를 유지하다가 병합된 섬들과 동일하다. 특히 이들 섬이 병합 과정, 또는 서세동점시기에 강요된 모던과 그로부터 태동한 근대국민국가 수립 과정에서 유사한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동일성보다는 이들 섬 사이의 동일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오키나와나 대만 등과 제주의 역사, 문화, 철학사상에 대한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고려 시대에 복속된 이래 바다를 경계로 한 한국의 경계 너머의 경계로서 오래된 미래의 시간과 장소를 재현하는 실천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점이 탐라와 제주, 현실 제주가 가진 동일성일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봉수, <제주정체성으로써 '제주정신'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제주문화문법>, 《제주도연구》 50집, 제주학회, 2018, 181-225쪽.
- 김새미오, <병와 이형상의 제주지방 의례정비와 음사철폐에 대한 소고>, 《大東漢文學》 제63집, 대동한문학회, 2020, 103-140쪽.
- 김선필, 종교와 지역 사회의 공존 - 20세기 전반 천주교 선교사들의 제주 문화 인식을 중심으로 -, 《종교연구》 제80집 제1호, 한국종교학회, 2020, 43-78쪽.
- 김선필, 김치완, <한말 천주교회 조선인 성직자의 제주 문화 인식>, 《문화와 융합》 제40권 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135-166쪽.
- 김일우, <고려 후기 濟州·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韓國史學報》 제15호, 고려사학회, 2003, 45-74쪽.
- 김창현, <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韓國史學報》 제5호, 고려사학회, 1998, 309-345쪽.
- 김치완, <梅溪 李漢雨의 '낮선 공간'으로서 瀛洲>, 《역사민속학》 3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73-100쪽.
- 김치완, <문화적 형식으로 '재현'된 2010년대 근대해항도시 제주의 표상>, 《島嶼文化》 제48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6, 137-174쪽.
- 김치완, <瀛洲十景으로 본 朝鮮 儒學者의 仙境 인식과 그 태도>, 《대동철학》 제59집, 대동철학회, 2012, 131-155쪽.
- 김치완, <유가(儒家) 역사관으로 본 부마민주항쟁과 제주4·3>, 《문화와 융합》 제41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1025-1066쪽.
- 김치완, <유학의 공간 담론과 문화공간의 재생>, 《문화와 융합》 제38권 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11-36쪽.
- 김치완, <제주의 조선유학자 변경봉(邊景鵬)의 이중문화정체성>, 《문화와 융합》 제39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11-36쪽.
- 김치완, <主體와 他者의 二重 視線으로 본 濟州의 朝鮮儒學>, 《동서철학연구》 제69호, 한국동서철학회, 2013, 211-231쪽.

- 김치완, <한국학의 전통에서 본 제주 바람-바람, 흐름의 철학적 접근>, 《탐라문화》 43호, 탐라문화연구원, 2013, 101-133쪽.
- 김현선, <구비문학과 철학의 상관성>, 《口碑文學研究》 제1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61-98쪽.
-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에 나타난 敎弊와 '物故者'>, 《역사민속학》 제27호, 역사민속학회, 2008, 93-126쪽.
- 심옥주,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6집, 2013, 327-362쪽.
- 양정심, <제주4·3의 기억투쟁, 평화와 인권운동 연대하기>, 《제주대학교 인권심포지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9, 147-157쪽.
- 오수정, <조선 초기 제주 통치 체제 고찰>, 《濟州島研究》 제50집, 제주학회, 2018, 257-284쪽.
- 정재엽, 최낙진,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TV 다큐멘터리 비교 연구: '제주 고대사', '탐라순력도'의 이야기 전개 및 내레이션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1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189-212쪽.
- 조성윤, 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호, 탐라문화연구소, 1998, 199-218쪽.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91-122쪽.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탐라문화》 38호, 탐라문화연구원, 1011, 157-189쪽.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제21호, 탐라문화연구소, 2000, 19-38쪽.

시대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작가들

김수열

시인

1. 들어가며

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이따금 시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1982년에 문단의 말석에 이름을 올렸으니 어느덧 40년 세월이 코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대해서 혹은 문학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딱히 이거다 하고 단정하기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한창 때는 객기 반 취기 반으로 이러쿵저러쿵 목소리를 낸 적이 없지 않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단정하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진대 하물며 제주문학에 대한 언급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더욱 난감하겠지요.

사전적 의미로 ‘정체성’이라 함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인 문학과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같이 전혀 한데 묶어서 호명할 수 없는 상호독립적인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학은 정체성이라는 항목에 넣어 언급할 게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범주에서 논의 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왜냐하면 문학은 자유로운 영혼이 남기고 간 흔적이기 때문에 늘 변하는 것이고 존

재의 본질을 뛰어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은 문학 그 자체가 아니라 제주문학에
서의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제주’에 방점을 찍으면 제주라는 시공간에서 제
주를 제주답게 하는 문학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따지고 보
면 제주문학이라는 것도 문학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분명 자기모순이
고 이율배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문학의 정체성’이라는 저에게 주어진 주제를 고민하다가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
니다만 제 나름 지금까지 문학이라는 걸 해오면서 최소한 저에게 제주다움을 일깨워준
작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주어진 소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 문충성, 그 《제주 바다》의 생명력

누이야, 원래 싸움터였다.

바다가 어둠을 여는 줄로 너는 알았지?

바다가 빛을 켜는 줄로 알고 있었지?

아니다, 처음 어둠이 바다를 열었다. 빛이

바다를 열었지, 싸움이었다.

어둠이 자그만 빛들을 몰아내면 저 하늘 끝에서 힘찬 빛들이 휘몰아 와 어둠을 밀어내는

괴로워 울었다. 바다는

괴로움을 삭이면서 끝남이 없는 싸움을 울부짖어 왔다

(…)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바다를 알 수 없다

누이야 바람 부는 날 바다로 나가서 5월 보리 이랑

일렁이는 바다를 보라 텀벙텀벙

너와 나의 알몸뚱이 유년이 헤엄치는

바다를 보라 겨울날
 초가지붕을 넘어 하늬바람 속 까옥까옥
 까마귀 등을 타고 제주의
 겨울을 빛는 파도 소리를 보라
 파도 소리가 열어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보라 누이야
 -문충성,〈濟州바다·I〉부분

변방의 섬 제주가 원래는 ‘싸움터’였다는, 울림이 큰 언어로 시의 첫줄을 새긴 시인이 있습니다. 1977년 계간 《문학과지성》에 〈濟州바다·I〉, 〈고드름〉, 〈가을〉 등을 발표하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등단한 문충성 시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특히 위에 인용한 그의 등단작 〈濟州바다·I〉의 울림은 제주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당시 중앙 문단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킵니다. 신비의 섬, 천혜의 관광지로 발돋움하던 그 무렵, 제주의 한 시인은 제주가 원래 싸움터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제주가 변방의 언저리에 있는 버려진 섬이 아니라 탐라국 이후 제주는 지금도 그렇듯이 토착민과 외부 세력 간에 갈라치고 되받아치는 ‘끝남이 없는 싸움’터임을 시인은 제주의 누이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준엄하게 때로는 비장하게 때로는 조곤조곤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싸움터이고, 싸움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괴로움을 삭이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이 바로 이곳 제주라고 말합니다.

저는 나고 자라 유년을 보낸 곳이 제주 탐통이어서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매립되어 사라졌지만 지금도 자그락자그락 물려왔다 자그락자그락 물려가는 탐 아래 먹돌들의 반짝거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조반 전에 바다로 나가 해거름에 집으로 오곤 했는데 또래동무들의 하루 세 끼를 거뜬하게 해결해준 곳도 제주바다였습니다.

머리가 굽어지면서 바다는 그저 바라만 보아도 넉넉한 곳이었는데 문충성의 ‘제주 바다’를 만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몰랐던 제주 바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 바다는 싸움터였고 지금도 싸움터임을 깨우쳐준 시인이 문충성 시인입니다. ‘제주 사람이 아니

고는 진짜 제주바다를 알 수 없' 고 '파도 소리가 열어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주 사람임을 알려준 시인입니다.

허나 지금도 저는 '파도 소리가 열어놓은 하늘 밖의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몇 해 전 '하늘 밖 하늘'로 가신 문충성 시인은 파도 소리가 열어놓은 제주 바다를 곁어보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3. 김석범, 아직도 꺼지지 않는 《화산도》

“기억이 말살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다. 역사 없는 곳에 인간의 존재는 없다. 다시 말해서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닌 주검과도 같은 존재다.

오랫동안 기억을 말살당한 4·3은 한국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일, 알고서도 몰라야 하는 일이었다. 하나는 막강한 권력에 의한 기억의 타살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포에 질린 섬사람들이 스스로 기억을 망각 속에 집어던져 죽이는 기억의 자살이었다.

4·3문제의 울퉁은 해결은 아직 멀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재평가와 아울러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의 사업으로 더욱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한없이 죽음에 접어드는 깊은 망각 속에 얼어붙었던 기억이 지상으로 솟아나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영원히 말살할 수 없었던 기억의 부활이자 기억의 승리다. 어처구니없는 학살을 영원한 터부로 은폐하고 놀라운 허위로 역사를 꾸며오면서 '기억의 암살자' 노릇을 해온 지난날 위정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제1회 4·3평화상 수상 연설 중에서

소설가 김석범 선생은 1925년 오사카 이카이노에서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그를 가진 어머니가 제주에서 오사카로 밀항하고 그를 낳았습니다. 이카이노는 4·3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제주 사람들의 집단 은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육의 조국에서 도망쳐 차별과 핍박의 일본땅에 목숨을 의탁해온 제주사람들의 시간이 그의《화산도》에 응축되어 있

습니다.

1976년 일본에서 연재를 시작해 2015년 한국어판으로 완성되기까지 40년의 세월을 소진했습니다. 선생님의 표현을 빌면 ‘이승만 정부 수립의 희생양으로 바쳐진 제주’가 한국의 오늘과 어떻게 만나는지 200자 원고지 2만2천장에 꼭꼭 눌러 앉혔습니다.

김석범 선생은 한국인도 북한인도 일본인도 아닌 패전국 일본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재일(在日) 한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조선적(朝鮮籍)’입니다. 남과 북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회유했지만 선생은 분단된 나라 어디에도 속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흔을 훌쩍 넘긴 선생은 지금도 무국적자이고 존재하지 않는 나라 ‘조선’의 백성으로 재일(在日)을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을 다루는 문학이 보편적일 수 없다’는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그릇된 인식과 싸우며 그는 4·3을 쓰지 않고는 건드릴 수 없는 치열한 상상력과 비타협의 정신으로 소설 《화산도》라는 보편성으로 획득합니다.

일본에서 1983년 ‘오사라기 지로 상(아사히 신문사)’과 1998년 마이니치예술상(마이니치 신문사)을 수여하며 그의 역작 《화산도》를 평가할 때 정작 한국은 그의 문학에 냉담했습니다.

그가 마음의 고향 제주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983년 오사라기 지로 상을 수상할 무렵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사에서 그를 위해 경비행기를 띄우고 한국 정부에 김석범의 입국을 요청합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3·8선과 포항제철 방문’을 입국 조건으로 내걸자 선생은 ‘정권 홍보에 동원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사히 신문사에서는 선생을 모시고 경비행기를 띄워 한일 경계 영공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한라산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그 후 김석범 선생은 2015년 제1회 4·3평화상을 수상하셨고 2017년 제1회 이호철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선생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제1회 4·3평화상 수상 축하하기 위해 부끄러운 시 한 편을 선생께 바쳤습니다.

나는

남쪽 사람도 북쪽 사람도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무국적자요

나는

분단 이전의 조선 사람ियो

제주4·3도 마찬가지요

반 토막 4·3은 4·3이 아니란 말이오

온전한 4·3은

통일된 조국에서의 4·3이오

그러니 제주4·3은 통일인 거요

4·3을 한다는 거?

저기, 저, 저, 백비, 저걸 일으켜 세우는 거요

- 졸시, <경계의 사람-김석범>전문

4. 현기영, 역사가 된 소설 《순이삼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인간 자신이 저질렀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공포의 금압 속에서 울음소리도 낼 수 없었다.

억눌린 침묵과 공포 속에서 소리 없는 눈물과 숨죽인 흐느낌만이 있었다.

우리는 각자 한 번의 삶을 살고 한 번의 죽음을 죽는다.

그래서 타인들의 죽음에서 하나의 죽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애도할 수 있다.

그러나 4·3에서 3만의 죽음은 우리의 인식능력과 상상력을 훨씬 초월해버린다.

이 엄청난 슬픔을 어떤 말로 애도할 수 있을까?

3만의 죽음은 우리의 인식능력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말이 너무 모자라다.

그 사건 앞에서 인간의 언어는 너무도 빈약하다.”

-현기영 산문, 《소설가는 늙지 않는다》중에서

제주4·3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1979년, 세상으로 걸어 나온 《순이삼촌》은 적어도 제주에서는 단순한 문학적 발걸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족적이었습니다. 강요된 기억의 타살과 그 기억을 스스로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경계에서 30년 만에 피워 올린 절절한 한 송이 꽃이었습니다.

그 꽃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현기영 선생은 보안부대에 끌려가 3일 동안 형언할 수조차 없는 고문을 감내해야 했고 한 달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섬 구석구석에 일파만파 동백이 되어 다시 피어났습니다.

“순이삼촌네 옴팡진 돌짜밭에는 끝까지 찾아가지 않은 시체가 둘 있었는데 큰아버지 손을 빌려 치운 다음에야 고구마를 갈았다. 그해 고구마는 풍작이었다. 송장거름을 먹은 고구마는 목침덩어리만큼 큼직큼직했다. (중략)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옴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여 년의 우여곡절한 유예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다.”

-현기영, 〈순이삼촌〉중에서

오래 전 일입니다만 현기영 선생과 4·3이야기를 나누다가,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는 격에 다름없지 않았

느냐는 어리석은 질문에 울분에 찬 어조로 내게 들려주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한 공동체가 뭉싸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념적인 건 문제가 아니야. 거기 왜 붉은 색을 칠하려고 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누이가 능욕당하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친구가 고문당하고, 씨멸족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쟁이란 당연한 거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복하고 굴복해야 하나?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싸우는 게 인간이야!”

5. 김시중, 경계를 아우르는 《경계의 시》

김시중은 전설적인 시인이다. 살아서 전설이 된 시인이고, 그 삶으로, 그가 살아낸 시로 전설이 된 시인이다. 훌륭한 시인도 많고 위대한 시인도 많지만, ‘전설적 시인’은 드물다. ‘전설적 시인’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전설이 된 것은 전설이 될 이유를 갖는다. 제주에서 4·3항쟁에 참여했다가 수배되어 일본으로 밀항했고, 재일조선인 운동에 참여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조선 총련’이 되어버린 조직과 불화를 거듭하다 결별했으며, 낯선 일본어를 일본어에 끼워 넣는 기이한 ‘복수’를 수행하며 전설의 시인이 된 것이다.

-이진경, 《김시중, 어긋남의 존재론》중에서

김시중 선생님은 1929년 원산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성장한 후 1949년 일본으로 밀항합니다. 제주4·3을 피해 홀몸으로 가신 것입니다. 1953년 시동인지 《진달래》를 창간했으며, 지금까지 일본어로 시 창작 및 비평, 강연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1986년 수필집 《〈재일〉의 틈새에서》로 ‘마이니치(毎日) 출판문화상’을 수상하셨고, 시집으로 《지평선》, 《일본 풍토기》, 《니이가타(新潟)》, 《이카이노시집(猪飼野詩集)》, 《광주시편》, 《화석의 여름》등이 있습니다. 1991년 집성시집 《원야(原野)의 시》로 ‘오구마 히데오

(小熊秀雄)상 특별상'을 수상하셨으며 일역으로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재역(再譯) 조선시집》등이 있습니다.

제주가 고향도 아닌 선생님을 제주문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호명한 것은, 비록 원산에서 나셨지만 해방 즈음에 온 가족이 제주에 내려와 정착을 하셨고, 선생님은 비록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해 일본으로 가셨지만 선생의 부모님은 지금 제주에 두 봉분으로 남아계시고 선생의 문학 또한 제주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일본어를 고집하면서 작품을 쓰시는데 어느 자리에선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 역사적으로는 ‘8·15’를 분수령으로 옛 일본으로부터 끊어졌다. 확실히 ‘8·15’는 식민지를 강요한 일본과 결별하는 날이긴 했다. 그런데 일본어만은, 그 후 부득이한 일본에서의 생활과 중첩되어선지 예전의 나를 고스란히 그러안고 있다. 일찌감치 눌러앉은 나의 일본어와 고별하기 위해서, ‘해방’은 여전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끝없는 계기 같은 것이다. 그 일본어로 나는 시를 쓰고 자신의 사념을 정착시키려 발버둥 치고 있다. (중략) 잡다한 속성의 한 복판에 나뒹굴어도 때 묻지 않는 서정을 어떡하든지 자신의 일본어로써 발로시킬 책무가 내게는 있다. 자신의 생장에 얽혀 있는 일본어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다.”

-김시종, 《경계의 시》서문 중에서

선생님은 지금도 재일(在日)을 사십니다. 재일(在日)을 사시면서 한 번도 일본에 동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럼으로써 남쪽의 고향 제주에 대한 각별한 인연을 그의 문학의 근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오사카 영사관으로부터 귀국 권유 받은 적 있었습니다 광주항쟁 시집 준비하는 걸 알고, 방일 준비하던 전두환 쪽에서 체면이 안 섰는지, 서울에서 출판하라 압박했습니다 ‘제주4·3’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삼 때, 서울문학인대회 초청 받았는데, 영사관에서 ‘다음 방한에는 한국국적으로 바꾼다’는 서약서 강요했습니다 조선적(朝鮮籍)이던 나는 거절했습니다 주최측 노력으로 어찌어찌 참가는 했지만, 행선지는 서울로 한정되었습니다

4·3 진상규명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 때에야 조선국적 임시 여권으로, 1949년 도일(渡日)하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주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항쟁 당시 희생된 동지들 뵈 낫이 없어 마음 무거웠는데, “어서 오세요” 조카딸이 울먹이며 나를 안아준 게 구원이었습니다

무성한 가시덤굴 안쪽 무덤 두 개 나란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40년 된 양친입니다 처음 뵈었습니다 무릎 꿇고 송아지처럼 울었습니다 남은 인생, 해마다 성묘하고 싶어 2003년 한국국적 취득했습니다 그해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 제주4·3을 ‘국가권력의 잘못’이라 인정하고 공식 사죄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반세기, 제주는 참 멀었습니다

달보다 먼 곳이었습니다

-줄시,〈달보다 먼 곳-김시중〉

6. 나가면서

글을 마치며 생각해보니 제주문학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치우친 생각만을 고집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제 주변머리가 그리 넓지 못한 탓이겠거니 하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주 혹은 제주문학의 오늘을 있게 한 작가들이 앞에서 호명한 몇몇 작가들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는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해 그 안타까움과 울분을 글에 담고 있는 작가들도 수두룩하고, 소멸해가는 우리의 언어인 제주어를 내려

놓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는 작가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붓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제주문학 혹은 제주문학의 정체성은 다양성과 나란히 어깨를 곁고 내일의 제주문학으로 튼실하게 나아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부끄러운 시 한 편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섬에서 나고
 섬에서 자란 사람들은
 바람이 말하지 않아도
 섬에서 사는 법을 안다
 바다 끝에 아련히 떠 있는
 사람 없는 섬을 보면서
 외로움보다 기다림을 먼저 알고
 저만치 바람의 기미 보이면
 발담 아래 허리 기대어
 수선화처럼 꽃향기 날려 보내고
 섬을 활퀴듯 달려드는 바람 있으면
 바람까마귀처럼 바람 흐르는 대로
 제 한 몸 맡길 줄도 안다
 등 굽은 팽나무처럼
 산 향해 머리 풀어 버틸 줄도 알고
 바람길 가로막는 대숲이 되어
 모진 칼바람에 맞서
 이어차라 이어차라 일어설 줄도 안다
 어디 그뿐이라
 때가 되면 통꽃으로 지는 동백처럼
 봄날 오름자락을 수놓는 피뿌리풀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연한 피 흘리며

미련 없이 스러질 줄도 안다

-줄시, <섬사람들>

〈토론문〉

전영준,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에서'

홍기표

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겸임 교수

본고는 제주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제주 역사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다. '탐라 천 년, 제주 천 년의 역사'라는 논제에 이미 논자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 '독립국'으로서의 탐라사와 한반도 (중앙)정부의 영향력 하에서의 제주사로 구분 짓고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점은 향후 제주사 연구의 토대가 될 중요한 시대구분의 잣대이다. 이미 논자 뿐 아니라 토론자를 비롯한 제주사 연구자들이 항상 주목해왔던 지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본고는 근현대사를 제외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 제주사를 간략히 언급하며 그 속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탐색하려 했다. 선사시대에서 고대사에 이르는 시기에는 고고유물의 분포와 문헌에 등장하는 삼국 및 중국, 일본과의 대외교류를 통해 '독립국' 탐라를 조명하고 있다. 고려시대는 '독립국' 탐라의 위상이 점차 격하 일로에 이르는 과정을 해설하며, 그 속에 투영된 제주의 상황을 고찰하였다. 즉 군(郡), 현(縣)의 지방 행정 단위로 격하된 '탐라국'과 삼별초 및 몽고 영향력 하에서 탐라(제주)의 존재 의의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확고한 중앙집권 통치체제하 지방화한 제주의 실정을 제시하였다. 1목2현의 삼읍체제, 읍성/진성의 구축, 지방관 파견, 출륙금지령, 유배 등을 통해 '변방으로서의 지방'이라는 제주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이상까지 필자의 논고는 ‘탐라와 제주의 역사’라는 주제에는 합당하나, 그 속에서 탐색 가능한 제주 역사의 정체성 부문 분석은 다소 미흡한 듯하다. 물론 필자도 결론에서 ‘섬, 산, 바다’라는 공간적 요소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자아의식과 주체성의 확립은 언급하였다. 또한 ‘수놓음문화, 조상정신, 공동체문화’ 등 강고한 공동체성의 유지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 및 분석이 다소 미진한 듯하다. 이에 토론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첫째, 고대 동아시아 해상교역상 탐라의 위상을 조명할 때 당대의 시각이 아닌 마치 오늘날 시각에서 지리적 여건상 당시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중핵, 거점’ 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닌지요? 탐라가 당시 해상교역 또는 교류의 거점이 되려면 문헌 및 유적, 유물을 통한 실체 조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연구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본다. 따라서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일정 역할 수행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객관적 실체에 더 가깝지 않나 보는데 논자의 입장은?

둘째, 논자는 탐라국의 종언을 ‘군(郡)’의 설치로 보아 고려 숙종 10년(1105)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숙종 이후에도 탐라의 반독립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성주 왕자가 여전히 탐라의 지배세력을 유지하였으며, 더구나 송 여진 등과 함께 방물을 바치는 ‘외국’ 대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縣)’으로 호칭이 바뀌고, 탐라현령이 파견되는 의종 초부터 사실상 탐라국의 종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논자의 입장은? 물론 의종 이후에도 지방관 수탈과 제주민의 반란이 빈번했고, 더구나 삼별초 항쟁 및 몽고간섭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탐라국의 종언’ 또는 ‘탐라의 고려 편입’과 관련한 주제는 아직도 학계의 논의 정립이 미진한 상태이다.

셋째, 논자는 삼별초 항쟁 전후, 제주민의 인식으로 ‘고려(관군)에 대해서는 반정부적’, ‘삼별초에 대해서는 해방군’이라 표현하고 있다. 논지 전개가 “의종대부터 지방관 파견→지방관과 빌붙은 토착지배세력의 수탈→삼별초 대항 관군의 무리한 노역(환해장성)→제주민의 반정부적 인식 고양→삼별초 해방군 인식”이다. 정연한 논리에 입각한 주장이긴 하나, 마지막 ‘삼별초를 해방군으로 인식’했다는 표현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마도

논자는 김수 아들 김태현 묘지명의 “士人資敵 衆寡不俟”의 기록을 확대해석한 듯하다. 하지만 이때의 ‘토인’이 제주민 일반을 뜻하는 용어인지, 토착지배세력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쉽게 말해 못된 관군이든, 삼별초든 제주민 입장에서든 외래 세력의 유입이며, 제주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주가 그들 대립의 현장이 되어 결국에는 제주 역사에 고통을 안긴 시대가 아니었나로 보는 것이 토론자의 입장인데 논자의 생각은 어떤지?

넷째, ‘역사 속 제주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논자의 입장에 대해 토론자도 동의한다. 즉 “제주의 정체성이 반드시 근대성과 직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논자의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그 논의를 확대시켜 가는 논지 전개가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가설만 제시한 채 논거에 대한 내용 제시가 본문에서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자의 첨언을 듣고 싶다. 토론자는 여기에 주목하여 한 발 더 나아가 ‘근대성이 오히려 제주 정체성 탐색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누구나 인류 역사의 계기적 발전단계에 대해 한 번 짚 접하게 된다. ‘원시 공산제→부족사회→부족연맹체(연맹왕국)→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중세 봉건제국가→근대 시민사회와 근대국가’라는 도식이 그것이다. 특히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때, 탐라 역사는 난관에 봉착한다. ‘율령반포와 관등체제 수립’ 및 ‘고등 종교와 사상의 전래 및 수용’ 등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탐라 관련 사료의 절대적 부족도 작용한다. 결국 ‘섬’이라는 제약적 자연환경 속에서 섬사람들이 구축해가는 사회발전단계에 대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한 그 내용에는 ‘국가와 민족의 탄생과 발전’, ‘생산력 증대와 자본 논리’ 등과 같은 이른바 근대성의 산물이 탐라 역사 연구에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필자의 입장은?

다섯째, 사실 규명과 관련한 대목 두 가지를 언급한다. 먼저 1270년 9월 삼별초 입도 이전 관군 도래시 김수(金須)의 관직이 ‘영암부사’라고 하였다. 토론자가 살펴본 바로는 김수의 관직은 ‘영광부사’였다. 《고려사》 및 당시의 〈묘지명〉(김수처 고씨 및 아들 김태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10여 종의 사료에 김수의 관직이 ‘영광군의 지군사(知郡事)’ 또는 ‘영광부사’로 소개되어 있다. 《고려사절요》와 《동사강목》에만 ‘영암부사’라고 되어 있다. 심

지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및 두산백과까지도 김수를 영암부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영광군과 영암군은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지지서에 별개의 군현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토론자는 후대 사료의 오기로 보는데, 논자의 입장은 어떤지요? 다음은 ‘제주(濟州)’ 호칭의 문헌상 최초 등장이다. 논자는 고종 10년(1223)부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사》의 최초 등장은 고종 16년(1229)이며, 관직명으로 ‘제주부사’는 고종 21년(1234) 최자(崔滋) 때부터이다. 따라서 제주라는 호칭의 등장은 ‘고종대’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한데, 논자의 입장은?

〈토론문〉

김치완, '제주 정체성과 근대성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김진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제주의 정체성 문제는 일의적으로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정체성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존재한다. 적어도 정체성이 고정불변하는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발표자는 본래 어떠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기에 역설적으로 지금 와서 구성되고 해체되며 재구성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제주의 정체성 인식과 근대성이 초래한 문제를 도출하고자 탐라와 제주, 현실 제주로 구분해 공시/통시/현시적 동일성을 토대로 정체성 문제를 고찰했다.

고유한 정체성은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함뿐만 아니라 이해한 것으로서 고유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 정체성을 변한다. 발표자는 정체성을 동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동양적 사유에서의 본성 개념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본성은 타고난 것으로서 고유하고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같은 본성을 갖는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나 항상 정체성을 확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유가에서는 본성을 자각하고 사회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수신(修身)이 요청된다. 발표자는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유가의 본성과 수신의 논리 구조가 지역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 즉,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제주의 정체성은 본래 고유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규정

하는 근대성이 도민과 타자의 기억과 시선, 욕망을 구성하고 해체하며 재구성하면서 도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의 정체성이 현대인의 시각에서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세 부분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잃어버린 기억의 측면에서 탐라 천년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탐라의 유물, 유적보다 더 지역적 관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제주 서사무가(敍事巫歌)를 분석하면서 서사무가가 제주의 독자성과 보편성을 보여주는데, 제주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독자성과 부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독자적 고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 관계가 아닌 친연 관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대 한국과 상보적 관계가 강조되기 때문에 고대 한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제주 서사무가의 의의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록되고 수집된 해상왕국 탐라 천년의 기억은 친연성보다는 독자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제주 천년의 정체성에서는 탐라가 고려에 복속되고, 이어서 조선의 국가질서 안으로 통합되면서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교식 교화정책에 의해 향교가 세워지고 신당철폐 사건이 일어났고, 심지어 양란 이후 제주 민란에서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제주는 절해고도의 유배지인 동시에 이국적 동경의 대상으로 그려졌다. 제주 사람들은 풍속 개량과 민중 교화의 대상으로서 타자화, 경관화 되었으며 그들 스스로 경계인으로서의 시선이 수용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현실 제주의 정체성에서는 근대인의 욕망이 작용하는 근대화 과정의 선교와 교육에 따른 제주 사회의 변화와 저항의 역사를 언급했다. 또한, 근대국민국가 성립과 함께 제주가 관광 개발로 소비되는 대상으로 전락했고, 현재에도 삶의 공간이 아닌 소비되는 공간으로서 이중적인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구교운동(仇敎運動), 항일운동, 4·3에 이르는 저항을 이야기하면서, 현재는 현실 제주에 여전히 불고 있는 “지연된 개발의 광풍”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제주정신에 대한 연구와 제주문화 정체성과 관

런된 제주도민의 인식과 공감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로 구분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제주 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삼무정신을 언급하면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규범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해민(海民)정신이 제안되었지만 마찬가지로 환경결정론이 갖는 해석상의 오류와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소개했다. 탐라의 역사는 잃어버린 기억으로서 지금도 재구성되고 있으며, 제주가 된 이후에도 이국적 경관을 가진 타자로서 이중적 시선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제주의 정체성은 곧 동일성을 가리키며 탐라 천년과 제주 천년에 이어,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동일성은 섬으로서의 독자성과 부속성이 교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물론 단순히 섬이라고 하는 지리적 요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제주는 고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다 병합되었고, 근대 국민국가 성립 과정에서 아픔을 겪었다. 제주와 마찬가지로 섬이면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대만과 오키나와 등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탐라 왕국의 잃어버린 기억을 비롯해 제주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탐라가 고려에 복속되고 제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한반도의 바다의 경계였다. 발표자는 제주가 ‘한국의 경계 너머의 경계로서 오래된 미래의 시간과 장소를 재현하는 실천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탐라 천년의 기억이 현재적으로 재해석되기에 탐라는 과거의유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제주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재구성되고 재현되고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재현되고 있는지 발표자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론문〉

김수열, '시대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작가들'

홍기돈

문학평론가·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먼저 토론에 나선 자로서의 난감함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자신에게 제주다움을 일깨워준 작가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채워 나가셨습니다. 물론 소개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삶뿐만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훌륭한 분이십니다만, 이러한 방식의 발표는 개입하여 토론할 여지를 봉쇄해 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작가들로부터 제주다움에 관한 일깨움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토론이 가능할지요. 그러한 만큼 제 토론이 다소 주관에 입각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문충성에 대해 논의하는 2절에서 문득 송당본풀이가 떠올랐습니다. 송당본풀이에는 수렵문화를 상징하는 소천국[宋天國],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백주(白主)가 등장하고, 무쇠 상자에 갇혀 바다에 띄워 보내졌다가 장군이 되어 귀향한 송국성도 나타납니다. “겉에 질린 어머니 백주는 윗송당으로 가서 죽어 신이 되고, 아버지인 소천국은 아랫송당으로 가서 신이 되었다. 후에 송국성은 한라 수호신이 되어 지금까지도 기림을 받으며 제주도를

지키고 있다.”¹⁾ 수렵문화로는 일정한 규모를 넘어선 사회 구조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농업문화로 수렵문화를 대체해 나가기에 제주의 자연 환경은 너무나 부박합니다. 바깥 세계와의 교류로써 성공한 송국성이 수렵문화와 농경문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대이자 제주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는 까닭을 저는 여기서 찾는 입장입니다.

발표문의 서두를 보면, 제주문학의 정체성을 논할 때 문학과 정체성을 한데 잇는 데 대한 어려움이 토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제주문학이라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를 둘러싼 지리적 조건이 이를 가능케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 《바람 타는 섬》은 그런 점에서 섬으로서 제주도의 정체성 및 역사를 탁월하게 형상화해낸 수작이겠지요. 4·3을 둘러싼 비극 또한 고립된 섬이었다는 조건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김석범, 김시종 선생님의 각별함도 분단된 조선을 제3자의 시선으로 성찰하는 데 있을 터인데, 제주사람들이 바다 건너 세계를 ‘육짖것들’이라는 방식으로 거리 두는 방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떠한 지역의 문화는 지리적 환경을 조건으로 형성되며, 이를 정체성이라 이룰 수 있다는 것.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3중 구조’에 따르면, ㉠ 지리적 환경을 기본항으로 설정하고 난 뒤 그 조건 위에서 ㉡ ‘집단의 운명과 전반적인 움직임’이 형성된다고 전제하고 ㉢ ‘사건, 정치,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침 발표자께서도 자신의 〈섬사람들〉로 글을 정리하고 계신데, 최남단의 섬이라는 사실을 화두로 논의를 펼쳐나갔으면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크레타 등과의 비교를 통해 보편성 확보도 가능해지리라 싶습니다.

3.

김석범의 《火山島》와 《순이 삼촌》에서 일깨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火山島》의 세계는 허무의식을 근거로 삼는 관찰자 이방근을 내세웠으며 사회주의로 경사하

1) 진성기 엮음, 〈소천국[宋天國]과 백주〉, 《제주도 전설》, 백록, 1992, 82쪽.

는 반면, 《순이 삼촌》의 세계는 공동체가 야만적인 탄압 가운데서 어떠한 비극을 겪었는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순이 삼촌〉의 작가 현기영은 공동체주의로 경사해 있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에서 한발자국 떨어져서 이념 대결이 아닌 피해 양상을 복원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기영 선생님께서 4·3을 장편 분량으로 확장시키지 못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장편으로 나가려면 공동체주의를 한편에 부각시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가운데 내세워야 할 테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발표자께서 《火山島》와 《순이 삼촌》을 수용하실 때 그러한 입지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변별 혹은 혼용하여 끌어안고 있으신지 여부입니다. 기실 저는 제주 출신 연구자·비평가이면서도 《火山島》에 관한 글을 쓰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몇몇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으나, 제 지향이 공동체주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까닭에 그냥 무시하고 건디어 내는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시인이신 발표자의 자리는 물론 제 처자와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두 세계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시면 좋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토론문〉

제1부 ‘집합기억과 제주 정체성’ 발표에 따른 토론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지정 토론할 대상 발표문을 정하지 않고 1부 토론자로 배치한 것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최 측인 제주학연구센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세 분의 발표는 공통적으로 ‘인간’ 혹은 ‘인문’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인식과 현재, 철학적 사유와 삶, 문학적 감성과 현실 등의 내용을 관통하는 제주의 정체성을 논하고 있다.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의 주제로 열리는 제주학대회의 화두는 제주가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타 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를 특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 정체성의 본질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었는가를 역사 속에서 찾아내고 현재적 관점에서 되새김질하여 맥락을 짚어내는 작업으로 이해하며, 이를 근거로 미래 제주학을 담아내려는 자기반성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간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민하고 연구하였던 많은 학자들의 눈부신 업적에도 불구하고 총합하여 하나로 엮어내는 일에 소홀했던 연구기관들 간의 분산된 시각에서 비롯된 일이다.

- 전영준, 발표요지 중에서

보편성과 구별되는 고유성과 특수성의 지속 속에서 정체성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는 지적과 그간 연구기관들 간의 분산된 시각으로 인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종합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은 이번 학술대회를 맞이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민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허남춘 교수의 글을 인용하여, “제주에서는 제주문화를 주권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의 독자적인 역사와 민속과 신화를 토대로 제주학을 구축해야 할 시기”라 천명한 부분은 센터의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다만 중앙학과 지역학으로 구분되어 학술적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부분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듯하다. 지역학이 모여 한국학이 되는 것이지 중앙학이 따로 있어 전체적인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청한다. 또한 근대성의 표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 즉 독립적인 자치지역으로서 제주의 역사적 근거와 미래비전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 싶다.

다음으로 사상적 관점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발표에서는 지역의 관점에서 보기, 사회적 관점의 로컬리즘을 실현, 본래부터 있었던 고유와 이해된 것으로서의 고유, 섬의 독자성과 부속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 천년의 시선은 제주를 삶의 자리로 하는 제주 사람이 중앙정부에서 강요된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게 하였다. 탐라 천년과는 달리 독립국이 아닌 영토로 공식 역사 기록에 등장하지만, 조선 초기까지는 여전히 본국과는 분리된 자치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제주를 경계 너머의 경계, 곧 절해고도의 유배지로 만들었는가 하면,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인 영주(瀛洲)로 상상하게 했다. 바로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경관 가운데 한 요소로 배치시킬 수 있었던 까닭은 제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공감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속 개량과 민중 교화의 대상으로서 타자화, 경관화 된 제주 사람들을 국가 질서 안으로 포섭하려는 일방적인 시선과 엇갈리는 민중의 시선은 반란이라는 실천 행위로, 그와는 반대로 국가 질서 안에 포섭된 토착세력의 시선은 경계인으로서의 제주 보기라는 실천 행위로 드러났다는 동일성을 가진다.

- 김치완, 발표요지 중에서

제주도는 주변적, 타자적 부속성 등으로 인해 중앙정원에게 있어서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조선시대 당시 유교사상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상기해 볼 때 그 시선의 깊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청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학에 대한 논의에서는 특히 ‘기억의 암살자’, ‘강요된 기억’ 등에 대한 저항문화로서 제주문학이 제시되었다.

사전적 의미로 ‘정체성’이라 함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인 문학과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같이 전혀 한데 묶어서 호명할 수 없는 상호독립적인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학은 정체성이라는 항목에 넣어 언급할 게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범주에서 논의 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왜냐하면 문학은 자유로운 영혼이 남기고 간 흔적이기 때문에 늘 변하는 것이고 존재의 본질을 뛰어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김수열, 발표요지 중에서

정체성과 문학이 상호독립적이라는 의견과, 다양성이라는 범주, ‘제주’라는 지역성 등을 더하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문학’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뒤의 논의로 갈수록 ‘기억’과 ‘저항’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어쩌면 지역문학 만큼 지역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장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청하고 싶다.

우연찮게도 이번 제주학대회 ‘제주학 아카이브展’의 주제 역시 ‘기억의 재생, 지금 이 자리’이다. ‘기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후세들에게 전해줄 것인지, 강요된 기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문학의 범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 판단한다.

결국 제주 정체성의 핵심에는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억의 기록으

로서 역사, 기억의 시각으로서 사상(철학), 기억의 재현으로서 문학예술, 기억을 통한 생존의 지혜 전승으로서 전통지식 등이 지역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후대로 이어가는 문화의 고갱이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 분들의 고견을 청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하 사 동

제2부

사회변동과
제주 정체성



제주개발체제와 지역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대항운동의 과제

장훈교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연구공간 제주 for 2050 transition(가)¹⁾

1. 문제의식

1. 《제주 제2공항 건설촉진 범도민연대》는 지난 2020년 2월 기자회견에서 제주 사회 전체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²⁾ 그들은 “왜 제주도는 제주시를 위한 제주도가 되어야만 하나”라고 물으며, 제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촉진 범도민연대》에 의하면 제2공항은 제주시에 집중된 인구, 교육, 편의시설 및 행정 등을 도내 전체로 균형 있게 분산해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귀포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도내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1) 이 글은 논문 발표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저는 동료들과 2020년 초부터 제주 비판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모빌리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동료들과 진행한 그 세미나 학습과 토론의 내용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해보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과편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없는 논의여서 부끄럽습니다. 사고의 흐름을 열어줄 수 있는 단서가 혹 나올까 하여 계속 메모를 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량이 많아진 이유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는 메모로 이해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지 말씀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 모두에게도 좋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 뉴스제주, 2020.02.19., “제주 제2공항 사업, 도내 균형 발전 초석”

2. 제주시와 비제주시 혹은 산북과 산남간 그리고 읍·면·동의 불균형 발전 문제는 제주의 오래된 난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건설촉진 범도민연대》는 이 난제를 논쟁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렸다.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제2공항에 관한 도민들의 찬성 반대 구도를 제주시와 비제주시 간의 지역 격차에 관한 ‘기득권’ 옹호 구도로 재편성했다. 그들은 제주시에서 제2공항 반대 여론이 높은 이유는 자원 집중이 주는 제주시의 편익은 향유하면서, 다른 권역 도민들에게만 자연을 위해 발전 기회를 포기하라는 요구라는 점에서 실상은 기득권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주장이다.

3. 《제주 제2공항 건설촉진 범도민연대》의 기자회견은 제2공항을 추진하는 데 지역정체성 담론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보여준다.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메가-프로젝트(Mega-project)는 그 프로젝트의 규모로 인해 제주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의 강도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나름의 지역에 대한 판단과 이해가 결합된 지역정체성을 필수적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다. 지역정체성 전략이 없다면 개발프로젝트에 관한 다른 시민의 동의를 획득하는 데는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정체성은 개발의 정치경제학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건설촉진 범도민연대가 내세운 특정하게 규정된 제주 불균형발전 담론은 제주 지역정체성 연구에 하나의 질문을 제기한다. 지역정체성은 제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일 정체성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개발과의 관계에 따라 균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간 제주의 지역정체성을 다루어온 두 가지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제주도적인 것, 제주도 사람다운 것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역사를 통해 구축되어온 제주라는 지역 혹은 제주도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그와 구별되지만 사실상 연결된 것으로 변화하는 제주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연구였다. 하나는 원형으로 또 하나는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은 대립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다. 하나의 정체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형성, 재생산,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접근으로는 제주 개발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 나타난 다원적

지역정체성의 정치적 경합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제주개발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은 개발과의 관계에 따라 다원화되어 왔다는 경험적인 관찰에서 볼 때, 이는 경험과 연구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5. 본 연구는 그래서 제주의 지역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다원화하고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그를 둘러싼 정치적 구성 투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포스트-그람시주의적 방법론을 따르면, 지역정체성은 헤게모니적 개입(hegemonic intervention)의 구성물이다. 지역정체성의 경합공간에서 어떤 세력과 입장이 승리하는가에 따라 그들은 제주의 미래에 접근하는 권력을 위임받는다. 제주시 중심 불균등발전론의 특징은 (1) 그 담론의 물적 조건 자체가 제주개발체제의 역사적 작동 결과이면서도 (2) 불균등발전을 만들어낸 바로 그 동일한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지역정체성 담론이 헤게모니를 확보할 경우, 제주의 미래는 지속적인 불균형발전 과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6. 개발 과정은 비판지리학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제주의 물리적 지리의 변형 과정을 동반한다. 따라서 개발에 동원되는 지역정체성 담론은 단지 조직화된 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주의 지리에 자신을 각인시키는 물질적인 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제주의 지역정체성은 곧 지리-정체성이기도 하다. 이런 제주의 지리-정체성의 변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인류 공동의 위기를 전제할 때 매우 긴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현재 제주시 중심 불균등발전이라는 지역정체성이 제2공항과 같은 제주 지리공간의 근본적 재구조화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중심 담론으로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주공항은 제주를 규정하는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mobility infrastructure)로서, 어떤 모빌리티 시스템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제주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는 제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의 이동 규모와 속도, 방법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제주개발체제가 만들어낸 불균등발전이란 물적 조건이 특정한 지역정체성 담론을 매개로 제주의 이동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단계와 결합

해, 제주개발체제를 다음 단계로 끌고 가고 있다.

7. 본 연구는 이 관점에 입각해 현재 제주를 상상하고 재현하는 지역정체성의 하나로 불균등발전이 동원되는 과정을 ① 제주개발체제의 구조 ② 지역정체성의 정치 ③ 그리고 부분적으로 모빌리티(mobility)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는 제주개발체제가 동원하는 지역정체성의 정치화 과정에 내재된 헤게모니적 실천에 관한 비판이기도 하다. 지역정체성의 정치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주개발체제가 위로부터의 압력을 통해 구조화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동의 곧 제주개발체제의 헤게모니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기간 지역정체성 분석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부분적으로 제주와 개발을 단선적으로 대립시키는 제주 비판사회과학의 지역정체성의 이해방식이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개발체제는 제주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동의 없이 작동하지 않았다.

8. ‘제주다움’을 옹호하는 대항담론 혹은 대항 지역정체성 전략의 한계가 나타나는 곳도 여기다.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제주개발체제의 헤게모니 형성 과정에 충분히 주목하며 자신의 담론을 전개하지 못한다. 제주개발체제의 헤게모니는 단지 제주개발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지속적인 개발압력을 만들어내는 제주 내부의 물적 토대를 형성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를 내몰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게 현재 21세기 제주 비판사회과학의 최대임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연구의 다음 단계 목표의 하나는 ‘제주다움’ 이후의 제주 비판사회과학의 지역정체성 이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9. 헤게모니 비판은 그에 맞서는 대항헤게모니적 개입을 위한 비판(critique as counter hege

monic intervention)의 토대가 된다. 현재 제주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일종의 ‘진지전’이 수행되고 있지만, 제주개발체제의 물적 토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제주 사회운동은 주민사회와 일상적인 갈등 관계에 있다. 주민사회의 경계에서 사회운동은 장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술과 운동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제주 전체의 대안을 구성해내는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해, 각각의 사건에 대응하는 산발적이고 분산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 또한 지역정체성의 정치를 관통하지 않고서는 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정체성의 정치 공간에 대한 이해는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가 갖추어야 할 정치-윤리적 차원의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접근방법

1) 지역정체성의 정치

10. 지역정체성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정체성을 특정 지리 공간과 사회집단 사이의 관계에서 출현하는 집합적 정체성으로 이해한다. 특히 이때 그 집단과 지역 사이의 일치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일치의 근원을 ‘자아’의 구성 방식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정체성은 사회집단의 균열을 따라 다원적이며, 단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장소와 맺는 관계는 당연히 그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위치에 영향을 받으며, 여기엔 해당 사회의 균열이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사회집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실천에 참여하며, 이는 다른 집단의 지역정체성 실천과 때론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한 경우 적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다른 지역정체성 프로젝트보다 우위를 확보한 지역정체성은 자신의 이미지를 따라 지역을 만들어가는 권력을 확보한다. 그에 따라 지역정체성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치열한 헤게모니투쟁(hegemonic struggle)이 발생한다. 이는 지역정체성의 정치

공간을 연다. 지역정체성의 정치란 각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지역정체성 프로젝트가 경쟁하는 경합공간(agonistic shere)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헤게모니투쟁을 말한다.

9. 헤게모니투쟁으로 지역정체성의 정치를 분석한다고 할 때, 이런 접근이 기존 진행되어온 제주 지역정체성 연구와 완전히 대립하는 건 아니다. 지역정체성은 “정치적으로 조작될 수도 있지만 적절한 문화적·역사적 경험의 부재는 상징이나 이데올로기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 무력하다.”³⁾ 곧 헤게모니 투쟁의 우위는 자신의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다. 모든 추상화된 구호가 동등한 정치능력을 갖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헤게모니 투쟁은 언제나 특정한 사회역사적 조건과 문화적 구축물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하지만 제주의 문화적·역사적 경험의 실체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헤게모니투쟁에선 정치적 번역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곧 조건이 정체성으로 자동으로 번역되지 않는다. 그래서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헤게모니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주의 문화적·역사적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자신의 정치·윤리적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유기적 구성 수준은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진다.

10. 또한, 다른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요소를 자신 안으로 통합하기도 한다. 그 통합의 방식이 보다 심층의 차원에서 이루어질수록 해당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보편성’은 강화된다.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동의 소속감 등을 보다 보편적인 프로젝트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편성은 그 구체적인 물적 토대를 갖추어야만 한다. 곧 물적 토대를 보편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물적 조건과 조직화된 말 사이의 균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힘들다. 헤게모니투쟁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정체성의 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제주의 문화적·역사적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어야 하며 (2) 그 번역은 다른 프로젝트보다 더 통

3) 임병조, 2010, 《지역정체성과 제도화》, 한울아카데미, 259쪽

합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신의 말을 따를 때 실현되는 물질 토대 곧 경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제주개발체제

11. 개발주의에 입각해 제주의 질서를 구축해온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블록(historical bloc) 그리고 프로젝트와 블록, 다른 집단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 질서를 ‘제주개발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제주개발체제는 식민지개발주의로부터 형성된 근대개발체제이며, 제주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형성 발전해온 개발체제다. 제주개발체제는 연속적이지만 동시에 그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지배 원리가 [식민지 개발주의 → 근대화 → 신자유주의] 과정으로 교체될 때마다 특정한 질적 차이를 보여준다. 제주개발체제는 개발경제의 주기적인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수습하는 다양한 형태의 헤게모니적인 실천을 전개하며, 그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배치는 복잡적이고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12. 제주개발체제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그 안에 특정한 유형의 지역정체성을 통합하고 있다. 이때 지역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세 역할을 한다. (1) 동료시민이 속해 있는 지역의 과거를 설명한다. 곧 동료시민에게는 이야기(story)를 제공하며 제주에는 역사(History)를 설명한다. (2) 과거와는 다른 미래로 나가는 전환적 동력을 제주의 지역정체성 안에서 발굴하고, 그 열정에 이름을 붙인다. (3) 과거의 부정과 미래에 대한 열정을 현재의 개발 특히 경제성장과 연결해 설명한다.

3) 장소판매

13. 제주개발체제를 만들고 형성해온 핵심 전략은 ‘장소판매’다. 제주개발체제는 장소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주를 개발하고 전체사회에 질서를 부여

해왔다. 이 과정엔 장소판매에 부응하는 시민을 만드는 과정이 포함된다. 장소판매는 동료시민에게 특정한 유형의 행동을 유도하는 일정한 합리성이다. 제주개발체제의 지역정체화(local identification) 투쟁은 (1) 장소판매를 통해 동료시민에게 물적 조건을 분배하는 동시에 (2) 장소판매와 제주의 미래를 강력하게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14. ‘장소판매’는 ① 제주라는 ‘장소’를 ‘입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② 입지의 잠재적 지대 상승을 위해 계속해서 장소를 개발하고 ③ 시세변동을 조장하여 장소를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활동을 말한다. 곧 장소판매에서 제주는 개발의 입지 그리고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된다. 장소의 입지로의 전환 과정은 그 자체의 자연과 공간의 생산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장소판매를 중핵으로 하는 제주개발체제의 동학은 제주의 물리적 지리에 그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15. 장소판매는 지난 2000년대 전후로 나타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과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로 환원되지 않는 보다 심층의 동학이다. 장소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산업도시의 쇠퇴와 함께 발생한 도시 및 장소문제에 대응하고자, 장소에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자본과 인구를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장소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다른 장소와의 경쟁 관계 안에서 실현되기에, 장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화, 소비화 그리고 마케팅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된다. 장소마케팅의 핵심은 이에 필요한 장소자산(place asset)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⁴⁾ 그래서 장소마케팅에서는 자본, 사람, 기술 등을 끌어들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장소형성(place making) 혹은 장소만들기를 통해 매력적인 장소자산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⁵⁾

4) 박배균,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459쪽

5) 김생수, 200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장소마케팅 전략: 영월군 박물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1), 209쪽

13. 장소판매와 장소마케팅은 장소를 동일하게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공통성이 있다. 하지만 장소판매는 장소 상품을 장소의 부흥이 아니라 장소를 다른 이에게 판매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곧 장소판매는 말 그대로 장소를 판매한다. 이와 같은 장소판매는 장소마케팅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제주개발체제의 중심 전략이었다. 또한 장소판매는 제주개발체제의 진화 과정과 함께 그 역사적 형태를 달리한다. 장소판매는 그 본성에서 장소만들기에는 무관심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장소만들기를 허용하기도 한다. 장소마케팅과 장소판매는 그래서 연결될 수 있다.

14. 장소를 판매하려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제주의 지역정체성을 (1) 와해시키는 동시에 (2) 새로 만들기도 해야 한다. 곧 지역정체성의 파괴와 건설이라는 이중 과정을 동반한다. 장소는 모두 (1) 위치 (2) locale(지역관계) (3) 장소감(sense of place) 등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를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화폐적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소 관계를 해체해야 하고, 판매를 옹호하는 장소 관계를 형성해 내야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장소판매는 그 위치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과는 다른 지역관계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감도 만들어낸다. 장소판매 안에서 동료시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며 적응해야 한다. 이 적응 과정에서 제주 시민에게 장소판매의 합리성으로 자신과 장소를 맺어가는 특정한 유형의 행위 양식이 등장한다. 이는 제주 시민들이 실제로 행위하는 과정 안에 내재된 정체성 혹은 제주개발체제와 동료시민의 상호작용 과정 안에서 형성된 특정한 유형의 통치성의 질문까지도 그 안에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4) 모빌리티(mobility)

15. 제주의 장소판매는 더 많은 자본과의 결합을 위한 끊임없는 규제로부터의 예외화 과정을 지향한다. 그에 따라 매끄러운 자본의 이동을 만들기 위한 모빌리티 전략과 결합해 있다. 존 어리가 말한 것처럼 모빌리티는 일상적인 운송,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인공물

(artifacts)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 상품, 자본 및 정보의 대규모 이동(Urry, 2000)을 포함하는 강력한 개념이다. 장소판매는 그 자체로 모빌리티의 흐름의 공간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에 필요한 모빌리티의 조건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기존 제주 연구와 새로운 연구를 연결하는 강력한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제주개발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이해를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주는 동시에 대항정치의 재구성이란 정치윤리적 과제에 접근할 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⁶⁾

16. 제주모빌리티와 개발체제 그리고 장소: 역사적으로 제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모빌리티를 ‘제주모빌리티’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제주모빌리티 시스템의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의 일부이자 그 제주라는 지역정체성을 규정하는 물리적 인프라 곧 기반시설(토대)이다. 근대화와 함께 제주개발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본다면 제주개발체제의 역사는 필수적인 모빌리티 시스템의 구축 역사였다. 제주모빌리티라는 접근 방법은 더 이상 전통적인 지역모빌리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반동적인 접근으로 보일 수도 있다. 더 이상 외부와 구별할 수 있는 순수한 로컬 요소들만으로 구성된 로컬 모빌리티는 물론 없다. 그럼에도 지역 규모에서 특수한 구조와 정체성, 의미를 지니는 지역 모빌리티가 만들어진다. 그 안에는 전지구적인 것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보다는 작은 규모의 차원들이 중첩되어 있다. 제주모빌리티는 다중규모(multi-scale)로 존재한다.⁷⁾

17. 제주모빌리티 시스템의 경계 확장과 그 물리적 규모의 확대는 제주개발체제의 확장

6)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 세계의 변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빌리티 접근방법뿐일지도 모른다. 스벤 케셀링·말렌 프로이텐달 페데르센, 2020, “네트워크화된 도시 모빌리티”, 《도시 모빌리티 네트워크》, 43쪽

7) 이는 아직 ‘지역의 힘’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정과 동일하다. 제주모빌리티의 확장을 위해 제주개발체제는 제주의 자연 공간을 매끄러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장소를 판매했다. 더 많은 모빌리티와 더 많은 인구유입은 언제나 더 큰 제주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모빌리티가 기본적으로 이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동의 장애가 되는 장소와의 애착 관계를 파괴하는 일은 자연스럽다. 제주개발체제의 확장 과정에서 모빌리티는 그 자체로 제주를 확장하고 발달시키는 '발전'과 동일시되었다. 이는 모빌리티의 확장을 제주의 성장과 동일시하는 역사적 결합물을 만들어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기반의 제주경제성장 구조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고 있다.

18. 제주모빌리티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바로 모빌리티를 통해 제주의 불균형발전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제주의 도시화 과정⁸⁾은 모빌리티의 발전 과정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으며, 중심과 주변을 구별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중심을 만들어나가는 자본의 이동은 사실상 인구와 상품이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모빌리티가 없다면 이를 실현할 신체를 확보할 수 없다. 제주의 도시화는 단일하게 구성된 동질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이질적인 다양한 공간과 장소가 만들어내는 하위사회(sub-societies)로 구성된다. 하위사회들의 분리와 통합은 모두 제주모빌리티를 통해 이루어진다.

19. 제주모빌리티의 시각은 제주개발체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 특히 지역정체성의 갈등과 그 정치의 다수가 제주모빌리티의 형성과 전개, 미래를 향한 경합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주모빌리티의 시각은 따라서 제주를 더 잘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합공간에 개입하는 대항정치 또한 모빌리티 전환(mobility turn)의 문제와 조우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8) 도시화 과정을 이해할 때 데이비드 하비가 제안한 (1) 생활방식으로서의 도시성 (2) 도시적 형태로서의 도시성을 구별해야 한다. Harvey, D. 10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Arnold

3. 제주 신개발체제와 지역정체성 프로젝트

20. 제주개발체제는 1990년대를 경유하며 일정하게 변화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와는 구별되는 신개발체제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⁹⁾ 신개발체제는 (1)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담론 하에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반발을 일부 통합하는 동시에 (2)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제주의 전망 및 그 실현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예외공간¹⁰⁾ (3) 특별자치라는 분권 등 삼중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로 인해 그 특성상 매우 예외적이며 모순적인 지역개발체제를 만들어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며,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환경과 사회경제의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¹¹⁾ 등으로 끊임없는 대립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개발체제였다.

21. 하위동맹: 제주신개발체제는 제주도민들이 장소판매에 끼어들어 부동산 수익을 향유하는 하위동맹을 형성했다. 이를 통해 제주개발의 헤게모니를 확장했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정 논의가 전개되던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중요한 점은 제주 신개발체제의 하위동맹 형성이 “지역개발의 민주화”¹²⁾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개정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간 제주 개발이 대규모 외부자본에만 특혜를 주는 개발이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개발을 통합하면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 매개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중심에서 제주 전역

9) 제주의 신개발주의를 비판하는 시민사회 글이 있다. 이영웅, 2019, “제주의 신개발주의와 지방자치의 위기”, 《제주의 소리》

10) 이승욱·조성찬·박배균, 2017, “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2), 269-282.

11) 이승욱·조성찬·박배균, 2017, 앞의 글.

12) 이승욱·조성찬·박배균, 2017, 앞의 글

으로 소규모 관광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이었다. 역설이 있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제주 전역으로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개발의 집중화 반대가 소규모 개발의 탈집중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22. 과거 제주개발체제는 1960년대 제주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 중심 특징은 발전주의 국가의 분업적 지역발전 전략이었다. 제주는 발전주의 국가 안에서도 차별적인 제도와 규칙이 적용되는 예외공간의 속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예외공간 속성은 신자유주의와 만나 보다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은 제주 구개발체제와 신개발체제를 구분하는 핵심 경계의 하나다. 만약 이와 같은 접근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제주개발체제를 [식민주의 개발체제 - 발전주의 개발체제 - 신자유주의 개발체제]라는 맥락 안에서 역사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작업을 위한 하나의 단순 도식이며, 현실은 식민주의, 발전주의, 신자유주의가 혼종된 개발체제로 작동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만으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최병두¹³⁾의 지적처럼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제주 신개발체제와 구개발체제를 비교할 때 발전주의와 구별되는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1) 예외공간과 장소판매 그리고 JDC

23. 제주 신개발체제는 국제 관계 안에서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론 동아시아 경제 권역 안에서 자본 유치를 위한 경쟁에 돌입해야 하며, 일단 경쟁 안으로 들어서면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경쟁에서 도태하게 된다. 장소판매의 동학은 바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지역으로 제주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동학이라고

13) 최병두, 2007,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84쪽

말할 수 있다. 장소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자본 운동의 예외적인 특구로 만들어야 하며, 이르기 위해서는 이중운동이 필요하다. (1) 장소는 자본의 운동에 유리해야하지만 (2) 동시에 다른 장소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중운동이 제주 지리의 자본주의적 재편 과정에 기입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24. 그 결과 제주는 국내외 다른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예외적인 규칙이 적용된 장소를 만들어낸다. 영리병원, 영리교육 시스템, 부동산 이민제 등이다. 이런 예외적 장치들은 제주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치들로 여겨진다. 곧 제주의 예외장치를 전국의 정상장치로 전환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동학이 이와 결합한다. 이는 제주 신개발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였다. 제주를 하나의 교두보이자 실험장으로 이용하는 국가전략이다.

2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개발체제의 정체성이 장소판매에 있다는 점은 현 제주개발체제의 제도적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5월이면 만들어진지 20년이 되는 JDC의 기간 20년 역사는 말 그대로 제주 장소판매의 역사였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JDC는 제주의 국제자유도시화를 위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광단지, 산업단지, 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는 지정면세점, 옥외광고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2) 지역정체성 프로젝트

26. 제주 신개발체제는 위로부터만 부과되어 만들어진 개발체제가 아니었다. 제주 신개발체제는 위에서 부과된 만큼 지역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였다. 제주개발동맹은 “지역관광 시장의 침체에 대응하여 대규모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자유도시라는 프레임을 이용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던 세

계화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였다.”¹⁴⁾ 제주 신개발체제가 형성되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약 20년은 (1) 제주의 지역경제 위기를 근거로 (2)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는 국면이었다. (3) 그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을 정체화하려는 다양한 실천이 전개되었다.

(1) 지구화의 위기와 지역 정체성의 전환 요구 담론

27. 제주개발프로젝트가 전통적으로 활용해온 지역정체성은 (1) 섬이라는 지리적 운명이 부여하는 취약성 (2) 내부 발전을 꾀할 수 없어 외부의 지원과 자원으로 섬의 경제를 관리해나가야 하는 숙명적 외부 의존성이었다. 경제의 차원에서 볼 때, 제주라는 섬은 너무 작고 너무 취약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섬이라는 지리적 구조에 내재된 하나의 공통성일지도 모른다(권상철, 183). 그러나 이런 취약성을 개발 프로젝트를 하나의 숙명 내지 지역주민의 숙원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치 과정이었다. 더구나 섬의 취약성은 이 과정에서 과잉 강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보여준 김석준¹⁵⁾의 논의는 이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김석준은 “섬 제주가 결코 척박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섬 제주가 아닌 풍요롭고 아름다운 섬”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28. 김석준이 말하는 척박성 담론은 분명 제주 개발주의 패러다임이 만든 지역정체성 전략이었다. “척박한 섬을 일구어온 제주사람들의 자기정체화는 드디어 지역개발의 신념으로 승화되어 재정체화되고 제주섬의 여기저기에는 거침없는 삼질이 가해진다.”¹⁶⁾ 이

14) 이승욱·조성찬·박배균, 2017, 앞의 글, 275-276쪽

15) 김석준, 2017, “제주도 ‘척박성 담론’의 재검토”, 《탐라문화》, 54, 14쪽

16) 김석준, 2017, 앞의 글, 47쪽

런 척박성 담론은 “1961년 쿠데타세력이 집권한 이후 보여줬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 지식인들의 호응”과 연동되어 이후 구개발체제를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가 되었다. 김동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4·3의 폭력과 국가 주도 개발의 폭력은 그 작동 방식이 다르지 않았다. 제주 4·3이 국민이라고 간주되지 않았던 비국민-제주에 대한 섬멸이 있었다면 국가주도 개발담론은 문명과 야만의 구별 짓기를 통한 로컬리티의 폭력적 재편성”이라고 말이다.¹⁷⁾ 그런데 신개발체제의 등장 과정에서 과거의 척박성 담론과는 다른 형태의 지역정체화(local identification) 전략이 등장한다.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1995년 제주도정이 발간한 잡지 《제주도》 뒤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제주도, 그리고 제주인은 근본적으로 소위 산고심곡수재(山高深谷水災), 석다박토한재(石多薄土旱災), 사면대해풍재해(四面大海風災)라는 삼재 속에서 도전과 극복의 문화를 형성해오면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전환능력’을 키워왔으며, 이 전환능력이야말로 우리 제주가 세계화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9. 척박성 담론 자체가 그 안에 극복의 실천과 정신에 대한 강조를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20년 동안 “도전과 극복의 문화”를 강조하는 지역정체성 담론은 과거의 척박성 담론을 ‘전환’의 국면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담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신개발체제가 형성되면서 전환의 관점에서 제주 지역정체성을 다루는 담론도 폭발했다. 두 접근법이 흥미롭다.

30. 하나는 현창국과 같은 언론인이 쓴 책 《제주다워야 제주가 산다》(2000, 한울)와 같은 문제제기다. 이 책은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제주도가 서구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곧 제주다움의 상실이다. 다른 하나는 제주

17) 김동현, 2019, “반공주의와 ‘개발’의 정치학: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5, 64쪽

가 살아남으려면 제주다움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다워야”, “제주가 산다”는 두 질문이 이렇게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김향원과 그 동료들이 쓴,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2000, 제주대학교 출판부)이다. 여기엔 “제주정신”이란 말이 등장한다. 말 그대로 전환기에 직면한 제주에 필요한 올바른 제주인의 의식 혹은 자세란 무엇인가를 권고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제주국제협의회에서 발간한 《21세기 제주발전의 모색》(2010)에서도 유지된다.

(2) 지역정체성의 동원: 새로운 제주의 구성과 통치성

31. 제주 신개발체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지구화의 위기와 그에 필요한 제주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개발프로젝트였다. 이 개발프로젝트를 지탱하기 위한 지역정체성 전략이 필요했다. 이는 단지 국제자유도시를 ‘지탱’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동의를 만들어내는 이상이었다. 국제자유도시에 맞추어 제주의 지역정체성을 ‘생산’하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해관계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적 동의가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작동방식에 어울리고 이를 만들어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주시민이 필요했다. 또한 그들이 속하면서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지역정체성이 필요했다. 주체화의 양식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참여하여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판타지’의 세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¹⁸⁾

32. 이중 가장 흥미로운 논의의 하나는 제주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담론과 정책 개입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국제자유도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주가 그에 맞는 체질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담론이다. 예를 들어 강창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8) 상탈 무폐, 2020, 《경합들》, 145쪽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분명한 한 가지 요인은 새로운 제도에 부응치 못한 불합리한 제주사회의 체질을 개선하여 선진 민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제주사회에 만연한 기존의 불합리적인 관습과 의식과 의존적 체질, 막무가내식 민원 요구, 서로를 인정치않는 불신풍조, 개발보상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공무원의 복지부동,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성, 상대의견을 존중치 않은 일방적 주장 등의 병폐를 조금씩 없애나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식적 차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⁹⁾

33. 뉴제주운동: ‘제주병’이란 담론이 등장한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병’을 치료하고 제주가 새로운 ‘체질’ 혹은 새로운 신체를 획득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제주의 신체란 ‘제주정신’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결국 제주의 물리적 지리였다. 제주병은 단지 정신이나 관습, 문화적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제주의 지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담론이 본격적으로 정책화 된 것이 ‘뉴제주운동’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2월 5일 ‘뉴제주운동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뉴제주운동 사업을 전개했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제주 미래 비전을 연결해 자존, 개방, 상생하는 새로운 제주를 만들겠다는 운동이었다. “도민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립적인 제주발전시스템을 구축”²⁰⁾하는 게 운동의 목적이었다.

“뉴제주운동의 기본정신은 자립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이 가지고 유무형의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인들은 척박한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섬사람으로서

19) 강창민, 2009, “제주특별자치도 뉴제주 운동의 과제와 향후 추진방향”, 《제주발전연구》, 13, 166쪽

20) 강창민, 2009, 앞의 글, 169쪽

의 개척과 자립 정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 실시 후, 점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제주정신이 훼손된 것이다. 이번 뉴제주운동 사업 중의 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 사업은 제주인의 자립적인 정신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브랜드사업을 발굴하고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도모하는 체제이다.”²¹⁾

34. ‘뉴제주운동’은 신제주개발체제가 구축하고자 하였던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뉴제주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제주병을 치료해 제주를 성과지향적 경쟁사회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이 전환은 위로부터의 압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동료시민 스스로 이루는 자동전환의 과정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제주병의 치료이다. 제주병은 스스로 나야 한다. ‘자립’ 혹은 ‘자조’라는 오래된 근대 통치술이 여기에도 나타난다.

(3) 기호로서의 장소소비

35. 제주 신개발체제의 개발계획은 제주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브랜드 마케팅(brand marketing) 전략을 이용했다. 그 결과 제주를 하나의 상품으로 브랜딩하여 장소 소비를 촉진하려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 중요했고, 이는 제주에 관한 다양한 ‘기호’를 생산했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의 지역정체성은 기호를 통해 매개되고, 장소소비는 기호로서의 제주를 소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김포공항의 이동통로 벽에 붙어 있는 제주 관광 포스터들은 그러한 기호로서의 제주의 일부를 이룬다. 기호로서 장소소비하는 단계는 제주라는 장소를 생산주의, 소비주의의 ‘소비’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는 성질을 형성한다.

36. 기호로서의 장소소비는 제주 소비의 방식을 모바일화(mobilized)한다. 제레미 리프킨

21) 강창민, 2009, 앞의 글, 172쪽

이 말한 후기 근대의 인간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변화가 그 물적 토대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 모빌리티 혁명이기도 했다. 장소소비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일어나며, 기호로서의 제주소비는 스마트폰 없이 작동할 수 없다. 지금의 제주론 모바일 미디어가 창조한 제주다. 디지털 네트워크 및 위치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무선 접근은 제주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제주 지리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형성했다.

37. 기호와 기의의 충돌: 지역정체성 프로젝트는 제주의 물리적 지리 공간의 재편성을 동반한다. 이 과정에서 기호로서의 장소소비와 제주 물리적 지리 공간의 재편성이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제주 지리의 재편성은 장소 소비 과정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초래했다. ①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과 같은 제주 기반시설 혼잡과 훼손의 증가 ② 기호를 지탱해야 할 제주 물리적 지리 공간의 상품성 저하로 인한 제주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약화. 이 두 가지는 제주라는 장소소비의 '경험'을 변경시켰다. 경험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논쟁이 제주에서 발생한 건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러웠다. 이는 또 다른 제주 경제 위기의 등장이었고, 제주개발체제는 이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개발 계획을 내놓아야 했다.

(4) 미래와 투기 그리고 부채로서의 개발

38. 제주 인프라스트럭처의 근본적 재구조화는 그 개발 계획이었다. 현재 주어진 제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는 그 기본 성격상 미래의 수요 예측이 필요했다. 과거의 경향이 미래로 투사되는 포캐스팅(forecasting)의 방법론에 따라 제주의 미래 수요가 계산되었다. 이제 남은 건 그 숫자화된 미래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제주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제주의 미래는 언제나 제주만의 미래가 아니라 제주로 이동하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39. 제주개발체제의 지역정체성에 내재된 특징의 하나는 제주의 물리적 지리를 미래의 시장 수요에 맞추어 재편성해나간다는 점이다. 곧 현실 수요를 따라 장소를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구 유입을 전제로 제주의 공간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 방식은 지역정체성 안에 제주의 ‘미래’에 관한 특정한 방식의 이해를 각인시킨다. 다른 유형의 미래, 곧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 등의 유형은 제주의 미래 담론에서 언제나 주변적이다. 제주의 지역정체성은 현재 추세가 계속 되어야 하는 미래에 맞추어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나가야 하는 정체성으로 규정된다. 이런 미래 규정이 제주의 인프라에 적용된다. 그 미래 규정 자체가 일종의 ‘투기’다. 미래의 가치 상승을 이유로 현재 상태를 개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주도 전체가 미래의 채권자가 아니라, 사실상 채무자가 된다. 미래를 끌어 당겨 지금 쓰고 있기에, 자신의 미래를 바꿀 능력을 저당 잡히기 때문이다. 제주의 미래는 제주의 부채다. 그 미래가 도래하지 않으면, 제주는 파산한다. 그에 따라 계속 제주를 그 미래에 맞추어 나가며, 그 미래를 만들어나가야만 한다.

40. 부채로서의 제주 미래의 특성이 제주의 지리 공간 생산 과정에 그대로 투영된다. 2045년에 맞추어 제2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그 하나의 예일 뿐이다. 언제나 제주로 끌어들여야 하는 유동인구의 수가 제시되고, 그에 필요한 공간 생산 계획이 발표된다. 공간 생산 자체가 부채로 작동한다고 할 때, 그 핵심 동학은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이 박탈된다는 데 있다. 곧 미래를 저당 잡히는 방식으로 공간을 생산한다. 그 결과 제주는 자신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박탈당한다. 자신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형태로 장소를 판매하고 장소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3) ‘제3의 자연’으로서의 제주와 도박의 섬

41. 제주의 물리적 지리와 기호로서의 장소소비가 충돌하며 발생한 장소소비 경험의 상품성 하락에 대응하여 제주개발체제는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확립해야 했다. 이는 기존

에 구축되었던 2차적 자연을 다시 재개발하여 그 이전과는 다른 3차적 자연(the third nature)을 활용하는 제주 장소소비의 다음 단계를 여는 것이었다. 제주의 1차적 자연을 소비하던 방식이나 그 1차적 자연을 활용해 테마파크와 같은 2차적 자연을 공급하던 방식과 구분되는 제3의 제주를 만드는 것이다. 이 3차적 자연의 개발에서 제주의 물리적 지리는 단지 그 배경으로만 물러나며, 완전히 자연과 분리되는 단계로 진입한다. 제주는 단지 화폐의 이동 안에 위치한 흐름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파악 가능해진다. 제주의 장소소비는 이제 화폐 그 자체의 소비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박’이다.

42. 제주개발체제의 장소판매는 제주를 전국 최고의 도박의 섬으로 만들었다. 한국에 있는 카지노 17개 중 외국인 전용 16개 그 절반이 제주에 있다. 제주도는 언제나 카지노는 ‘산업’이며 도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카지노산업이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카지노를 운영하고자 제주에서 카지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7-8곳에 이른다.²²⁾

43. 제주도는 예전에 관광호텔 유치수단으로 카지노를 활용했다. 제주도 카지노가 대부분 관광호텔의 부속 시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도박을 이용한 것이다. 1988년은 [자본-도박] 교환의 1차 분기점이었다. 1998년 당시 우근민 도지사는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의 활로를 찾는다는 명분하에 제주를 ‘동양의 하와이’나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개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제주도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5백만 평의 부지의 메가 리조트를 만들고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20억 인구를 겨냥한 대규모 오픈 카지노를 들이겠다는 것이었다.

22) 제주의 소리, 2015.01.19., “‘젠팅’ 신화역사공원 카지노리조트가 제주 모델이라고?”

44. 카지노는 제주 관광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는 최근 더욱 강해졌다. 카지노 관광객이 주변 국가로 분산되어 한국 관광산업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서 이기려면 소규모 카지노에서 대규모 카지노로 방향 전환을 해야만 했다. 관광개발학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관광개발학은 제주의 관광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연 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관광으로부터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제주 관광 전략의 재편을 요구하고, 여기에 메가 리조트가 주요한 전략이었다.²³⁾ 이른바 카지노와 리조트를 결합한 카지노 복합 리조트(IR) 도입이었다.²⁴⁾

45. 2019년 제주에선 ‘2019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복합리조트 콘텐츠 도입을 통한 이미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⁵⁾ 이때 과거 카지노 전략은 하나의 장애가 되었다. “제주 카지노들은 대부분 호텔 부대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소규모로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세계적인 카지노 산업의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²⁶⁾ 제주 신화공원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제주 드림타워는 이런 기조에서 나온 사업들이었다. 이때 카지노의 대형화를 허용하는 대신 지역사회 공헌과 교환하는 방식이 추진됐다. 개발 사업을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23) 시사저널, 2020.09.19., “제주도의 야심찬 도박 ‘카지노 보물섬 건설”

24) 머니투데이, 2018.11.21., “[제주도는 도박섬?①] 일 관광객 3배 ↑, 한카지노 10% ↓... 뒷집지다.. ‘망할 판”

25) 제주도민일보, 2019.11.12., “복합리조트는 제주관광산업 경쟁력에 꼭 필요”

26)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72쪽

4) 모빌리티 인프라의 근본적 재구화와 안보화

46. 현재 제주개발체제는 공항이나 항만 등과 같은 이른바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mobility infrastructure)에 관한 개발 국면에 진입했다. 국제자유도시 그 자체가 자본과 상품,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모빌리티의 증진을 위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국제자유도시의 제도화는 그에 적합한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조를 요구한다.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이 과거 개발과 다른 점은 말 그대로 인프라를 통해 제주의 근본적 생활양식이 그 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벌랜트의 언급처럼 인프라스트럭처는 “하나의 세계를 지속가능하게 해 주는 관계들을 서로 가깝게 연결시켜 주는 모든 시스템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은 다른 세계를 열어내는 것이다.²⁷⁾

47. 현재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의 하나는 장소관매를 안보화하는 경향이다. 이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화되자 그에 대한 극단적 대응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보화를 통해 해당 쟁점을 탈정치화시키는 동시에 일부 전문 집단과 관료 혹은 국가의 결정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는 탈민주화의 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소관매는 안보의 문제로 전환되어 버린다. 특정 인프라가 가지는 물질체계적 속성과 (1) 사회와의 관계를 은폐하는 방식으로부터 (2) 사회와의 직접적 영향 하에 이에 대한 국가의 물리설 수 없는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변화는 국가와 정부 주도의 지역정체성 구체화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예외적이고 비정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주 개발이 국가 전략의 일부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보다 심각하고 체계적으로 다시 질문해야하는 시기에 우리가 직면한 것은 아닌가 질문하게 한다.²⁸⁾

27) Berlant, Lauren, 2016, “The Commons: Infrastructures for troubling tim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4(3), p. 394

28) 이때 인프라스트럭처 개념 자체가 최초로 사용된 분야가 군사학이란 점은 흥미롭다.

48. 제주 신개발체제의 근본 구조가 안보화되어가는 경향은 제주 시민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근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가 현재 전환 국면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안보화 또한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1) 제주 내부의 특정 장소 개발 연합과 국토부의 동맹 (2) 제주도정의 민주적 무책임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안보화라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4. 불균등발전과 창조적 파괴

49. 제주의 지리를 이해할 때 그간 국가 전략과 자본의 동맹에 기초해 이루어진 (1) 전지구적 유동자본의 흐름과 제주의 지리 (2) 전국 내에서의 제주의 지리적 지위에 의한 균등화와 차별화의 이중운동에 제주 비판사회과학은 주목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은 동시에 제주 안에서 불균등발전을 만들어내는 균등화와 차별화의 이중운동도 만들었다. 균등화란 발전조건과 수준의 균등화를 말한다. 차별화는 개발의 수준과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 지리 안에 단지 지역 차이가 존재한다거나 자연적인 지리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제주개발체제가 균등화와 불균등화의 이중운동을 통해 지리적인 불균등발전을 만들어낸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²⁹⁾

50. 특히 제주 신개발체제가 특정한 유형의 위기 담론 곧 제주 관광산업의 주기적 위기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의 주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신개발체제는 이를 공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그 개발이 장소-특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 결과 “위기 이후에는, 위기를 통해, 아주 차별화된 지리적 공간이 남겨진다.”³⁰⁾ 제주의 지리 변화가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

29) 닐 스미스, 2019, 《도시의 새로운 프런티어: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강탈》, 동녘, 145쪽

30) 닐 스미스, 2017, 《불균등발전: 자연, 자본, 공간의 생산》, 한울아카데미, 231쪽

섬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그 지리적 확장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제주의 경제 위기를 동반하는 관광산업의 주기적 위기에 대응하여 유동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특정한 절대성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 결과 제주 지리의 끊임없는 내부적인 공간적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51. 시선의 분할: 제주개발체제의 불균등발전은 제주 도시화 과정 안에 직접적으로 각인되었다. 그런데 제주개발체제가 동원하는 기본적인 관광의 시선은 ‘농촌의 시선’(rural gaze)이다.³¹⁾ 관광의 시선은 제주를 당대의 자본 운동과 분리해 자연 그 대로의 상태로 바라보려는 시선이며, 이런 시선 안엔 농촌을 중심으로 제주를 바라보게 하는 권력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곧 제주개발체제가 형성하는 지역정체성은 제주 지역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사회화의 과정과 담론과 어긋난다. 그 결과 지역정체성에서 물리적 형태를 갖는 제주시민들의 실천과 담론적 차원이 분리되어 나타난다. 일상생활의 양식으로 도시화에 통합되어 가는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주가 동원해야 할 물리적 형태로서의 농촌을 전략적으로 지속시켜야만 하는 과제 사이에 분할이 일어난다. 그에 따라 제주 안에서 불균형발전과 지역정체성 사이에 매우 특수한 형태의 정체성 위계 및 분할이 만들어진다. 이런 분할은 불균등하게 발전한 장소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들이 (1) 장소발전을 이유로 (2) 개발을 요구하는 특정한 유형의 압력을 만들어낸다. 그에 따라 (3) 끊임없이 장소 개발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정상화(normalization) 된다.

1) 불균등발전과 개발압력 그리고 시민의 분할

52. 불균등발전 구조는 제주 개발압력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장소판매를 그 한계 이상으로 밀고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 닐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불균등발전은 사회발전

31) 농촌의 시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Abram, S. 2003, "The rural gaze", in Cloke, P. (ed) *Country Visions*. Pearson

이 동일한 속도와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발전 경향이 지리를 재구성하는 동학을 말한다.³²⁾ 이를 매개하는 구체적인 힘은 지대와 정책 결정이다. 그런데 정책 결정은 지대를 우회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이후 또한 지대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제주의 상이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준의 균등화와 차별화가 제주의 도시화 과정의 구체적인 양상을 결정하는 주요 조건이 되었다.

53. 지난 제주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조환경의 자본가치는 잠식당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그에 따라 제주개발체제는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입지를 찾아 끊임없이 제주를 횡단하고 있다. 입지는 곧 장소판매를 의미한다. 자본이 유입되는 순간 장소는 입지로 전환되고, 새로운 건조환경이 들어선다. 새로운 건조환경은 다른 입지의 건조환경 가치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던 현 입지의 지대를 상승시킨다. 닐 스미스가 말했던 “장소 간 시소”³³⁾라고 불렀던 현상이 제주개발체제 하에선 “장소 개발 간 시소”로 나타난다. 한 장소가 개발되면 얼마 후 또 다른 장소가 개발된다. 하지만 한 장소에서 멈출 것 같았던 장소 개발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 다른 장소로 퍼져나간다.

(1) 개발압력1: 지대격차

54. 닐 스미스가 제안한 잠재적 지대는 직관적으로 제주의 동학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잠재적 지대란 “현재 토지 사용에서 어떤 지역이나 동네는 일정량의 지대를 실현할 수 있다. 입지상의 이유로 보통 이런 지역은 토지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양의 지대를 실현할 수도 있다. 잠재적 지대란 어떤 토지를 ‘최고로, 그리고 최상으로 사용’(계

32) 닐 스미스, 2019, 앞의 책, 141-142쪽

33) 닐 스미스, 2017, 앞의 책, 158쪽

획가의 표현을 빌리면) 했을 때 혹은 최소한 더 높게, 더 잘 사용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지대의 양을 말한다.”³⁴⁾ 다시 말해 현실 지대와 잠재적 지대 사이의 격차 곧 지대격차가 존재한다면 자본은 유입된다. 이는 반대로 말한다면 잠재적 지대를 발굴하거나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지리적 변형 과정을 동반한다. 해당 토지를 ‘최고로, 최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지대의 관점에서 계속 추구하도록 한다.

55. 장소판매와 시민: 잠재적 지대의 생산은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자산 축적의 핵심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장소를 입지로 전환하는 데 몰입하는 시민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지대격차의 생산을 위해 연합한다. 투자매력의 유지 혹은 투자매력의 창출은 지대격차에서 핵심이다. 지역개발은 해당지역에 유동자금을 끌어들인다. 부동산 기업은 이를 ‘투자매력’이라고 말한다. 2020년 들어 제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걱정하는 논의들이 더 많이 늘었다. 침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가 부진한 지역개발이었다. 투자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래서 끊임없이 지역개발을 해야만 한다. 필요를 위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면 유동자본이 들어오 토지 및 주택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 당연히 지가가 상승한다. 2010년 이후의 제주 부동산 시장은 가장 직접적인 사례다. 일단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보되면, 자본이 들어오고, 그 자본은 투기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또 약속된 지역개발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한다.

56. 유동자본이 건설의 형태로 1) 신제주 2) 구도심 3) 동부권역 개발 등으로 제주 안에서 메뚜기떼처럼 돌아다니며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면 또 다른 장소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 불균등발전 지역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정치적 기획에 의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요구한다. 인위적인 조정에 대한 요구다. 제주도정의 도시계획과 아래로부

34) 닐 스미스, 2019, 앞의 책, 118쪽

터의 이와 같은 개발압력이 만나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장소판매 전략이 나타난다. 개발 요구는 한 개인이 할 수 없기에 지역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전략과 집합적 정체성 구성 노력이 동반된다. 각종 다양한 형태의 결사가 이 과정에 등장하는 이유다.

(2) 개발압력2: 무시와 열등감의 동학

57. 불균등 발전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는 단지 경제 규모의 차이가 아니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선 제2공항이 들어서는 입지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개발 계획이 공표된 이후 그 기획에서 배제된다는 건 (a) 상대적 박탈감 (b) 패배의식 (c) 때론 무시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을 제외한 제주 전체가 자신을 고립시켜, 자신에게만 경제적 주변부로 남으라고 강제한다고 느낀다.

58. 지역 격차의 강도와 무관하게, 일단 만들어진 무시 받는다는 감정구조는 자기 존재 전체를 걸 정도의 열정을 만들어낸다. 열정의 강도는 경제 격차에 따라 차등축적된다. 성장 중심의 경제구조가 동료시민의 관계를 뒤틀리게 한다면 바로 이런 이유다. 내가 살고 있는 지리적 위치 자체가 다른 동료시민에 대한 무시가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리적 위치만으로도 열등감이 발생한다. 그 결과 위치에 따라 동료시민이 분리된다.

59. 무시와 열등감의 구조 없이 현 제주개발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만약 무시와 열등감의 구조가 없었다면 제2공항 프로젝트는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 통치엘리트들은 언제나 이 무시와 열등감의 구조를 동원해왔다. 제주를 언제나 중앙과 비교하여 열등한 이들의 땅으로 재생산해왔기 때문이다. 제주의 발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어찌면 통치엘리트들이 중앙 통치엘리트들에게서 받은 무시와 열등감을 제주 전체에 투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3) 위치에 따른 권리의 위계와 시간에 따른 시민의 분할

60. 내가 속한 지리적 위치가 불균등발전뿐만 아니라 무시 구조와 연결되어 있기에, 그 위치와 개발을 연결하는 압력이 발생한다. 이때 개발 수익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위치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치에 대한 권리는 일차적으로 시간의 함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에 따라 시간을 중심으로 동료시민을 분할하는 시도가 이어진다. 제주의 모든 시민은 위치와 결합한 지속시간에 따라 위계적으로 분할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구별된다. 난민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아예 제주 안에 위치가 없는 이들이다.

61.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들 중 다수가 ‘이주민’이라고 보는 시각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 한 택시기사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언제까지 농사만 짓고 살라는 거냐?” 농사는 여기서 제주의 낙후성을 의미한다.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은 제주를 낙후한 상태에 고정시키려는 이들이다. 그래야 자신들이 누리는 농촌경관을 제주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관이 중요한 이들은 제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이들이다. 관광객의 시선으로 제주를 바라보는 이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그 땅이 제공하는 경관만 본다. 관광의 시선 안에 들어 있는 농촌의 시선에 대한 반대인 것이다. 농촌의 시선은 농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 그래서 삶의 문제는 보지 않고 경관만을 주장하는 이들은 농촌의 시선을 구현한 관광객일 뿐이다. 이주민은 제주도민이지만 그 안에 관광객의 시선을 체현하고 이들로 취급된다. 제주사람이 아닌 것이다. 제2공항이 도민의 숙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제주도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집단일 뿐이다.

2)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62. 불균등발전을 제주개발의 또 다른 동력으로 전유해내는 제주개발체제 아래에서 ‘창

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확대재생산이 진행된다. 원래 이 개념은 J. 슈페터가 자본주의 성장의 동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지만, 여기에선 다른 방식으로 이용된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자본주의 축적 주기에 내재되어 있는 상품 및 파괴를 가리키기 위해 이 개념을 활용한 바 있다. 이를 장소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장소판매 과정에서 상품으로서의 장소에 나타나는 주기를 가리킬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창조적 파괴란 장소를 판매하여 얻는 경제적 수익을 지향하다가 결국 그 장소를 파괴하는 걸 말한다. C.J. A. 미첼(mitchell)은 이 개념을 활용해 한 장소가 '창조적 파괴' 되는 과정을 ① 초기상품화 ② 고도상품화 ③ 초기파괴 ④ 고도파괴 ⑤ 파괴 이후의 다섯 단계로 나눈바 있다.³⁵⁾ 이 도식은 상품으로서의 장소가 특정 상품화 단계를 넘어서면 그 장소를 파괴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걸 보여준다. 초기 파괴 단계는 장소로 사람을 끌어들이던 장소의 매력이 파괴되는 단계이고, 고도 파괴 단계는 그 장소를 사람들이 떠나는 단계다. 이 연구를 제주에 만약 적용할 수 있다면 제주는 고도파괴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63. 창조적 파괴 동학의 가장 큰 문제는 파괴와 창조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주는 그대로 지속되어선 안 되고,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격차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또다른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 계속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고, 빗장을 치고, 그 빗장을 통해 다른 주변을 만들어 중심거점을 가치를 상승시킨다. 그 상승한 가치는 모두 부동산에 반영된다. 창조적 파괴의 동학에서 제주성장의 기본동력은 모두 장소판매에서 나온다. 그 결과 제주 개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나선형 구조가 된다.

64. 개발에 관한 비판이 아무리 거세도, 그 개발이 멈추지 않는 것은 개발이 파괴와 창조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슈페터가 후일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35) Mitchell, Cj. A. 1998, "Entrepreneurialism, commodification and creative destruction: a model of post-moder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Rural Studies, 14, pp. 273-86

에서 말한 “창조적 파괴의 지속적 질풍노도” 경향이 만들어진다. 개발은 파괴가 아니라 일종의 ‘혁신’(innovation)으로 규정된다. 제주라는 부동산의 기존 가격과 새로운 가격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제주를 새로운 부동산으로 만들어나가는 것, 이것이 제주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주 ‘혁신’이다.

65. 제주혁신이 제주발전의 동력이라고 할 때, 제주발전은 결국 제주라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업가 활동의 산물이 된다. 제주 경제 성장은 (1) 제주도민이나 제주의 자연에 관한 착취나 억압,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가 아니라 (2) 제주 부동산에 적합한 혁신 전략을 이끄는 기업가 활동의 보수로 여겨진다. 이는 바꾸어서 말한다면, 제주의 발전이 기업가적 관리로부터 발생한 것이지, 평범한 도민들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3) 불균등발전의 거대개발로의 전환: 공간적 선택성과 개발의 규모 뛰어넘기

66. 장소-성장연합: 제주개발체제의 불균등발전에는 ‘공간적 선택성’(spatial selectivity)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분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적 선택성은 지리적 불균등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불균형발전이 거대개발에 대한 압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 중심엔 지대 격차가 있다. “자본의 이동성은 이윤율이 높은 지역의 발전과 이윤율이 낮은 지역의 저 발전을 초래한다.”³⁶⁾ 불균등발전이 심화되는 경우 국가와 지역정책에 의해 ‘손해’를 입은 지역은 (1) 국가와 지역을 상대로 (2) 그리고 다른 지역과 지역 사이에 긴장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적 차원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성장연합을 조직하여, 자본과 국가계획을 지역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한 영역적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장소-성장연합은 제주의 지역정체성을 하나가 아닌 분할된 것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구축된 지역 간 불균형

36) 닐 스미스, 2017, 앞의 책, 260쪽

37) 박배균, 2005, 앞의 글, 22쪽

을 자신의 개발 담론으로 활용한다. 이런 장소-성장연합은 제주 지역정체성과는 구분되는 특정 장소의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다.

67. 균형발전론은 장소-성장연합의 중심 프레임이었다. 제2공항을 통한 균형발전론의 구조는 단순하다. 현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비제주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① 성장거점 지역이 필요하고 ② 그 성장의 추진 동력은 제2공항 건설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막대한 자본시설투자이며 ③ 그리고 이후 지속될 관광인구의 유입으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면 ④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생활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68. 이런 장소-성장연합과 제주 신개발체제는 친화적이다. 장소 성장연합이 등장할 때 제주 지역정부 차원에서 그 장소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을 경우 지역정부는 그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³⁸⁾ 분산화, 탈규제, 자유화 등의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주 신개발체제는 이런 장소-성장연합의 도전을 통제하고 조절할 정치적 힘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아래로부터의 정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 신개발체제 자체가 그러한 장소-성장연합의 전략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69. 예를 들어 균형발전론의 중핵인 성장거점론은 단지 건설촉진 범도민연대의 것만은 아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려는 국토부의 오래된 방식이기도 하고, 그 모델을 동일하게 제주도에 반복해 권역별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제주도정의 도시개발계획 공식이기도 하다. 제주도정은 제주도를 4대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권역의 성장을 이끌수 있는 메가프로젝트를 심어 놓고자 한다.

38) 박배균, 2005, 앞의 글, 22쪽

70. 규모뛰어오르기(jumping up): “규모 간에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작은 규모에 국한된 행위자들은 자연스럽게 보다 큰 규모에서 활동하는 보다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과 연대를 하고 이들의 물리적이거나 담론적인 권력을 동원해, 자신들이 작은 지리적 규모에서 추진하던 조절의 프로젝트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욕망”³⁹⁾을 보인다. 제2공항 갈등 과정에서 형성된 국토부와 성산-장소성장연합의 관계는 이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71. 국토부-성산 성장-장소연합의 관계: 성산 성장 장소연합은 (1) 국토부가 제시한 담론에 기초해 현재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담론을 펼친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전제로 제2공항과 지역발전의 상생계획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제2공항 갈등 과정에서 야기된 다양한 지역 내부적 갈등과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72. 용담동과 성산 장소성장연합: 국토부와 연대가 규모 뛰어오르기라면 용담동 등 현재 제주국제공항 피해지역 주민들과 성산 장소성장연합의 연계는 일종의 ‘규모 뛰어내리기’ 전략이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제2공항 추진이 반개발동맹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자,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이 국가적 개발프로젝트에 잘 부합하는 장소의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부 지역 행위자들로부터 정치적 지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73. 배후-비(非)제주시의 반복재생산: 문제는 그러나 이와 같은 균형발전론을 통해서도 균형발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며,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선 2-3개의 또 다

39) 박배균, 2005, 앞의 글, 32쪽

른 제주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말한다면 제2공항 균형발전론이 자기 지역 안에 또 다른 '제주시'를 만드는 걸 균형발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로 집중된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를 자기 지역 안에 만들자는 구상인 것이다. 그러나 《건설촉진 범도민연대》가 주장했던 것처럼 제주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주시와 비제주시 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불균형 발전의 결과였다. 중심과 배후를 나누고 그 중심에 공항과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유치하면 배후까지 경제효과가 과급될 것이라고 본 기존의 성장거점 균형 발전 전략이 현재의 불균형 발전을 만들어낸 것이다.

74.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이는 정반대였다. 중심과 배후의 격차를 만들어 내어, 그 지리적 격차를 중심의 경제 토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제주시를 만들어내려면 그 지역 안에서 또 다른 비제주시를 만들어야 하고, 그 격차를 유지해야만 그 중심 거점의 경제력은 유지된다. 그 경제력은 부동산의 가격으로 표현된다. 그 결과 이후에는 부동산의 가격을 유지하고 상승시키기 위해 성장을 해야만 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를 위해선 다시 중심과 배후를 나누고, 그 배후 안에서도 다시 중심과 배후를 나누는 끊임없는 불균등을 만들어내어 격차를 조직해내야만 한다.

75. 거대시설 유치는 부동산 가격에 반영은 되지만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가져오지는 않는다. 거대시설에만 주목할 뿐,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동료시민의 일상생활의 필요에 관한 경제적 조직화 곧 시민경제의 필요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무수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자원들이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메가-프로젝트로 이를 대체하고, 지역경제의 효과는 모두 부동산에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모두 제2공항을 보고 있는 사이에 동료시민의 필요는 충족되지 못한 채로 남는다. 그런데 이런 시민경제의 결핍이 (1) 불균등발전의 근거가 되고 (2) 이를 다시 제주개발체제가 개발의 동력으로 전유한다.

5. 부동산기업가-시민

76. 장소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투기적 폭리는 제주 경제의 노동구조를 변형시키지 못한다. 데이비드 하비가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에서 밝힌 것처럼, 투기적 폭리에서 발생한 화폐적 이득이 “다시 자본으로 전화되거나, 실현을 촉진하기에 충분한 유효수요가 생성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가치 창출의 증가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는다.”⁴⁰⁾ 그 결과 노동을 통한 화폐소득보다는 투기적 폭리까지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장소로 자산시장에 참여하여 분배를 받으려는 부동산기업시민의 심성구조(mentality)가 일반화된다. 이런 부동산기업시민의 심성구조가 다시 장소판매를 확장시킨다.

77. 부동산기업시민은 제주의 공간을 지대체계 안에서 파악하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미래 경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 시민이다. 지대체계는 인간의 개입 없이 움직이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장소를 만들어내는 토지나 그 위에 구축되어 있는 주택 등의 부동산을 사고 팔려는 시민의 행위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그 결과 부동산기업시민들이 지대체계를 통해 제주라는 공간 안에서 개별 공간의 사용을 조종하고 통합한다. 합리적 판단 근거 곧 부동산기업시민의 경제적 이성은 지대 체계에 근거하기에 이 과정에서 (1) 자연과의 관계 (2) 다른 동료시민과의 관계 (3) 특정한 사회구조와의 관계 (4)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은 지대 추구 행위 과정에서 배제되기 쉽다.

1) 부동산기업가-시민의 확산

78. 불균등발전과 창조적 파괴의 동학 속에서 주택과 부동산 자산시장이 확장되고 이를 통해 투기적 폭리를 취하려는 경향이 강화된다. 2010년을 전후하여 제주 주택시장의 과

40) 데이비드 하비, 2020,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172쪽

열 현상이 발생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06년 1억 5천만원에 분양된 노형동 프란체 아파트가 2015년 한해 동안만 1억 5천만 원이 상승하여, 5억 원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경제학자 정수연은 이와 같은 제주 주택시장 과열이 인구가 늘어난 수요확장이 아니라 은행 대출을 통해 아파트 시장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s)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인데, 2010년 이후 제주 주택가격의 급상승은 투자 후 시세 차익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레버리지 효과의 배경이 되어”주었다고 한다.⁴¹⁾

79. 은행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것이다. 제주도에 아파트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부터라고 한다. 특히 “제주도 내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격차가 커져 지역내 불균등발전 경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도민들이 생활에 편리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제주지 동 지역을 생활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심화되”었다. 또한 주택에 관한 수요는 유입 인구보다는 기존 도민들의 주택수요라고 한다. “제주도 내 대부분의 일자리 또한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⁴²⁾

80. 부동산기업가 시민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자금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진행한다.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올려 거품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판매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은 그 촉매가 됐다. 부동산기업가 시민의 구체적인 현실 양태는 주택이나 토지의 임대업자다. 제주지역 가계소득 대비 이자소득 비중을 따져보면 제주 부동산기업가시민의 현실 구조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자소득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이다. 그런데 이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은

41) 정수연, 2016, “제주도 공공임대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발전연구》, 20, 89쪽

42) 정수연, 2016, 앞의 글, 92쪽

부채다. 임대는 다른 시민의 부채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세, 연세, 월세, 사글세(일세 포함)로 제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가구의 31.9%에 달한다.⁴³⁾ 그래서 부동산기업가시민은 다른 동료시민의 미래를 저당 잡는 소득이다. 다른 동료시민의 노동에 기생하여, 그 노동의 미래를 저당 잡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81. 부동산기업시민은 제주도정에 의해 역사적으로 촉진되어 왔다. 제주도정은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부동산기업처럼 움직여왔다. 제주개발체제 하에서 제주도정의 역사는 제주라는 장소판매의 역사다. 이영웅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된 제주도는 사업자의 투자의향만 있으면 자본의 성격이나 사업계획의 내용은 크게 상관없이 곧바로 개발사업 예정자로 지정해 주었다. 개발사업이 시행될 입지가 환경적으로 타당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오름 분화구에 호텔이 들어서는 계획도, 꽃자왈을 밀어내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심지어 한라산 코앞에 거대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제주도의 판단에선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주도의 수장이 바뀌어도 제주도정의 신개발주의는 그대로였다.”⁴⁴⁾

82. 부동산기업으로서 제주도정의 역사가 가장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공유지(公有地) 판매다. 대규모 공유지의 매각도 문제지만 2020년 8월에 이루어진 소규모 공유지 매각 완화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소규모 공유지의 매각은 개인이나 민간 부동산 기업들이 해당 공유지를 매각해 중소규모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매각이 개인 부동산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출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유지를 판매해 개인 부동산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3) 한국은행 제주지부, 제주경제브리프 4호.

44) 이영웅, 2019, “제주의 신개발주의와 지방자치의 위기”, 《제주의 소리》

83. 개발을 조장하는 공유지 매각이 간접적 투기라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공적 계획을 이용한 투기 조장이었다. 탑동 공유수면 매립,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신화 공원 조성 등 제주도정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서도 대규모 관광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다. 제주도정은 제주 토지를 판매하고, 그 개발이익의 일부를 제주도정 예산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택했다. 제주도정은 이 예산으로 또 다른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규모 개발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한다는 이름으로 제주의 중소규모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84. 부동산과 시민의 관계를 예외적이지만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콘도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비록 외국인의 관광단지 내 체류시설이라는 부동산 투자로 국한되어 있지만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제주 신개발체제 아래에서 시민이 되는 법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2) 몸과 장소 그리고 ‘흙’: ‘살’의 판매

85. 몸과 장소는 연속적이다. 장소를 판매하고 그 장소를 창조적 파괴의 동학안에서 끊임없이 재개발하는 과정은 인지할 수 있는 수준부터 인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인간의 신체와 상호작용하는 물질적 교환관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장소판매는 단지 장소의 변형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몸을 변화시킨다. 장애 연구자인 로즈메리 갈랜드-톰슨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의 신체는 그 형성과정부터 자연에 의해 형성된다.⁴⁵⁾

45) 스테이시 엘리모, 2018,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43쪽

따라서 제주 자연과 공간의 생산 역사는 곧 제주라는 장소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신체의 역사이기도 하다. 장소판매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주 시민의 신체 변화를 동반한다.

86. 그 하나는 시민의 건강이나 능력 문제다.⁴⁶⁾ 그 핵심에는 ‘장애’가 있다. 제주 물리적 지리의 급속한 변화 과정은 시민의 신체가 적응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변형되곤 한다. 제주 노인의 교통사고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신체가 기억하는 장소의 논리를 따라 도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장소의 논리가 도로의 개설이나 교통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변형되는 것을 신체가 감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⁴⁷⁾

87. 장소판매는 해당 장소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자신의 장소에 살지 않기에 시민은 그 장소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쓰레기는 단지 쓰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흙’과의 유대감이 떨어진다는 걸 말한다. 농지 면적의 놀라운 감소 속도는 이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농지면적의 감소는 제주의 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농지면적이 감소한다는 건 제주의 공간을 생산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축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산기능을 상실한 토지는 제주 도시화 과정이 빨라지면서 도시의 지가 체계 내에서 그 공간조정이 이루어진다. 농지는 다양한 형태의 대지로 변경되었다.

88. 중요한 점은 시민이 토지를 팔 때, 자신의 ‘살’을 팔고 있다는 점이다. 장소를 구성하는 ‘흙’은 더 이상 자신의 살을 이루지 않는다. 그 ‘흙’은 단지 입지일 뿐이며, ‘흙’ 이용의 최종목적은 묻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그 위로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부어진다. 살은 숨을 못 쉰다. 이는 신체의 ‘장애’를 초래한다.

46) 스테이시 엘리모, 2018, 앞의 책, 42쪽

47) 이 견해는 함께 연구하고 있는 동료인 김태연이 말해 준 것이다.

3) 수직모빌리티: 제주 수직 공간의 식민화

89. 부동산기업시민은 수평 이동보다 수직 이동을 선호한다. 제주의 경관 특히 수직 모빌리티의 변화는 부동산기업시민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 도시 발전은 곧 수직 모빌리티의 가속화다. 부동산 가치와 건물의 높이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높이가 없는 건물은 그 자체로 잠재지대의 발굴 대상이다. 드림타워와 빌라의 높이 차이는 부동산 기업시민의 위세 차이를 만들어낸다. 동 지역의 1층 건물이나 빈 터 그리고 주차장은 계속 빌라로 바뀐다. 보다 넓은 대지는 아파트분양 투기를 노리는 부동산개발업자들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빌라-아파트-드림타워]의 형태로 수직 모빌리티의 위계가 발생하며, 수평은 수직으로 비틀어진다.

90. 건물의 수직 상승과 한라산: 건물의 수직 상승은 한라산과의 조화를 무너뜨린다. 다른 건물과의 조화도 무너뜨린다. 스티븐 그레이엄의 표현을 빌린다면 도시가 성장하며 “수직 공간의 급속한 식민화”(166)가⁴⁸⁾ 발생한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드림타워는 그 상징이다. “전례 없는 수직운송 시스템이 제공하는 훨씬 높은 초고층 타워는 오랫동안 모더니즘 건축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⁴⁹⁾ 드림타워는 “수직 메가 프로젝트”다.

6. 제주다움: 지역정체성의 경합공간

91. 제주 신개발체제의 지역정체성 프로젝트는 그러나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못했다. 제주 신개발체제가 동원하는 지역정체성과 맞물리거나, 반발하고 저항하는 또 다른 지역

48) 스티븐 그레이엄, 2020, “수직 모빌리티: 고층 빌딩 및 초-상층 공간에서 엘리베이터의 정치학 직면하기”, 《도시 모빌리티 네트워크》, 177쪽

49) 스티븐 그레이엄, 2020, 앞의 글, 179쪽

정체성이 등장하였다. ‘제주다움’은 그런 지역정체성의 경합공간이었다. 물론 ‘제주(도)다움’이란 단어는 제주 신개발체제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존재했다. 김태일의 책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에는 장일훈 도지사가 제주건축의 방향에 대해 “제주다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부분이 있다.⁵⁰⁾ 이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이미 ‘제주다움’이란 말은 도지사가 사용할 정도로 1970년대에도 널리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활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식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가 되도록 제주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주도로 탈바꿈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1985년 경향신문의 기사가 있다.⁵¹⁾ 이 말에는 ‘제주다움’이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주다움은 언제나 ‘탈바꿈’과 연결되어 있다. 1994년에는 이런 기사가 있다. 제주다움은 ‘외지인’의 시선도 품고 있다.

“제주다움이 생활의 어려움을 대변한다면 그런 제주다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대로 제주다움을 잃는 것이 경제적 윤택을 보장하는 지표가 된다면 이런 경우 제주답지 않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일까. 외지인의 정신적 유희일뿐인지도 모르겠다.”⁵²⁾

92. ‘제주다움’이란 표현은 그 양만 본다면 1990년 후반 이후 폭발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에서 등장하여 활용되고 있는 ‘제주다움’이란 단어와 그 담론의 사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50) 김태일, 2007,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 92쪽

51) 경향신문, 1985.07.06., “어드레 감수가?”

52) 경향신문, 1994.05.13., “풍수기행 최장조 교수의 ‘신국토순례’ 성읍 민속마을”

번호	이름	주체	내용
1	제주다움 체류지원프로그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스타트업 지원
2	제주다움을 여행하다	제주착한여행	
3	제주다움렌터카		
4	아카데미 제주다움	민속자연박물관	
5	“누가 뭐라해도 제주의 경쟁력은 ‘제주다움’”		비자림로 공사 비판글
6	“제주다움, 그리고 제주인”	칼럼/홍성배	제주개발 비판
7	제주다움 크릴오일56		
8	제주다움 제주도산 무농약 새싹보리		
9	“코로나19위기, 제주다움 살리면 기회가 될 것”	제110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	
10	무릉2리 제주다움복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11	“제주다움 사라지는 제주”	블로그	제주 정체성 훼손 및 상실

93. ‘제주다움’이라는 지역정체성 정치 경합공간은 다음과 같은 3요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1) 하나는 제주 산업과 성장을 위해 지역정체성을 창조하여 더 큰 범위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종의 새로운 입지 형성 전략이다. 곧 제주 전체를 하나의 산업입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전통적인 개발전략을 계승한다. (2) 다른 하나는 대안적인 제주를 만들어내는 대안 지역정체성 전략이다. 대안 전략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입지가 아닌 장소로서의 제주를 강조하며, 장소성의 의미와 실천을 중심으로 제주의 대안을 제시한다. (3) 마지막 하나는 개발전략과 대안전략 사이에 모호하게 존재하는 중간영역으로서의 제주다움이다. 이 영역은 두 전략 모두와 결합할 수도 있고, 두 전략 모두와 분리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제주다움은 전략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감정이다. 제주다움은 소멸하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94. ‘제주다움’을 해석하는 입장은 다원적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 요소가 있다. <제주의 소리> 한형진 기자는 2019년 “무엇이 제주다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 미술가의 답변을 소개하고 있다. “무엇이 제주다움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제주는 돌 하나, 나무한 그루에도 삶의 모습과 이야기가 담겨있다”며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어우러짐이 깨진 발전으로 제주가 갖고 있는 원시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피력했다.⁵³⁾ 이 미술가의 답변은 단지 한 개인의 답변이 아니라 제주다움에서 경합하고 있는 모든 집단과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답변이다.

95. 제주다움을 둘러싼 경합공간에서 일치하는 하나의 지점은 제주의 자연 그러나 “어우러짐”이라고 하는 특정한 조화가 존재하는 자연 상태를 제주다움의 ‘원형’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과 어우러짐이 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제주 답지 않은 것’으로 규정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 결과 제주다움의 담론은 긍정적 의미를 지닌 다양한 가치들로 채워진다. 로케일(locale)의 수준에서 실제 제주 안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배제되며 현재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들만 ‘제주다움’을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제주다움에는 항상 (1) 가치 있는 제주다움은 지키고 (2) 미래지향적 제주다움은 만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결합된다.⁵⁴⁾

96. 이와 같은 제주다움에 대한 이해에는 제주의 ‘잠재력’이란 관념도 결합해 있다. 곧 제주다움은 단지 과거를 지향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열린 개념이다. 곧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구성된 개념이다. “답다”는 말 혹은 “다움”이란 말은 제주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제주 안에 제주다움이라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도식이 나온다. “제주는 ‘제주다움’을 지킬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⁵⁵⁾ 그래서 제주다움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굴할 수도 있다. 2018년 이니스프리모음재단과 제주연구원은 공동으로

53) 제주의소리, 2019.02.07., “‘제주다움’ 진지하게 고민하는 젊은 제주 미술인”

54) 조사 중에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김수종이 쓴 “서귀포다움’에 대하여”라는 글이다.

55) 제주투데이, 2016.05.28., “‘제주다움’이란 무엇인가?”

“제주다움의 가치 발굴과 확산”이란 포럼을 진행했다. 이유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발굴해 그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제주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간다는 것이었다.⁵⁶⁾

97. 현 제주 지역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큰 동맹 구도인 개발동맹과 반개발동맹의 대립구도는 제주 신개발체제 형성 과정에서 구축된 것이었다.⁵⁷⁾⁵⁸⁾ 제주 신개발체제는 그 안에 복합적 모순을 내재한 체제였기에, 반개발동맹 또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개발동맹이나 반개발동맹이나 모두 ‘제주다움’이란 전략을 수용하고 있다. 제주다움 담론의 이와 같은 구조가 개발동맹과 반개발동맹 모두 이 ‘제주다움’ 지역정체성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98. 제주다움의 담론구조는 박배균이 본질주의적 장소관이라고 이라고 말했던 다음의 3요소를 모두 간직하고 있다. ① 개별 장소들은 그들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나름의 고유하고 원초적인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② 이 장소성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③ 특히, 장소마케팅은 사라져가고 있는 이들의 장소성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⁵⁹⁾

1) 신지역주의 지역발전론과 제주다움

99. 제주 신개발체제의 형성과 함께 ‘제주다움’은 제주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정체화 전

56) 파이낸셜뉴스, 2018.02.19., “제주다움 발굴·확산 위한 모음포럼 20일 개최”

57) 박배균, 2005, “지역정치가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간과 사회》, 23, 35쪽

58) 부만근, 1997, 《제주지역 주민운동론》, 온누리

59) 박배균, 2010, 앞의 글, 503쪽

략으로 급부상했다. 2016년 제주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개발의 최전선, 제주”였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한 제주포럼 사무국의 ‘Jeu Forum Review’에는 “‘제주다움’이 곧 세계적·보편적 문화”라는 리포트가 실렸다.⁶⁰⁾ 이 리포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화 세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주의 난개발과 외국인 토지 매입이 제주의 고유문화 보존을 위협하는 요인이라 분석했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제주라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살린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12)⁶¹⁾ 여기에서 언급되는 제주다움은 (1) 수려한 자연환경 (2) 고유문화로 요약된다. “제주민의 삶”(13)이란 표현도 눈에 띈다. 제주민의 삶이 하나의 문화풍경으로 드러나도록 제주를 개발하는 방식이 ‘제주다움’이란 것이다. 결국 ‘제주다움’이란 “제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100. 최근에는 “제주다움”을 ‘제주의 미래가치’라는 이름으로 제주의 미래 정체성을 제시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⁶²⁾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제주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제주다움은 이 단계에 도달하면 제주의 미래 개발을 위한 잠재력인 동시에 그 잠재력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원리로 이해된다. 곧 개발의 방식을 조정하고 틀 짓는 원리로 ‘지속가능성’과 거의 같은 수준의 원리가 된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성’은 언제나 ‘글로벌’의 관점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체류프로그램은 ‘글로벌제주다움’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엔 글로벌(global)이란 이름으로 지역과 지구화의 중첩으로 만들어지는 ‘제주다움’을 상징한다.

101. 신개발주의에서 드러난 주요 차이점은 제주 산업전략보다는 그 문화전략에 있다.

60) Jeju Forum Review, 2016-04, “지속가능개발의 최전선, 제주”

61) Jeju Forum Reivew, 앞의 글

62) 문대립, 2019.04.02., “제주의 미래가치와 JDC의 역할”, 이슈제주

제주다움을 고유문화 안에서 정의하면서, 문화를 통한 새로운 제주 개발 전략이 산업전략과 함께 맞물려 진행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문화전략이 제주의 불균등발전으로 나타나는 여러 도시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차용되는 것이다. 곧 제주 신개발체제 안에 자신의 문제를 교정하는 하나의 혁신체제로 문화전략을 통합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나 공공미술프로젝트와 같은 형태 혹은 문화도시 등의 이름으로 ‘제주다움’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유정은 한 신문 기고글에서 “제주다움 잃어가는 시대의 문제의식”이라며, 마을만들기가 제주다움을 상실하는 마을의 ‘화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⁶³⁾

102. 이런 문화전략과 산업전략이 만나는 결과는 제주다움을 특정한 장소와 연결해 이해하는 방식이다. 제주 안에는 ‘제주다움’을 만날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존재하는데, 그곳은 변화에 노출된 빈도가 낮은 혹은 변했지만 여전히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 ‘제주다움’과 연결된다. 곧 제주 안에는 제주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설정이다. 이런 장소의 의미와 가치를 살려 제주 개발의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문제는 그와 같은 장소가 지정되는 순간 다른 장소들은 모두 무차별적인 개발 계획 앞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제주다움이 관광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런데 제주개발체제는 이런 관광의 시선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제주다움에 대한 동료시민의 반발을 조직해낸다. 제주다움이 자연과 동일시되면서 나타나는 [제주-개발]의 대립에 대한 불만을 동시에 조직해내는 것이다. 관광의 시선은 제주를 자연에 고정시키려는 시선으로 변형된다. 불균등발전의 구조는 관광의 시선을 욕망하면서 그 관광의 시선에 내재된 대상화를 개발의 압력으로 변형시킨다.

63) 김유정, 2015.06.16, “제주다움 잃어가는 시대의 문제의식”, 제민일보

2) 대안전략과 제주다움

103. 제주파괴의 대응담론이자 제주의 미래 대안 전략으로 제주다움이 호명되었다. 곧 반대운동이 제주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제주다움을 호명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출현했다. 반개발동맹의 ‘제주다움’은 제주 신개발체계가 추진해온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래 전망에 대항하는 대항담론 혹은 대안 비전의 위상을 제시하고자 제안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강봉수는 “나는 제주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실천전략은 제주의 문화에 토대를 두고 짜여져야 한다”며 제주발전의 비전으로 “제주다움”을 제안하고 있다.⁶⁴⁾ 이와 같은 ‘제주다움’은 일차적으로 문화에 주목한다. 제주의 고유한 문화문법에 토대하지 않은 지역발전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⁶⁵⁾ 그 편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이 많다. 2016년 제주포럼에서 한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다. 제주다움의 본질은 “제주를 만들어낸 바탕”이며 그 요소는 바람, 돌 등 풍토와 자연을 들었다. 그리고 “제주다움을 잃어버린 경우”로는 아파트의 난립을 들었다. 제주도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양식이란 이유다.⁶⁶⁾ 이런 각도에서 보면 ‘제주다움’은 개발에 대립하여 반규정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104. 반개발동맹이 개입하는 제주다움 담론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주다움’을 제주 관광의 토대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과잉개발로 인해 그 제주다움을 제주 스스로가 파괴하는 선택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곧 개발은 제주다움의 자기파괴적 악순환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게 개입 담론의 중핵이다.⁶⁷⁾ 이런 점에서 반개발동맹의 ‘제주다움’은 반개발담론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개발담론 곧 대안개발담론이다.

64) 강봉수, 2013, “제주다움의 비전과 모색을 위한 방법론”, 《제주미래비전과 특별법》 자료집, 27쪽

65) 강봉수, 2013, 앞의 글, 32쪽

66) 제주투데이, 2016.05.28., “‘제주다움’이란 무엇인가?”

67) 제주투데이, 2016.05.28., “‘제주다움’이란 무엇인가?”

105. 그러니까 ‘제주다움’은 그 자체로 개발에 반대하는 담론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개발 담론과 결합해 있는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움’이란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농촌 어메니티 혹은 생태 어메니티(amenity)라는 기존 개념이 ‘농촌다움’으로 번역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담론이라는 지적에는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어메니티란 “농촌 특유의 전원 풍경, 역사적 기념물, 지방고유의 축제나 문화적 전통, 토속음식, 야생 동식물 등 관광이나 특산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한다. 곧 ‘다움’에는 이미 관광의 시선에 바라본 지역개발의 담론이 들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다움이 단지 제주 안의 내부 시선만으로 규정되고, 밖과 소통할 수 없는 폐쇄적 담론이라면, 그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106. 제주다움에는 정치적인 동원 이유도 있다. 개발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집단들 또한 그 저항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을 동원한다. 특정 장소는 이때 단지 구체적인 장소로 등장하지 않고 전체 제주와 동일시되거나 제주를 상징하는 장소로 보편화된다. 장소가 아니라 제주라는 지역정체성을 동원하는 이유는 (1) 특정 장소의 경계를 구획으로 집단을 조직할 경우 저항에 필요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제주 전체로 확장해야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동력을 조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 반개발동맹이 동원하는 제주라는 지역정체성엔 일정하게 규모의 정치(politics of scale)라는 차원이 존재한다.

3) 제주다움: 상실 감정 혹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신’

107. 제주개발체제가 작동하면서 특유의 감정구조가 발생한다. 이는 제주에 대한 장소애와는 다른 감정이다. 제주를 소비하는 장소로 판매하는 일이 올바른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감정이다. 개발 과정에서 수치심, 죄책감 등과 같은 도덕적 감수성이 발생한다. 이런 감정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우리의 사고, 행위, 지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렌즈와 같이, 인간을 서로서로와 그리고 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연

결하는 ‘요소’의 일부”⁶⁸⁾이기 때문이다.

108. “뭔가 확실치 않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느낌이지만 퇴화된 종교적 체험의 기억이라고 인식되는 감정”⁶⁹⁾이 제주의 창조적 파괴 과정 안에서 축적된다. 이 퇴화된 종교적 체험의 기억과 감정은 자본의 논리를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그 일정 경계를 넘어설 때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불확실하고 어려운 느낌으로 제주 시민에게 되 돌아온다. 이런 점에서 제주의 ‘신’은 완전하게 추방되지 않았으며 제주개발체제와 특정한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은 언제나 단순히 ‘자연’이 아니라 어떤 성스러움과 결합해 있는 존재였다. 이런 자연의 탈신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런데 개발체제는 이런 탈신성화 그것도 근대 과학자들이나 도달할 수 있던 완전하고 철저한 탈신성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런 감정으로 인해 개발체제가 요구하는 자연의 탈신성화는 결국 극단으로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7. 대항해계모니적 개입의 난점들

109. 제주다움이 지역정체성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경합공간으로 등장하면서 ‘제주다움’은 그 해석의 정치 문제가 될 뿐, 현재 수준에서 가장 공고하게 작동하는 제주의 대안 지역정체성 담론이 되었다. 문제는 제주다움이 제주의 과잉개발을 비판하며 잃어가고 있는 제주의 가치에 대해 계속 질문하도록 만드는 열린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담론에 내재된 제주라는 장소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이다.⁷⁰⁾ ‘제주다움’에 내재된 본질주의적 관

68) 제프 굿윈·제임스 M. 재스퍼, 프란체스카 폴레타, 2012, “왜 감정이 중요한가”, 《열정적 정치》, 한울아카데미, 25쪽

69) M. 엘리아데, 1998, 《성과 속》, 한길사, 147쪽

70) 박배균, 2010, 앞의 글 참조

점을 넘어서려는 대안적인 접근법, 예를 들면 제주다움을 제주라는 장소의 사회적 구성에 개방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장소 이해에 대한 본질주의적 이해는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안 지역정체화 전략을 펼치는 데 다양한 유형의 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1) 제주토착주의 비판의 약화

110. 토착주의(indigenism/nativism)은 원래 태생적으로 그 지역에 오랜세월 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선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념을 말한다. 토착주의는 자신의 지역을 강탈하려는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그 지역을 지키는 강력한 토대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외부’와 ‘내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그 경계를 가르며 ‘외부’를 배제하는 또 다른 동학을 낳기도 한다. “제주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사실상 “제주사람”에게만 제주의 미래를 둘러싼 담론 지형에 개입을 허용하는 이와 같은 제주토착주의는 제주라는 장소에 대한 본질주의적 장소감에 바탕을 둔다.

111. 이런 제주토착주의는 제주개발체제 과정에서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반개발동맹이 제안한 ‘제주다움’은 제주토착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며, 제주라는 장소에 대한 다른 감각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내부-외부]의 선명한 경계를 따라 작동하는 제주토착주의는 제주의 불균형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

112. 제주토착주의가 제주의 근대적 합리화 과정이나 추상화된 공간의 생산으로 상실되어가는 제주의 원초적이고 본래적인 의미에 대한 옹호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주토착주의는 역설적으로 제주를 그 동질성의 일부로 통합하면서 제주의 창조적 파괴를 지향하는 열망의 근원이 되고 있다. 곧 장소의 고유성에 대한 상실이 아니라 장소의 판매를 통해 제주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유형의 토착주의다. 특히 이 점에서 ‘제주다움’이 제

주토착주의에서 ‘농촌의 시선’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주다움은 제주를 농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시선 속에 고정시켜 놓으려는 시선이 된다. 그 결과 제주다움은 자신의 장소에만 제주다움을 요구하고 다른 곳에는 제주 아닌 다른 상태 곧 개발상태를 허용하는 기득권적이고 불공정한 시선으로 이해된다.

2) 영역적 자율성의 토대로서의 제주의 불가능성

113. 장소판매의 동학이 보편화된 제주개발체제에서 이에 대항하는 반개발동맹의 전략적 구호는 언제나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도민 결정’의 권리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요구는 두 가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는 장소의 본질적 경계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현대 장소성의 구성 동학과 연결되어 있다. 반개발동맹은 국가의 계획이나 자본의 투자 및 이동 혹은 그와 연관된 다양한 제주 파괴의 동학을 ‘외부’의 동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물론 정치적인 것이다. 내부에 다양한 개발압력과 그 동의의 토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경험적, 실천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최대다수의 동원을 위해 ‘제주’라는 지리적 정체성과 자신을 결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외부’와 대립하는 ‘내부’를 호명해야 할 상황에 계속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개발체제 자체가 이른바 ‘다규모’(multi-scale)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외부와 구별되는 선명한 경계를 지닌 내부로서의 제주 곧 그 자체로 자율적인 규모로서의 제주는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든 국면이다.

114. 하나의 ‘도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단일한 의지를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는 ‘도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도민을 정치적 주체로 호명하는 실천이 무의미하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 정체성은 완전히 분열된 파편적 의지들의 배치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헤게모니(hegemony) 이론에 따르면 제주의 지역정체성과 도민의 집합의지는 헤게모니적 집합(hegemonic articulation)의 결과로 잠정 고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사실상 반개발동맹은 ‘한 도민’ 프로젝트가 아니라 ‘두 도민’ 프

로젝트를 통해 제주도민을 동원하고 있다. (2) 그런데 제주개발체제에 맞서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민 전략을 택한다. 그에 필요한 수준의 헤게모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115. 스케일의 정치와 틀의 어긋남: 제2공항 문제는 영역적 자율성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제2공항 문제는 누가 당사자인가를 규정하는 문제를 포함했다. 왜냐하면 제2공항은 단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구성원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관련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먼저 결정했어야 했다. 역설적으로 이 틀의 어긋남을 능동적으로 활용한 건 국토부였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틀을 제시하며 제2공항과 제주 사이의 어긋남을 국민 담론으로 메꾸었다. 동시에 안전을 결합시키면서 국민으로부터는 결정 권한을 박탈했다. 그에 따라 제주는 영역적 자율성을 상실했고, 국민은 결정권한을 박탈당한 채 모든 결정 권한은 다시 국가로 집중되었다.

3) ‘인민’의 퇴장

116. 지역정체성의 정치에서 ‘인민’의 퇴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 개발과 제주 지속 사이의 대립은 (1) 국가엘리트와 지역엘리트 (2) 고학력자 지역엘리트들 사이의 대결구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제2공항 반대운동과 같이 제주의 미래를 둘러싼 투쟁에 인민을 동원하는 데 현재 운동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잘 보여준다. 도민회의운동이나 천막촌운동 혹은 민중연대와 같은 계급운동 모두 인민의 열정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에서의 모든 조직화는 그들이 누구이건 99%에 속한 다른 소속원들과의 연대정신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⁷¹⁾ 특히 이 부분에서 수직주의와 수평주의라는 두

71) 데이비드 그레이버, 2013,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이책, 234쪽

운동의 방식 모두 제주에서 구조적 장벽을 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수직주의란 지도구조를 가진 운동이란 의미다. 반대로 수평주의란 의도적으로 지도구조를 갖지 않는 합의구조 운동을 말한다.

(4) 아래로부터 구성되는 개발압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부재

117. 외부 곧 국가나 자본에 의해 외부로부터 진행되는 개발이 아니라 그 개발체제의 일부로 지역의 행위자들에 의해 추진되는 개발체제의 과정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다. 제주 사회운동은 (1) 강력한 반개발동맹을 구축하여 국가의 정책과 자본의 이동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을 보다 민주화하거나 지역개발과 조화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했지만 (2)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 내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대체할 다른 유형의 지역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다.

(5) 대안 경제 프로젝트의 부재

118. 제주 불균형발전의 구조로 인해 제주토착주의가 심화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뒤처지거나 무시되고 있으며 때로는 버림 받고 있다는 감정은 또 다른 개발에 대한 동력으로 연결되며, 이는 투기적 행위를 일삼는 부동산 기업들과 개발자본들 그리고 제주개발동맹에 의해 능숙하게 이용당한다. 따라서 제주토착주의와 제주개발체제의 동맹 구조를 아래로부터 해체하는 경로는 제주의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탐색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119. 그 대안은 제주에서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를 촉진하는 새로운 사회전략을 구체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목표를 지닌 건설적인 정치적 출구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불만들이 정체성주의적”인 균열로 나타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경제조직 및 계급 불평등과 관련해 믿을 만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변화를 향한 희망이 경계와 정체성에 대한 열광으로 읊아간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⁷²⁾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목표를 지닌 건설적인 정치적 출구의 창출 문제로 정리된다. 이는 제주에서 “제주시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던 제2공항범도민건설촉진연대의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

120. 생태-평화적 전환과 경제적 전환의 분리: 이는 제주에서 제주시란 무엇인가라는 범도민건설촉진연대의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답하는 일이다. 방향은 그러나 반대다. 수많은 제주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 제주시를 ‘탈(脫)’제주시화하는 데서 우리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까지 반개발동맹이 제안한 “제주다움”에 개입하는 지속가능성 전략이 (1) 생태-평화적 전환에 대한 요구에 비해 (2) 불균등발전을 만들어낸 제주의 장소판매와 그 창조적 파괴의 동학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경제 모델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현재까지 반개발동맹의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논의는 일종의 ‘사회적 제주’(social jeju)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담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제주’가 반개발동맹의 지속가능성 전략으로만 이용되는 건 아니다. ‘사회적 제주’는 제주개발체제와 반개발동맹의 영역에 걸쳐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표현을 빌리면 ‘중간경제’지역이다. 이는 제2공항 반대운동과정에서 제주 사회적 경제 진영이 보인 광범위한 ‘무시’전략이 반증한다. ‘사회적 제주’ 전략은 제주다움을 자신의 상품브랜드나 장소마케팅 전술로 활용하고 있지만, 제주다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거시규모의 존속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는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못하다.

72) 토마 피케티,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1022쪽

8. 결론:

장기비상시대와 철새의 날개 그리고 대안 지역정체화 전략으로서의 ‘공동도시’(common city)

121. 우리는 불평등에 대항하는 다수파연합의 구성 실패와 제주 시민에게 제공하는 민주적 지역 정체성의 실패가 불균형발전에 기초한 지역 간 개발경쟁구도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제주의 불균등발전이 자본의 운동 속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 구성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 또한 이에 개입하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개입의 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다수파연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대안 지역정체성은 무엇인가? “제주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정치윤리적 대안 없이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곧 우리에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정치윤리적 계기가 필요하다. “세력균형 역시 특히 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다시 말해, 역사에서는 사상들과 이데올로기들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계와 다른 사회를 상상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언제나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사상과 이데올로기다.”(20)

1) 장기비상시대와 철새의 날개

122. 우리 모두는 2030년 안에 제주가 지속가능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파괴와 해체의 경로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하는 중대한 국면에 직면했다. 이는 제주도민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성장거점의 경제발전 전략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제한된 자원이지만 동료시민의 필요 충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적 시민 분산경제로 전환해야만 지속가능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 물리적 하부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분산 문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문제다. 제주도에 더많은 공항이 아니라, 더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23.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장기비상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 파괴와는 다른 유형의 균형발전의 전략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공동의 미래이며 그것도 반복해서 우리의 새로운 정상성 안에 들어가야 하는 미래가 되었다. 누군가는 비상상황이 새로운 정상성이 된 시대를 ‘장기비상시대’라고 불렀다. 장기비상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 현재 제주의 경제위기는 예외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의 정상상태며, 관광자산은 주기적으로 외적 조건에 의해 좌초자산으로 변경되어 제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다. 또한 재난과 질병의 주기적인 도전 그것도 장기적인 영향 하에 우리의 경제를 구상해야 한다. 우리에겐 우리의 동료시민을 공동으로 돌보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며, 민중적 분산경제는 그 밑바탕이다. 하지만 이런 다른 균형발전 전략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제주가 만약 막대한 자본투자를 고민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항보다는 바로 제주의 기반시설 구조 전체를 장기비상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일 것이다. 공항 말고도 우리가 건설해야 할 과제는 많다.

124.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2공항의 진정한 문제는 동료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민경제의 다른 경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기업가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건설축진 도민연대》는 그날 기자회견에서 철새 지키자고 지역균형을 포기해야 하나고 질문했다. 철새는 현재 인간의 무제한적인 이동과정에서 촉발된 현 지구의 위기를 가장 앞서 막고 있는 행위자다. 철새의 날개가 제주의 선택을 위한 시간을 열어준 것이다. 자신의 장소에서 철새를 추방하고 고층건물을 지으려는 제주의 장소판매경제가 바로 그 철새로 인해 밑바닥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장기비상시대를 만든 것이다. 철새가 추방되는 장소에선 인간도 추방된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기후위기와 환경위기로 인한 전환적 대응의 문제가 항공수요 예측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항공수요 예측은 마치 현재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외계인 전문가들이 수행한 예측처럼 보인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온실가스 발생효과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 만약 우리에게 날개가 필요하다면, 제주경제는 비행기가 아니라, 철

새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이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적응의 문제다.

125. 결국 문제는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철재의 이동’이라는 이 새로운 흐름, 이동, 연결 즉 제주의 새로운 모빌리티(new mobility)라는 관점에서 제주를 파악하고 동료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정체화의 가능성을 찾는데 있다.

2) 공동도시(common city)

126. 현행 제주특별자치특별법은 제2조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제자유도시’라는 구상은 도민사회 전반에서 이미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⁷³⁾ 이는 원희룡 도지사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평가이기도 하다.⁷⁴⁾ 또한 도민사회 내부에서 이를 대체하려는 다양한 전망이 제안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명’, ‘생태’와 ‘평화’는 그 전망의 중심에 있다. 이 전망은 중요한 것이지만, 현재 주요한 갈등이 경제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원리와 전면적으로 결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생태 및 평화와 함께 하는 다른 경제의 원리가 통합되어야 한다.

127. 이동의 자유의 확장: 제주의 자유는 제주에서 출발하지만 제주만을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현재 제주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일부 내용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에 등록되어 있는 최대의 사회학적 내용은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이동에 관해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갈등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이동의 의미에 관해 충분하게 토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제자유도시 규정이

73) 제주주민자치연대, 2017.08.29., 제주특별법 입법에 대한 의견 보도자료

74) 제민일보, 2019.05.29.,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성패 ‘시각차’”

제주도에 관한 최상위 법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동은 제주에 관한 문제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이동은 정주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기에, 제주특별법은 그래서 역으로 정주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또한 관광과 전쟁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연결시키는 것이 이동이고, 제주는 그와 같은 다양한 이동의 양식들이 중첩되는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엔 주권적 예외의 속성이 결합되어 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어떤 한계를 넘어 성장하는 이동에 대한 상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동과 자유가 연결되는 방식인데, 왜냐하면 이동의 양의 증가가 자유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상상은 이동에 대한 상상이고, 그 이동에 대한 우리의 욕망 혹은 반대로 자유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이 표현에 녹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128. 이동과 세계의 연결: 이동은 제주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담론처럼 보인다. 또한 단지 담론이 아니라 그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에 의해 구조화된 특정한 물리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1) 이러한 이동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파괴할 수는 없다. (2)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동에 관한 일반규칙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그 특정한 이동의 양식에 제주를 개방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그 이동을 개방하는 문제로 우리의 지평을 이동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제안한다. 비지배의 자유는 이때도 그 이동에 관한 일반 규칙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비지배의 자유를 사회구성의 원리로 하는 제주는 다른 시민에게서 지배받지 않고자 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이를 수용한다. 그 지배를 피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주는 주권적 예외의 장소로 자신을 개방할 수 있고, 이는 제주의 역사이기도 하다. 국제자유도시가 그 이동을 인클로저하여 특정 집단과 개인의 자원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이동으로서의 제주'라는 관점에서 제주의 이동을 모두의 공동자원체계(common)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의 전망은 제주는 다른 이들을 지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의 이동이 교차할 수 있는 공동도시(common city) 속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는 단지 상상이 아니라 실제 인류의 역사에서 경계가 중첩되는 변방의 도시들에

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였으며, 그 도시가 제공하는 자유가 그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나의 제안은 도시의 자유를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대안발전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 평화의 섬 규정에 관한 확장적 해석이기도 하다.

129. 제주특별법의 구성 내용이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 제주의 발전에 관한 규정 중 (1) 인류 공동의 섬으로서 제주의 역할에 대한 규명과 (2) 동료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원칙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할 때, 제주도민부터 세계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는 공동도시(common city)라는 구상은 현재 제주에 요구되는 인류적 책무와 제주의 문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도시’ 구상은 제주를 전지구적 자본축적의 순환에 기입하는 예외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러한 자유도시에는 주권의 예외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주권의 예외는 자본만이 전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주권의 경합과 전지구적 자본축적의 경쟁 속에서 (1) 주권과 자본을 넘어 (2) 전세계 시민들의 결속을 지향하는 도시의 새로운 전망도 고려 가능하다. 공동도시(common city) 구상은 이러한 전망을 표현한 것으로 (1) 인류 공동자원의 섬으로서 제주에 부과되는 책무를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2) 인류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주권 예외적 예시의 공간으로 제주를 선언하는 것이다.

3) 공동도시를 위한 2050 제주전환동맹의 구성

130. 공동도시 구상의 최종 단계는 제주를 동료시민의 공동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민주주의 기획에 있다. 이는 현재의 민주주의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청하며, 그 구체적인 모델에는 보다 많은 연구와 실험, 제도와 상식 및 일상생활의 변화가 요청되는 거대한 전환의 작업이다. 그러나 이런 전환 프로젝트를 우리가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강제당할 위험이 있다. 전환에는 그에 적합한 시간 지평이 필요하다. 그 시간지평은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 모두가 공동으로 직면한 기후관리의 마지노

선인 2050년이 적합한 시점으로 보인다. 2050 제주 전환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 전환의 높이, 넓이, 속도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인민과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정책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긴급하다.

131.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은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관련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술집단의 조언을 받는 과정이지만, 그 전문기술집단의 견해가 공공정책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로 최종 수용되곤 한다. 연구용역이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다.

132. 연구용역 이후의 정책 과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내용에 대한 동의의 문제로 민주주의가 협소화된다. 찬성과 반대는 갈등을 동반하고 이는 실제 해당 정책의 추진에도 엄청난 문제를 동반한다. 시민사회는 반대 과정에서 반대를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그 대안을 형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필수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동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견제의 문제를 포함한다. (1) 시민사회가 자신의 대안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 (2) 시민사회의 대안이 공적 판단에서 의무적으로 검토되어 (3) 정부의 연구용역과 시민사회의 시민연구가 경합적으로 도의회에서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의 미래를 여는 경합할 수 있는 지식,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지식이 필요하다. 제주의 모든 연구자가 지금 우리의 책무는 무엇인가에 관해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주·다문화와 제주(지역) 정체성¹⁾

이해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은 ‘낯선 곳’에서 나는 ‘한국인’이 되기 때문에 생긴 말일 것이다. 내가 늘 머물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이르면 내가 누구인지 새삼 깨닫게 되며, 더 정확하게는 내가 누구였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육지에서 왔어요?”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받는 이 질문으로 인해 내가 ‘육지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도(島)민의 입장에서 본 나는 당연히 육지인인데,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도를 행정단위인 제주도(道)로 인식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섬으로서의 제주도(島)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육지인’인 것이다.

홍콩 사람과 타이완 사람은 중국인을 대륙인(大陸人)이라고 부른다. 홍콩이나 타이완 지역의 입장에서 중국 본토인은 육지인이다. 화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한성화교 학교는 몇 년 전부터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많아지자 따로 대륙반(大陸班)을 만들었다. 한 번도 자신을 ‘대륙인’, 즉 ‘육지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 본토 청소년

1) 이 글은 김은실 외 8인(2018).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에 게재되었던 연구자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과 가족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와서야 타이완과의 관계 속에서 육지인이 되는 정체성을 경험한다. 문화인류학에서 ‘낮선 곳에서 나를 보는’ 관점, 즉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 때문이다.

‘육지인’과 ‘대륙인’의 인식 체계

그동안 여성주의는 기존의 지식이 ‘상황적 맥락’을 없앤 ‘편파적’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성주의 철학자 샌드라 하딩(Sandra G. Harding)은 ‘강한 객관성’을 중심과 주변의 위치성을 통해 논증한다.²⁾ 중심 위치에 있을 때에는 주변 위치에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변적 위치에 있을 때에는 주변과 중심을 바라볼 수 있기에 비로소 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고 덜 편파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늘 주변적인 위치에 존재해왔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왔더니 서울 중심성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륙인’, ‘육지인’은 그 단어 자체에 차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기보다 역사나 문화의 맥락에 따라 교차되는 우리의 인식체계를 보여주며, 이 인식체계는 때로는 유연하거나 때로는 강경하게 작동한다. 이런 국제적 이동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복합적인 갈래가 교차하는 맥락에 놓이게 되면서 다른 정체성, 지역적 문화가치, 성별문화가치에 직면하게 된다.

버나드 T. 오드니(Bernard T. Adeney)는 《낮선 덕: 다문화 시대의 윤리》라는 책에서 교차문화 속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시대의 윤리를 탐색한다.³⁾ 그는 책의 서두에서 이런 사례를 든다. 미국의 선교사가 아이티의 열악한 의

2) 샌드라 하딩, 조주현 옮김,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나남, 2009.

3) 버나드 T. 오드니, 구미정 옮김, 《낮선 덕: 다문화 시대의 윤리》, 아카넷, 2012.

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을 보냈는데 아이티 해관에 묶이게 되었다. 아이티 교회 측에서는 해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먹여야’ 풀릴 것이라고 ‘뇌물’을 요청해왔고, 미국 선교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사회에서 ‘뇌물’은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이는 기독교 윤리에도 위반되지만, 아이티에서는 ‘뇌물’이 소통 수단의 한 축으로 작동되고 있다. 미국과 아이티 사회 가치의 교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자본과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런 교차문화적 상황은 더욱 직접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변화한다. 오드니는 다른 문화권에 진입할 때 그 문화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문화권의 지식을 경청할 지혜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정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강조하는 교차문화 윤리의 두 가지 핵심은 바로 문화상대주의와 성별 감수성이다. 그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 머물면서 발견한 것은 우리 지식의 보편적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신앙조차 문화의 맥락 속에 구성된 상대적 진리이며, 거의 모든 사회에 성별 고정관념이 만연하다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오드니 본인도 밝혔듯, 그가 다른 지역에 진입하는 서구 남성 백인이라는 소위 ‘우월한’ 위치에서 교차문화적 윤리를 고민했다면, ‘낮은’ 위치의 이주자 입장, 또는 원 지역 주민 및 원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든 교차문화적 윤리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원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새로 진입한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물론 그 필요성이 이주한 당사자만큼 절박하거나 필요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기존의 다문화(multi-culture) 개념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강했다면 교차문화윤리(cross-cultural morality) 개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 교차문화의 맥락 속에서 작동되는 권력의 위계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윤리가 필요한지 성찰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그 영역을 이름, 지역, 젠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주(지역) 정체성과 연결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이주민은 어떻게 불리길 원하는가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어디에서 왔어요?”이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나’의 위치를 알게 된다. 경계를 넘어설 때만 ‘나’를 더 잘 알 기회가 주어지면서,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알게 되고, 나는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지 발견하게 된다. ‘낯선 만남’은 서로의 변화를 요청한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어느 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었는데,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받을까 봐 그랬다고 람자. 서류에 적힌 베트남 이름을 보면 자신의 출신지가 드러나 아이가 차별받을까 봐 걱정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름 석 자’라는 관용구를 쓸 만큼 세 글자 이름에 익숙하지만 199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이름이 석 자 이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열 자 이상인 문화권 사람들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쓸 것인가? 러시아나 몽골, 베트남 출신 사람들의 이름이 ‘이름 석 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울 만큼 긴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아버지의 성, 어머니의 성, 할머니의 중간 이름 등 가족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에 넣을 뿐만 아니라 표음글자여서 글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한국의 ‘이름 석 자’ 문화는 행정 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성을 빼고 최대 다섯 글자만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섯 글자 이상을 적기 어렵다. 금융 계좌 이체 때도 외국인 주민의 영문 이름은 여섯 번째 문자까지만 표시되어 상대방 확인이 어렵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식’ 이름으로 바꾼다. 실제 이름의 일부만 사용해서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로 통용하는 것이다. 서울시 1기 외국인 명예 부시장은 몽골 출신인데, 그녀의 이름 ‘온드라흐’는 늘 마지막 ‘흐’ 자가 빠진 채 ‘온드라’로 불리기 십상이다. ‘온드라흐’도 전체 이름이 아니고 최대로 줄여서 네 글자로 만든 것이다.

한국 사회도 열 자 이상이거나 한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외국 이름을 마주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고, 행정기관마다 나름의 기준을 만들지만 상

충하기 십상이다. 신분증에는 이름이 영문으로 표기되지만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반드시 한글 이름을 기재해야 하고, 은행 계좌는 영문 이름으로, 건강보험에는 때로는 한글 이름이, 때로는 영문 이름이 표기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이름으로 기재된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가 모두 필요하다. 인터넷에는 아이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영문 표기 이름의 실명 인증서는 자주 오류가 일어나고, 실명 인증에 필요한 신용카드도 프리랜서에게는 잘 발급되지 않는다.

이주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언설이 “노동자를 불렀더니 인간이 왔다.”라는 말이다. 노동 인력이 필요해서 유입시켰지만, 그들은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노동자’이지만 ‘인간’으로 불러다오. 그렇다면 한국적 맥락에서 “며느리를 불렀더니 여성이 왔다.”라는 말이 필요하다. 결혼 이민자의 80% 이상이 여성으로, 이들은 누구의 아내와 며느리 역할을 담당하리라는 기대를 받으면서 한국에 왔지만, 그들 역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주체성을 갖춘 ‘여성’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을 ‘여성’으로 불러줄 때 우리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여성으로서 서로의 접점을 갖게 되고 성찰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강요받았던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역할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함께 사용하거나 성 없이 이름만 사용하는 등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면, 다문화 가족의 여성들은 베트남 엄마, 필리핀 엄마, 중국 엄마로 불리기를 거부하면서 석 자 이상인 본인의 이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평소에는 줄인 이름을 부를지라도 한 번쯤은 전체 이름을 물어주길 원한다.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동포)은 중국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으로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란다. 고국이었던 한민족의 이름과 중국인으로서의 이름 모두를 존중받고 싶어한다. 출신 국적이 수식어가 아닌,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고유의 나의 ‘이름’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표기가 가능할 것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안내 자원봉사를 할 때면 언제나 중국 출신 이주민이 가장 많고, 그중 한국계 중국인 출신이 가장 많으며, 60대 이상인 분들도 많다. 외국인등록

중이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증을 신청하든, 체류 연장을 신청하든,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든 모두 통합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여권의 영문 이름을 적어야 하는 칸이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영문으로 좀 적어줄 수 있나요?”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종종 있다. 본인의 이름을 적어달라니. ‘아이구, 자기 이름도 모르면서 외국에 오다니?’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조선족 동포 어르신들이 이런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에서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식함’에 부끄러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평생 자신의 이름을 중국어와 한글로 표기하면서 살아왔는데, 한국(모국)에 와서 왜 한글 이름이 사라졌는지에 대해 억울함을 느낀다.

지난 2016년 7월 제1차 서울외국인주민대표자회에서는 주민대표들이 “외국인등록증에 영문과 한글을 동시 표기하자.”는 건의를 했다.⁴⁾ 그때 논의하면서 러시아에서도 외국인등록증에 영어와 러시아어를 병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4년 7월 서울시 외국인 명예 부시장으로 위촉되어 서울시외국인주민대표자회 추진위원회, 출범 후 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제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적이 있다.

원안은 외국인등록 시스템과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의 일원화였다. 구분은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으로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편입될 때 국민건강보험, 은행 업무, 운전면허증, 인터넷 인증서, 주민세 등 일상생활에서의 사회 통합을 체감할 수 있고, 국가로서도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제도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이름에 한국어 표기가 있으면 한국인이 부르기에도 수월하고, 외국인에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왔다는 지역성이 각인되며 삶의 의미가 더 부여된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분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외국인의 이름을 한국어가 아닌 영문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은 외부인의 타자성을 극도로 강조해버렸으며, 해외 동포들에게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삭제해버렸다. 교차문화 윤리는 이런 매우 구체적인 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외부인의 타자성을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는 ‘내국인 주민’으로 하여

4) “한글 이름 표기 제각각 … 통일해주세요”, <동아일보>, 2016. 07. 05., 18면 참조.

금 ‘외국인 주민’에 대해 자연스레 배타성을 갖도록 지지하며, 똑같이 외국인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무감을 갖지 못하도록 장벽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로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 타자성은 서로를 소외시킨다.

최근에 새롭게 감지되는 분위기는 본국의 이름을 발음 그대로 표기하면서 본인의 출신 국적을 굳이 숨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출범 등 외국인 주민의 특수성을 드러내야 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자신의 ‘이주민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흐름이다. 한국 사회 또한 다문화 감수성,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 서서히 향상되면서 행정 시스템 역시 그러한 흐름에 귀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름 표기에 대해 개선 방안을 연구·추진 중이라고 했고, 주민센터에서도 외국인 주민들의 민원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는 한국 지역사회의 풀뿌리 단체들이고 시민들이고 주민들이다.

이주민의 지역성과 주민 정체성

서울을 포함한 육지에서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 ‘중국 동포’, ‘북한 이탈 주민’, ‘중도입국 청소년’ 등 외국 출신 이주민에 대해 ‘이주민’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주체성과 지역 소속을 강조하여 ‘선주민’과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최근에는 이주민을 기존 시혜의 대상에서 호혜적 개발 주체로 보는 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육지에서 ‘이주민’은 국제 이주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주민’은 국내 이주민을 가리킨다. 외국인 주민은 ‘다문화 가족’으로 국한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 국내 이주민 관련 업무는, 2014년 정착주민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는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였다가 2017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이전되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 내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다. 제주도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국제

적, ‘국내적’ 이동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고, 각기 다른 중요한 상황적 맥락이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구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국내 이주민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2019년 현재까지 전체 인구 68만 여 명 가운데 20여 만 명이나 되어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국제 이주민은 2018년 기준 3만 여 명으로 제주 총 인구 대비 4.7퍼센트에 이르러, 이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되었다. 제주도 도민 구성 자체가 매우 큰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제주도에 어떤 정책을 세우려면 매우 다각적인 지식과 이해와 윤리가 필요하다. 제주 지역의 정책 연구에는 이런 인구 특징을 반영하는 원제주도민, 국내 이주민, 국제 이주민이라는 항목 구분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서울 이외의 지역이 뭉뚱그려 ‘지방’으로 불리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 지역의 고유한 이름 대신에 ‘지방’이라고 부르며 그곳의 대학을 ‘지잡대’라고 비하하는 신조어는 한국 사회의 ‘서울 중심/지역 주변’이라는 구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제주도에 갈 때는 ‘지방’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1970~1980년대만 해도 제주도는 ‘촌구석’이었다고 많은 육지인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제주도를 ‘관광의 도시’와 ‘힐링의 도시’라고 한다. 그런 육지인을 ‘육지 것들’이라고 부르는 제주도민들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2006년 2월 21일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도의 특수한 위치성이 법 제도로화되는 과정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노력이다.

외국인은 지난날 제주도의 ‘촌구석’을 잘 모른다. 제주도는 그들에게 국제자유도시로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으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한국의 국제도시, 아름다운 섬 도시’로 인식되며, 해외 유학생들에게는 유학 지역으로 선포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 내에서는 외부 자본 투자와 난개발로 인한 생태 파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에 살게 되면서 제주도의 ‘텃세’ 문화와 ‘권당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주도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다는 말과 경험에 대해 들었다.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친절’의 기준은 육지인의 기준이다.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떤 청년

자원봉사자가 해외에 봉사하러 갔는데 그렇게 많이 놀아주고 선물까지 주고 돌아올 때 그 아이들은 울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아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아이들은 오히려 봉사자들이 오면 놀아주느라 피곤했다. 그 아이들은 봉사자들이 매우 일시적이며 결코 자신들과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친절’할 수가 없다. 게다가 육지인이 바라는 ‘친절’에는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감정노동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국내 이주민이든 국제 이주민이든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려면 제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제주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4·3 사건과 강정마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제주도민들의 ‘바다 지식’과 ‘숲 지식’과 ‘바람 지식’을 경청하는 등 배움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해외 이주민이 2억 2,400만 명에 달한다.⁵⁾ 국제연합인구국(UN Population Division)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 이주민’은 “자신의 출생국이나 시민권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⁶⁾ 12개월 미만 해외 체류자를 고려하면 더 많은 수가 이주민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혼인, 일, 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이주는 출발 시점에 보통 몇 개월, 몇 년을 계획하고 떠난다는 점에서 임시성을 가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대에 걸쳐 정착 이주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임시’라는 생각은 이주민 당사자로 하여금 현 거주 지역사회와는 거리를 둔 삶의 방식을 고수하게 하고, 지역사회 원주민들은 그들을 언젠가 돌아갈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 주민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외부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임시성’ 인식과 생각은 이주민 당사자가 늘 ‘경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정착

5) “지난 15년간 41% 급증...최다 출발지는 아시아 목적지는 유럽”, <연합뉴스>, 2016. 01. 13. 참조.

6) 정정훈, <외국인 인권 기초 연구>,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Working Paper No. 2010-10》에서 재인용

이주민이 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인 ‘이름’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 역시 신선한 문화 충격과 다양한 가족 형태, 행정의 복잡함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고민을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지난 20여 년간 굵직한 법들이 제정되었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지원 사업이 체계화되었다. 매우 놀라운 속도의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관련 법 제정에 따라 2007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1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등을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다.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는 2019년에 ‘외국인주민 등 지원 조례’로 개정되면서,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전환하여 외국인을 ‘주민’으로서 포용하고자 하는 제주사회의 진전으로 읽힌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주민은 전입신고나 신상에 대한 변경 사항 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가 아니라 구청이나 출입국사무소에 가야 했다.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시스템인 것이다. 주민 센터의 입장에서 외국인 주민과 행정적으로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주민으로 볼 필요성이 없어진다. 지금은 외국인 주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외국인등록증 사실증명, 학위증명 발급 등이 모두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획기적인 변화다.

국적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인식하는 것,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것은 정착 이주민 당사자가 가져야 할 자세다. 지역사회 또한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외부인’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같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시대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제2항에는 ‘시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여 등록 체류자, 체류기간 도과자 모두를 포괄하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노동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정의로, 매우 진보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기본 조례 제3조 제2항에는 ‘도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도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민을 모두 포용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상징하는 ‘인권’에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식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주민들은 ‘서울시민’으로서 혹은 ‘제주도민’으로서 어떤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주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세금을 내고 있고,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의 경우 무임승차권 발급, 경기도는 2020년 지역 코로나 재난지원금 발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 제주도는 2020년 제2차 지역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시켰다.

오늘날 국제자유도시로 일컫는 제주에서 이런 ‘도민’의 정의를 출발로 주민(住民)의 위치와 소속을 확장시켜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통합의 지역사회 만들기가 아니겠는가.

이주 여성을 위한 성별 정의

타이완에서는 1990년대 초 중국 본토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을 ‘대륙 신부(da lu xin niang, 大陸新娘)’라고 불리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반대로 ‘대륙 신랑’이란 말은 없다. ‘대륙 신부’라는 말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지역의 젠더화된 국제 이주 방식을 보여 준다. 그 단어 자체로는 차별적이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단어가 ‘다문화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저소득층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낙인화된 것처럼, ‘대륙 신부’라는 단어는 타이완보다 못 사는 대륙에서 온 여성이라는 의미가 부착되어 차별 기

제로 작동했다. ‘결혼 이민자’라는 주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유입국 남성 중심의 단어인 ‘신부’로 불린다는 것부터가 차별이다.

100여 년 전 하와이에 이주 노동자로 간 조선 남성들이 고향의 여성을 ‘우편 신부’로 맞이했던 것처럼,⁷⁾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온 결혼 이민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여성인 것처럼, 여성에게 혼인은 주요한 국제 이주 방식이다. 남성처럼 국제 이주 노동자⁸⁾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원이 제도적·문화적으로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혼인을 통해 국제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혼인의 ‘거래성’은 더욱 부각되고, 가장 치열한 교차문화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혼인을 통한 국제 이주 방식은 매우 ‘아시아적’인 면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이주민의 경우 가족의 재결합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해왔다면, 특히 한국은 여성들이 혼인을 통한 이민자로 유입되는 비율이 높고, 그 여성을 중심으로 친인척들의 연쇄 이주가 일어난 특징을 보인다.

한국에 온 많은 이주 여성이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정치인 성비에 매우 놀라워한다. 2019년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5퍼센트(남성 73.5%)⁹⁾이고 베트남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3.7퍼센트(남성 77.2%)¹⁰⁾로 한국에 비해 10%p 높다. 놀라운 것은 제주도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62.9퍼센트¹¹⁾로 한국에서는 전국 최고일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베트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약간

7) 2019년 기준, 전국 국제결혼 중 외국인 여성이 74.8%를 차지하고, 외국인 남성이 25.2%를 차지함. 제주도는 국제결혼 중 외국인 여성이 88.4%, 외국인 남성이 11.6%를 차지하여 전국보다 더 ‘혼인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2019년 인구동향조사(혼인))

8) 2018년 기준, 전국 외국인 근로자 중 62.8%가 남성이고, 37.2%가 여성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근로자 중 74.6%가 남성이고, 26.4%가 여성(2018년 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으로 전국 평균보다 더 ‘노동이주의 남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9) 국가통계포털(2019).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1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6)

11) 국가통계포털(2019), 행정구역(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낮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최근 몇 년 간 성평등 상위 지역에 속하는 편이다.¹²⁾

그러나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에 발표한 ‘2018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8)’에 의하면 한국은 젠더 격차 지수가 전체 149개국 중 115위¹³⁾로, 한국 거주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베트남·태국·일본·캄보디아·몽골 등 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런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의 결혼이민자는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성 불평등 문화와 구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남녀 경제 평등이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96년 3퍼센트를 시작으로 2020년 17.29퍼센트¹⁴⁾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내각 여성 비율 30퍼센트 공약이 실현되면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각 여성 비율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한국의 국회의원)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인구 20만 명당 한 명의 인민대표를 배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2020년 중국 여성 인민대표는 전체 인민대표 2,975명 중 742명으로 24.9퍼센트¹⁵⁾를 차지했고, 소수민족은 438명으로 14.7퍼센트를 차지했다.¹⁶⁾ 여성 인민대표 비율이 남녀 동수에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소수민족 인민대표 비율은 중국의 전체 소수민족 비율(약 8퍼센트)보다 훨씬 높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에게 인구수와 상관없이 최소 한 명의 비례대표가 할당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튀바족(珞巴族)¹⁷⁾도 한 명의 인민대표가 할당된다. 따라서 교차문화 속에서 성 평등은 단순히 경제적·정치적·법적 지위로만 판단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교차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2)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13) “세계경제포럼 ‘한국 성평등 115위’... 정치경제 참여 격차 여전”, <SBS 뉴스>, 2018. 12. 18.

14)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국가통계포털(2020)

15)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국가통계포털(2020)

16) “중국 ‘전국 양회’ 개막에 전세계 이목 집중”. 웹데일리. 2018. 03. 05.

17) 중국 티베트 자치 구역에 사는 소수민족으로, 총 인구가 2,000여 명이다.

앞에서 언급한 오드니는 파키스탄이 여성의 자유와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는 가부장적 사회이며,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거리가 ‘여성이 보이지 않는 거리’임에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미국의 자유를 ‘만끽’하는 여성들에 비해 매우 불쌍할 정도였다. 그러나 어떤 인도 학자가 미국 여성들이 성매매나 포르노 같은 산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미국 여성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자 당황하면서 자신의 서구 중심 사고방식을 깨달았다고 한다.

타지로 이동한 여성은 종종 여성이란 이유로 성별 고정관념의 투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이 허잡을 쓰는 문화권에서 민소매 차림은 여성의 성적 타락과 침범 가능한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래도 오드니는 이주민(국내 이주민이든 국제 이주민이든)은 해당 지역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방인’이 갖고 있는 타자성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방인’이기에 현지의 성별 역할을 완벽하게 따를 필요가 없고, 위계화된 성 역할을 깨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예를 들어, 이주민 남성은 리더를 추천할 기회가 생기면 여성을 추천함으로써 그 지역의 리더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조금은 쉽게 깨뜨릴 수 있다. 또한 이주민 여성이라면 여성인 동시에 탈성별화된 ‘외부인’의 위치를 갖게 되므로 현지의 성별 고정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가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성별 고정관념 문화에 균열을 내는 일상적 운동이 될 수 있다.

이주민이 이런 성별 정의를 실현할 위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양측의 사회문화 제도에 대해 성찰하는 교차문화 윤리가 필요하고, 성별 정의 실현에 기여할 양측의 사회문화 자원을 지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 정의는 성별의 차이와 평등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복합적으로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차이와 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인종(민족)·국적·지역·계급 등 다양한 범주와의 교차에 대해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윌 킴리카(Will Kymlicka)는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그 개인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문화가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해석한다.¹⁸⁾ 즉 개인이라면 모두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주민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도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당위성을 강조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구체적인 교차적 문화윤리 실천이다.

어떤 한국인 출신 다문화 관련 전문가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에서 깜짝 놀란 경험을 했다. 분명 이국땅인데 길거리 간판들에는 한글이 맨 앞에, 그 뒤에 중국어가 표기되어 있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소수민족 정책으로 대학 시험 가산점 부과, 변경(邊境) 지역 보조금 지급, 자치 지역 내에서 소수민족 언어 교재 사용, 소수민족 언어 교육,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어 동시 표기를 법으로 제정했다. 따라서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지역에 가면 해당 소수민족 언어를 반드시 위(혹은 앞에)에 쓰고 중국어가 아래(혹은 뒤)에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는 250만여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국적은 227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86.9퍼센트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주계 지역 출신들이고,¹⁹⁾ 이들 나라 중에는 다민족 국가로서 소수민족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소수민족 정책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구축에 큰 시사점을 준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는 20세기 초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중국인이 세운 연변대학이 있다. 이 연변대학의 정문 오른쪽에는 한글 ‘연변대학’이, 왼쪽에는 한자 ‘延邊大學’이 표기되어 있다. 또한 연길시 거리의 간판들에도 한글을 우선 표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수민족의 언어를 우선 표기하고 해당 언어문화 전수를 장려하는 제도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매우 훌륭한 소통 방식이며,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차문화 윤리이기도 하다.

18) 윌 킴리카, 황민혁 옮김,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10.

19)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국가통계포털(2019),

제주도가 관광도시여서 식당이나 도로 간판에 한국어·영어·중국어 동시 표기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주시 연동의 주민센터에서도 3개 국어를 표기한 것을 보고 놀랐다. 관광객은 주민센터에 들릴 일이 없고, 2018년 기준, 제주도 장기 체류자(3개월 이상) 외국인 주민은 도민 전체 인구의 4.7퍼센트 정도로 한국 전체인 4퍼센트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주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동시 표기가 된 곳이 많다. 이전에는 한국어·영어·일본어 동시 표기가 많았다고 한다. 시장수요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런 다국어 표기는 다양성의 공존을 위한 교차문화적 윤리가 체현된 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시대의 윤리

‘다문화’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인종차별적인 언어에 저항하여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도, 한국 사회의 남녀노소에게 익숙한 단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한 ‘다문화 정책’ 덕분이다. 그러나 ‘다문화’가 ‘다문화 감수성’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결혼 이민 여성 및 그들의 가족 그리고 자녀를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어 우려된다. ‘다문화인’,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여성’, ‘우리 반에 다문화가 한 명 있어.’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일까?

다문화가 다양성의 문제로 논의되기보다 국제결혼 가족 중심으로 담론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다문화가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서울 사람과 제주도 사람이 만나 가족을 이루어도 ‘다문화 가족’이고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족을 이루어도 ‘다문화 가족’이다. 차이가 다양성으로 차별이 평등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다문화의 핵심인데,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비하 혹은 시혜의 뜻으로 특정 계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다문화’라는 단어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이름으로만 고착될 때 그것은 우리 사회에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하기 쉽다. 그래서 구체적인 교차문화적 맥락을 성찰하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윤리적 문제로 직면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문

제란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포용력을 말한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스포츠 스타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이 남다른 노력을 통해 지금의 성취를 얻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농구라는 스포츠를 소비해준 그 사회와 우리 모두이기에 부자들의 사회적 환원은 정의라고 말한다. 이주가 일상화되고 있는 오늘날 “오래 살 시민을 만들 것인지 잠시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정책을 펼지는 각 사회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²⁰⁾” 이주민이 그 지역사회 발전에 풍요로움과 정의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구체적인 교차문화 윤리가 필요하다.

20) 지식채널e, 〈모자이크〉 동영상 자막에서 인용

참고 문헌

저서 및 논문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6)

김은실·권김현영·김신현경·김애라·김주희·민가영·서정애·이해응·정희진.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휴머니스트. 2018.

버나드 T. 오드니, 구미정 옮김, 《낮선 덕: 다문화 시대의 윤리》, 아카넷, 2012.

샌드라 하딩, 조주현 옮김,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나남, 2009.

여성가족부,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월 김리카, 황민혁 옮김,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10.

정정훈, 〈외국인 인권 기초 연구〉,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Working Paper No. 2010-10》
에서 재인용

사이트

통계청·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언론보도

웹데일리. 2018.03.05. /SBS 뉴스. 2018.12.18. /연합뉴스, 2016. 01. 13. /동아일보, 2016. 07. 05.

〈토론문〉

장훈교, ‘제주개발체제와 지역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대항운동의 과제’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장훈교 박사의 발표문은 지금 제주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분석하고 있다. 제주가 안고 있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체제를 비판하면서 문제를 개발과 보존이라는 단순한 대립이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지역 간 불균등 발전 중 어느 하나로 환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서 정치·제도적 차원과 물질적·경제적 차원,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층위를 가로지르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토론자에게는 ‘가혹한’ 일이지만 이런 접근이 40쪽에 가까운 발표문로 귀결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훈교 박사가 이론적 자원으로 선택한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대항헤게모니 개념은 제주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검토에 이론적 깊이를 더해 주는 동시에 단순한 설명이 아닌 대안적 발전방향 모색까지 요구한다. 20-30분 분량의 발표에 맞추어진 메모는 도저히 답을 수 없는 내용이다.

2.

발표문의 포괄범위, 깊이, 그리고 분량은 요약을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쓴 요약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토론자가 맞닥뜨린 어려움이다. 토론자의 선택은 요약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일 수밖에 없었다.

1) 이 발표문의 목적은 ‘신개발체제’를 비판하고 대안적 발전의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개발체제를 이해(비판)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이 어떻게 개발의 정치경제학과 결합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헤게모니론에 따르면 제주개발체제가 위로부터의 압력을 통해 구조화되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 위로부터의 동원은 허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지역정체성’이다.

2) 그런데 지역정체성은 단순히 문화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다. 지역정체성은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지리-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문화적·역사적 경험이 없는 상징이나 이데올로기는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데 무력하다. 상징과 이데올로기는 지리적 조건 위에서 물질적인 토대를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경합공간 안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이다. 따라서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헤게모니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주의 문화적·역사적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자신의 정치·윤리적 프로젝트를 통해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은 문화적·역사적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 토대(발표문에서 경제능력과 등치시키고 있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문화적·역사적 경험은 섬이라는 지리적 운명이 부여하는 취약성과 내부 발전을 피할 수 없어 외부의 지원에의 의존성과 분리되기 어렵다. 제주는 척박한 섬이고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이야기된다. 개발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된다. 이런 조건에서 개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팽창해야 하는 압력이 생겨난다. 지리적 변형을 통한 지대(격차)추구가 개발을 추동하는 힘으로 자리 잡는다. 다른 한편으로 개발이 허용된 이후에도 과거 존재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의식, 그리고 무시 받고 있다는 감정 상태가 동원된다. 개발이 폭주하고 있는 현재의 불균등 발전은 과거의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의식, 무시를 변형된 형태로 유지시키고 이것은 개발체제를

형평성과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추동한다. 제주의 (신)개발체제의 축약판인 제2공항 문제에서 제2공항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격차를 용인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4) (신)개발체제 아래에서 개발은 제주사람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것’으로 구성된다. 균형발전과 장소판매/장소마케팅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제주도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표상된다. ‘제주’를 위해서 창조적 파괴는 불가피하다.

5) 신개발체제는 제주도민들이 장소판매에 끼어들어 부동산 수익을 향유하는 하위동맹을 형성한다. ‘지역개발의 민주화’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내주고 있는 바대로 개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되는 메커니즘이 출현한 것이다. 이것은 신개발체제의 물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장소판매를 통해 부동산 이익을 향유하는 제주도민들의 욕망은 개발을 통해서만 만족될 수 있고 이것은 계속되는 개발을 추동하는 물질적 힘으로 나타난다. 계속해서 팽창하는 개발을 공동의 이익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경제능력으로서의 헤게모니 전략의 물적 토대인 것이다.

6) 헤게모니 전략은 미래의 가치 상승을 이유로 현재의 개발을 정당화한다. 일종의 투기다. 그리고 미래의 가치 상승은 제주를 화폐의 이동이라는 흐름 안에서만 파악하도록 한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도박(카지노)을 통한 제주의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주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카지노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 콘텐츠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이러한 장소판매/장소마케팅이 ‘보편적인 것’으로 구성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모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추구되는 것이 장소판매를 안보화하는 것이다. 안보화를 통해 장소판매와 개발을 일부 전문가 집단과 관료 혹은 국가의 결정 문제로 환원시킨다. 개발은 민주화되었지만 대형 개발 사업은

탈민주화 된다.

8) 이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하위동맹을 넘어서까지 부동산사업가의 심성구조가 확장된다. 지역정체성이 갱신되고 새롭게 구성된다. 물질적 이해관계가 과거로부터 온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초과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묶여야 하는 것이다. 일종의 판타지가 생산되어야 했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제주 미래 비전을 연결해 자존, 개방, 상생하는 새로운 제주를 만들겠다는 ‘뉴제주운동’은 이러한 판타지를 구성하려는 시도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작동방식에 어울리고 이를 만들어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주시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뉴제주운동’은 신제주개발체제가 구축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원형을 보여주었다.

9) 그런데 제주의 개발체제에 대한 저항담론은 헤게모니적이지 못했다. 특히 ‘제주다움’을 옹호하는 대항담론 혹은 대항 지역정체성 전략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제주다움’은 고유하고 원초적인 장소성을 강조하고, 이 장소성을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간주하며 장소마케팅은 사라져가고 있는 장소성을 찾아내 발굴하고 복원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질주의적 장소관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관광의 시선’에 의해 지배된다. 관광의 시선은 제주를 자연에 고정시키려는 시선으로 변형된다. 불균등발전의 구조는 관광의 시선을 욕망하면서 그 관광의 시선에 내재된 대상화를 개발의 압력으로 변형시킨다. 결국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제주다움’을 관광의 토대로 본다. 과잉개발로 파괴되는 제주다움을 지켜야 관광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촌의 시선에 제주를 고정시키는 것이며 ‘제주’라는 지리적 정체성과 자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외부’와 대립하는 ‘내부’를 호명하게 되는 위험에 처한다.

10) 제주다움의 담론을 넘어서는 대안적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제주다움’ 이후의 제주비판사회학의 지역정체성 이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토론자는 위에서 요약한 장훈교 박사의 주장에 대해 거의 대부분 동의한다. 특히 제주의 현실을 분석하는 대목에서는 깊은 이론적 통찰과 함께 전달된 비판적 분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특히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1) 장훈교 박사는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 또한 지역정체성 정치를 관통하지 않고서는 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정체성의 정치공간을 강조한다. 이것은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가 갖추어야 할 정치-윤리적 차원의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주다움’ 담론을 비판할 때 대항헤게모니 구성의 정치-윤리적 자원이 되어야 하는 지역정체성관조적 분석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그람시, 그리고 에르네스토 우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샹탈 무페(Chantal Mouffe)가 주장하는 헤게모니적 실천은 인민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 다른 맥락이지만 에드워드 톰슨(Edward P. Thompson)이 대항헤게모니의 단초를 민속 문화(folk culture) 또는 민중문화(popular culture) 속에서 찾으려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무페가 최근의 출간된 책에서 ‘좌파 포퓰리즘’을 옹호한 것도 그렇다. 인민이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방식과 동떨어진 헤게모니는 구성될 수 없다. 그것이 ‘제주다움’이라고 표현된 ‘어떤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장훈교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 ‘제주다움’이 폐쇄적인 내부의 시선, 결국은 개발을 옹호하는 관광의 시선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장훈교 박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헤게모니적 실천, 대항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실천이 아닐까? ‘제주다움’은 제주 사람들의 기억, 체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일 수 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항헤게모니를 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은 이것을 우회할 수 없다.

2) 제주는 한반도의 주변이었기에 항상 중앙정부, 그리고 육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제주적인 것을 방어하려는 수세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적 위치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주변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외되었지만 경제의 시선은 획일적인 개발주의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심과 완전히 섞일 수 없는 주변성은 잡종성(hybridity)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경계 또는 주변이 갖고 있는 ‘타자성’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대항헤게모니의 계기로서 불러내어진 ‘제주다움’은 억압된 ‘타자’의 시선에서 과거의 역사와 현실을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폐쇄적으로 ‘우리’를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억압되어 있던 경계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헤게모니적 실천이 아닌가?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담론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닫혀있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관계와 실천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적으로만 고정된 정체성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고정된 정체성은 그것을 묶어줄 상징을 필요로 한다. 경계의 시선으로부터 제주를 뒤집어보고, 밖으로부터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훈교 박사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강조하다. 장박사의 글쓰기 자체가 그러한 개입이다. 그리고 헤게모니적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삶과 일상에 주목하는 대안정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현실, 즉 구체적 삶/일상과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 거기에 너무 가까이 가면 제주개발체제의 자기장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다소 규범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 구체적 삶과 일상에서 생겨나는 사람들의 체험, 몸과 집단적 무의식이 개발체제의 담론, 부동산투자자의 심성과 엮나가서 발생하는 마찰이나 진동, 순간적인 엮나감을 놓치게 한다. 대항헤게모니는 바로 그런 엮나감의 계기들을 저항하는 자들의 보편성으로 상징화해서 등가의 연쇄, 즉 연대를 구성할 때에 출현하는 것이 아닐까?

장훈교 박사는 일관되게 이러한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실천의 장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한다. 현실과 이상, 지배적 질서가 용인하는 것과 그러한 질서를 넘어서는 상상 사이에서 진동할 수밖에 없는 좌파적 비판이 공유하고 있는 흔들림이다. 이러한 흔들림을 극복하는 길은 진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현실의 어긋남과 ‘마주치는’ 실천일 수밖에 없다.

〈토론문〉

이해응, ‘이주·다문화와 제주(지역) 정체성’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1.

인류학자들은 다른 문화를 연구해왔는데 다른 문화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른 문화를 통해 자기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자신이 자기 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기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기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다른 문화를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류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접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취해 실천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이 발표문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인구구성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주민들과 함께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사회성을 공유하면서 지역민으로서의 생활해가고 지역정체성과 주민정체성을 정립해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 발표문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다문화정책을 전개해오면서 야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발표자의 자기서사 형식으로 풀어내면서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기합니다. 셋째, 이 발표문은 이주의 ‘성별 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문화감수성과 함께 인권감수성, 젠더감수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데 일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발표문의 논지에 따라 몇 가지 논의를 추가하고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먼저 어느 사회에서나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갖기 마련인데, 이는 동일한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며 비교적 동질적인 삶의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주거지 이동만 보더라도 이제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온 장소인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더욱이 전 지구화를 통한 경제권의 상호통합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증가와 이를 통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외 이동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정체성은 여전히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확고하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지역정체성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가는 것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주만 보더라도 이주배경이나 동기도 다양한 국내외 다양한 출신배경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는 지역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은 더 이상 고정되고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며 어떤 지역을 만들어갈 것인가와 주민들이 어떤 지역이길 원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와 접합되어 상황에 따라서 응집되고 분산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제주에서는 제주 이외의 한반도 내 모든 지역을 ‘육지’라고 부르고, 구별하는 의식이 남아있는데, 변화되는 지역내외의 여건 하에서 제주의 이주 역사와 인구구성의 다양성이 지역의 내재적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과거의 지역사회는 장소의 공유와 과거에 대한 기억의 공유를 통해 자신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유지해왔는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집단이 공존하면서 주민들은 출신 지역의 다양성 혹은 거주기간의 다양성으로 인해 또는 민족·종족이나

국적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수의 지역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지역의 과거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 못할 수 있고, 과거와 같이 공유된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지역정체성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분명한 점은 지역의 현실적인 쟁점들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따라 통합적인 지역정체성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정체성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지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따라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지역정체성의 구체적인 내용도 변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3.

다음으로 이 발표문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한국의 다문화주의·다문화정책 결과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하였고, ‘교차문화’, ‘교차문화윤리’를 그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한국사회가 채택한 ‘다문화’, ‘다문화성’, ‘다문화주의’가 다양성의 문제로 논의되기보다 국제결혼가족 중심으로 담론화 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발표자의 문제제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 발표문에서 사용한 ‘교차문화적 윤리(cross-cultural morality)’, ‘교차문화’, ‘교차(적) 문화윤리’라는 표현과 관련해, 번역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지만 현재 학계나 교육계 등에서는 ‘교차문화적 윤리’, ‘교차문화’, ‘교차(적) 문화윤리’ 대신에 ‘상호문화성’, ‘상호문화’, ‘상호문화주의’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오늘날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는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국민과는 다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앵글로색슨의 다문화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다문화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유럽의 상호문화모형입니다.

대체로 다문화주의는 소속집단에 우선권 부여, 집단의 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보다 우선하며 민족적, 종교적, 이민자적, 성적 차이점은 인정되나 차이점을 합하고 집단을 병렬로 위치시켜 모든 것을 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배제의 위험이 커지고, 차이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집단과 개인의 동거와 공존 구조에 멈춥니다. 이에 반해 상호문화 관점에

서 상호문화는 주체 자신이 만들어낸 문화에 그리고 주체가 개발한 전략에 관심 갖기 때문에 개인은 자기가 속한 문화에 점점 덜 구속을 받게 되며, 따라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화의 폭은 상당히 넓어지게 되어 다른 문화로부터 행동모형, 습관, 가치를 차용할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어쨌든 다문화주의가 사회구성에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병렬적 ‘공존’에 관심을 두는 반면, 상호문화(이 발표문의 표현으로는 ‘교차문화’)·상호문화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 간 상호 ‘교류’와 만남, 서로 간에 존재하는 경계와 장애물의 극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가 견지해온 다문화주의·다문화정책은 실패 혹은 한계에 처했으며 그 대안의 하나로 서유럽의 상호문화성·상호문화주의·상호문화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안이 될 수 있고 상호문화·상호문화정책이 다문화주의·다문화정책이 간과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지만 두 입장 모두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호문화주의·상호문화정책에서 강조하는 여러 문화가의 단순한 공존을 넘어 문화 간의 대화와 소통의 확장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한국사회 구조에서 ‘다름의 인정과 공존’에 초점을 둔 다문화주의·다문화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에도 실패했는데, 그 대안으로 상호문화주의·상호문화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그 대안으로 추진된다면 어떠한 방식이어야 할까요? ‘상호문화’·‘상호문화주의’의 초점은 ‘상호 열린 대화와 소통’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국사회 혹은 제주사회에서 정책으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발표자가 평소 혹은 정책연구를 해오시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4.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상호문화주의를 회원국들에 확산시키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행하도록 상호문화정책, 특히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이 제안한 문제의식과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을 비전으로 설정한 제주가 선도적으로 ‘상호문화도시’·‘상호문화도시전략’을 실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는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정,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 고유의 특성을 살린 동아시아 관광, 물류, 금융의 중심도시,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증가추이와 유형별 분화현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점차 외국인의 정주화현상이 분명해지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제주가 이들을 지역발전전략 구현의 한 주체로 통합해가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문화도시’의 개념과 정책은 국제이주기구(IOM) 2011년 연차보고서에 반영된 바 있고, 서유럽의 상호문화도시정책을 전개하는 도시의 프로그램은 교육, 공적 공간, 사회서비스, 사업 및 경제, 언어 지원, 거버넌스 등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는데, 이 분야들 중 한 두 개 분야만이라도 제주에서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호문화도시’는 도시의 통합과 혁신을 위하여 자산으로서 다양성에 관한 전략적 비전을 함양한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이 어느 정도 혁신, 창조성, 기업정신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이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와 자원으로써 긍정적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제주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제주라는 로컬은 육지부, 동아시아, 세계를 포괄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지역성과 세계성 간의 접합이며, 다문화시대에 제주의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발표문에서는 “이주민이 그 지역사회 발전에 풍요로움과 정의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구체적인 ‘상호문화주의’(이 발표문의 표현은 ‘교차문화윤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다문화감수성에 젠더감수성을 접목하고 성별특성을 고려해 다문화교육 혹은 상호문화교육을 한다고 할 때 어떠한 요소나 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관련 연구를 해

은 발표자의 경험 등에 비추어 제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별특성 외에 연령, 계층, 인종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기존의 교육에 어떻게 녹아내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제2부 ‘사회변동과 제주 정체성’ 발표에 따른 토론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4회 제주학대회 2부는 ‘제주정체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사회변동의 한 현상인 ‘개발’과 ‘이주’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제주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이 자리를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제주어를 전공하고 있는데 제주어의 개념을 전통방언학의 개념에서 제주에서 살고 있는 80대 이상의 노년층 언어에만 한정할 것인지, 현재를 살고 있는 제주인의 모든 언어로 확장해야 하는지 늘 고민입니다. 오늘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끊임없이 드는 생각도 역시 정체성이란 원형을 고수하는 것일까, 변화를 수용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형을 고집하자니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변화를 수용하자니 원형이 훼손될 것 같고 적절한 타협점은 어디일지 말입니다. 두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앞의 두 분이 날카롭게 해 주셨으니 저는 비전공자로서 궁금했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주개발체제와 지역 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대항운동의 과제〉라는 발표문을 처음 받았을 때 많은 양에 한 번 놀랐고, 어렵고 낯선 용어들로 구성된 문장을 보며 두 번 놀랐습니다. 40쪽에 가까운 많은 양의 장훈교 선생님의 발표문은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도무지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 제 자신의 무지를 탓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토론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여러 번 읽었지만 아직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아마도 토론이기 보다는 질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읽으면서 제4회 제주학대회의 주제와 맞아 떨어지는 ‘지역정체성’이라는 개념과 ‘제주다움’이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글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있는 제주다움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제주다움은 만들어 가야한다.”, “제주다움이 곧 세계적 보편적 문화”, “제주민의 삶이 하나의 문화풍경으로 드러나도록 제주를 개발하는 방식”,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제주다움이다, 자연 상태를 제주다움이 원형으로 본다.”, “제주다움의 본질은 제주를 만들어낸 바탕이며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하지 않은 지역발전은 성공하기 어렵다.” 등 많은 ‘제주다움’이 등장합니다. 개발을 논하는 자도 보존을 하자도 ‘제주다움’을 내세웁니다. 이 글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발표자님의 생각하는 ‘제주다움’은 무엇인가요?

또한 제주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주도적인 것과 변화하는 제주 정체성, 즉 원형과 변화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면서 결국 이 둘은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주정체성이라는 것과 ‘제주다움’은 같은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게 읽히는데 이 두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다문화와 제주 정체성〉이라는 이해웅 선생님의 글은 교차문화윤리적 측면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주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며 이룸, 지역, 젠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주정체성과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주에는 원제주도민, 국내 이주민, 국제 이주민 세 가지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주민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설명하면서 “노동자를 불렀더니 인간이 왔다”, “며느리를 불렀더니 여성이 왔다.”고 이주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이주민이 지역 발전에 풍요로움과 정의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서로의 구체적인 교차문화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이상적이고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제주의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주민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주민들의 경우는 제주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기 보다는 영어로 말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주민도 제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잠깐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관계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친절’할 수 없습니다. 교차문화적 윤리가 재현된 좋은 사례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이 동시에 표시되는 다국어 표기를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친절’이 정말 이주민과 공존하고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맞을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의 눈높이에 일방적으로 맞춰 주는 것이 교차문화인지요? 이러한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다면 그들의 언어로만 소통하려고 고집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교차문화 윤리를 갖고 접근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들을 알고 계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인 ‘제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린다면 이주민과 공유할 제주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large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ashed lines, intended for text entry or drawing.





A large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ashed lines, intended for text or graphics.



제주학연구센터 제4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

발행일 2020년 10월 15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www.jeu.go.kr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www.jst.re.kr
디자인·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

ISBN 979-11-90482-28-8 93300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2020

비매품